연구보고서 10-13

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정형곤 · 이홍식 · 방호경 · 나승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10-13

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정형곤 · 이홍식 · 방호경 · 나승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 언

해외직접투자는 한 나라의 기업이 해외에서 현지 기업이나 자산을 직접 통제하고 운영하는 해외진출방식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직접투자가 투자국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국 모두에 이익을 준다는 사실이 검증되어 왔습니다. 즉 투자국 입장에서 볼 때 해외직접투자는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생산방법의 사용 및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며, 투자유치국 입장에서는 선진기술과 경영노하우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해외직접투자는 미국, 서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중국 등 개발도상국 또한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1980년대 이후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저임금 노동력 확보, 무역장벽 철폐나 수출활로 개척, 선진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시작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 내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 혹은 협력 측면에서의 역내 변화요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우리의 투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중·일 3국간 상호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EU나 NAFTA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최근의 변화요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향후 투자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한·중·일 3국의 경우 이미 기능적인 통합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등 제도적 통합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역내 시장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역내 투자 비중은 단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미국 등 역외 주요 경제권의 변화에 따른 영향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파악(전반적인 동향, 역내 국가간 직접투자 특징 및 사례 분석)과 함께 관련 정부정책을 파악하고 역내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상호간 협력 혹은 경쟁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3국간 해외직접투자의 특징과 함께 국내외 평가에 따른 3국의 투자환경 및 장애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상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을 제도적 개선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판단하고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이 상호간 투자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방안을 비롯하여 상호 투자증진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와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한·중·일 3국의 해외투자정책이 서로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호 비교한다는 점에서 최근 한·중·일 3국 FTA 관련 산·관·학 공동연구가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보고서를 직접 집필해주신 연구자 여러분은 물론이고 집필과정에서 보고서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협조를 해주신 학계, 정부,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부정책 담당자에게는 한·중·일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일반인들에게도 한·중·일 상호 투자의 현황 및 중요성, 그리고 향후 투자 관련 협력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2월

원장 **채 욱**

국문요약

초국적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 국경간 M&A 및 전략적 제휴 등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역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경쟁 혹은 협력 측면에서 현 시점의 국가간 상황과 변화요인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일 3국 상호간 투자는 3국간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산단위에서의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고, 상호간에 외교·안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3국간 상호 투자는 더욱 증진되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호간의 투자는 시장확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FDI 유치를 위한 국내요인의 개선방안(규제완화 및 정부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한·중·일 3국의 비교 및 상호간 투자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상호 투자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현황, 특히 3국 상호간 직접투자의 추이를 살펴보고, 상호 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내 상호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

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이 해외직접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둘째, 중국과 일본이 M&A 형태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여전히 그린필드형 해외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은 공통적으로 북미지역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한국은 특히 중국의 비중이 높고, 중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서유럽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해외직접투자의 성장추세 측면에서는 다소 늦게 시작한 중국이 한국, 일본에 비해 크게 앞서나가고 있다. 또한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형태의 역내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주요 특성 중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역내 투자가 미흡한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투자환경 비교 및 상호 투자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간 투자환경의 비교를 위해 OECD FDI 규제지수, 세계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 평가결과를 활용하였는데,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한·중·일 3국은 공통적으로 여타 국가에 비해 외국인지분 제한에 대한 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의 투자 관련 규제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 국제기구의 평가, 제도 분석 등을 통해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분야 및 투자방법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창업, 건축 관련 인허가, 고용 및 해고, 세금납부, 투자자보호 등 전반적인 사업환경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 상당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투자 관련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

우 일반적인 기업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까다로운 유통구조 및 상관습 등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장애요인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전체 한·중·일 3국간 투자 관련 장애요인은 크게 ① 외국인투자의 형태 및 규모 등에 대한 직접적 규제, ② 국가별 상관습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간접적 규제, ③ 국내 경영환경의 안정성 미흡에 따른 투자기피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중 두 번째 요인은 사실상 3국간 합의 등 어떤 제도적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의 경우 3국간 합의에 의거하여 어느 정도는 통제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이다. 따라서 여타 정책과제와 함께 한·중·일 투자협정을 중요한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이 여타 OECD 국가들과 같이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형태로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투자협정 체결 자체만으로는 투자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협정은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법제도의 미비성과 투자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투자협정 체결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촉발되는 투자환경의 개선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투자 장애요인을 살펴본 결과 투자협정 등 제도화된 요인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투자협정 체결은 중국이 유지하고 있는 높은 제도적 투자 규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의 투자 장애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관습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비공식적 규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우 현재 협정의 범위 및 수준에 대한 3국의 입장차

이가 크며, 특히 중국의 경우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체결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우 한·일 투자협정의 구성안을 기본으로 자유화협정의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기체결한 FTA 상품분야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자유화를 시행하는 조기수확(EHP) 프로그램을 3국간 투자협정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3국 차원에서 업종별 특유의 상관행 및 규제 현황 등을 제공해주는 정보교환체계와 네트워크의 공동조성이다. 한·중·일 각 국가별 투자 장애요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별 고유한 상관행은 역내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투자협정 등 제도적인 틀에서 해결되기 어려우며, 3국간 투자 및 기업진출이 활발해지고, 상호 투자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야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3국 투자 관련 법령 및 규제 관련 정보 제공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3국간 문의소(inquiry point)와 투자 관련 법제, 투자 실패 및 성공 사례 등의 자료를 축적하고 질문·응답의 통로가 되는 상설창고(depository)를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3국간 협력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3국 공히 자국 내 진출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제안사항을 수렴 및 조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역내 투자 활성화가 단순한 투자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격차 축소, 부품·소재의 공용화 및 표준화 등 기타 산업협력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물론 한·중·일 3국간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3국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즉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통한 역내 교류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한편, 중국과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개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시행 및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투자협정 표준모델 확립, 기투자협정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AEO 상호 인정 체결 등 중국 및 일본과의 통관협력 강화, 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한 투자 관련 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 FTA 추진 활성화, 한·중·일 투자협정에 대한 홍보, M&A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기능 강화,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차 례

서언 ····· 5

국문요약 ····· 7

제1장 서론 ····· 19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0
2. 기존 연구결과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3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 29

제2장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 33
1.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 34
가. 한국 ····· 34
나. 중국 ····· 47
다. 일본 ····· 62
2.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 ····· 75
가. 한국의 역내 투자 ····· 75
나. 중국의 역내 투자 ····· 85
다. 일본의 역내 투자 ····· 96
3. 소결 ····· 105
가.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비교 ····· 105
나. 시사점 및 문제 제기 ····· 110

제3장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환경 분석 ····· 113
1. 한·중·일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비교 ····· 114
가. OECD FDI 규제지수 ····· 114
나. 세계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환경 평가 ····· 117
다. 세계은행의 비즈니스환경 평가 ····· 120
2. 한·중·일 3국간 투자 장애요인 분석 ····· 122
가. 한국·중국 간 ····· 122
나. 한국·일본 간 ····· 132
3. 소결 ····· 139

제4장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 143
1. 투자협정의 정의와 주요 특성 ····· 144
2. 투자협정의 투자유입효과 분석 ····· 147
가. 투자환경과 직접투자 ····· 147
나. 투자협정과 직접투자 ····· 153
3. 한·중·일 투자협정에의 응용 ····· 158
4. 소결: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6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63
1.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 164
2. 역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 167
가. 한·중·일 공동의 과제 ····· 167
나. 한국의 과제 ····· 184

참고문헌 ····· 195

Executive Summary ····· 203

표 차례

표 2-1. 한국의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 40
표 2-2. 한국의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 42
표 2-3. 한국의 해외 M&A 인수금액의 시기별·국가별 비중 ····· 43
표 2-4. M&A형 해외직접투자 추이 ····· 46
표 2-5. 중국기업의 Outbound M&A 추진사유 ····· 52
표 2-6. 중국의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 57
표 2-7. 중국의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 58
표 2-8. 중국의 해외 M&A 인수금액의 시기별·국가별 비중 ····· 60
표 2-9. 일본 해외투자의 목적별 분류 ····· 66
표 2-10. 일본의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 69
표 2-11. 일본의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 70
표 2-12. 일본의 해외 M&A 인수금액의 시기별·국가별 비중 ····· 71
표 2-13.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주요 분야별 직접투자 ····· 77
표 2-14. 한국의 설립형태별 대중국 투자 추이 ····· 78
표 2-15. 한국의 최근 대중국 M&A 인수실적 추이 ····· 80
표 2-16. 한국의 산업별 대일본 직접투자 추이 ····· 82
표 2-17. 한국의 설립형태별 대일본 투자 추이 ····· 83
표 2-18. 한국의 최근 대일본 M&A 인수실적 추이 ····· 84
표 2-19. 일본 내 외자기업의 운영상 어려움 ····· 85
표 2-20.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 ····· 86
표 2-21. 중국의 최근 대한국 M&A 인수실적 추이 ····· 88
표 2-22. 중국의 산업별 대한국 직접투자(2009년 기준) ····· 89

표 2-23. 중국정부의 대한국 투자 및 인수 장려업종 ····· 91
표 2-24. 중국의 대일본 직접투자 추이 ····· 92
표 2-25. 중국의 최근 대일본 M&A 인수실적 추이 ····· 93
표 2-26. 중국기업의 일본기업 인수합병 주요 사례 ····· 94
표 2-27. 중국정부의 대일본 투자 및 인수 장려업종 ····· 95
표 2-28. 일본의 산업별 대한국 직접투자(2009년 기준) ····· 97
표 2-29. 일본기업의 대한국 투자의 주요 목적 ····· 100
표 2-30. 일본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주요 목적 ····· 104
표 2-31. 한·중·일 해외직접투자 특성의 비교 ····· 107
표 2-32. 한·중·일 3국간 직접투자 현황 ····· 108
표 2-33.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 특성의 비교 ····· 109
표 2-34. 기업 설문에서 나타난 한·중·일 3국의 상호 투자 시 주요 장애요인 ··· 111
표 3-1. FDI 규제지수 평가요소별 가중치(2010년 기준) ····· 115
표 3-2. OECD FDI 규제지수의 한·중·일 비교(2010년 기준) ····· 116
표 3-3. OECD FDI 규제지수의 한·중·일 비교(2010년 기준) ····· 116
표 3-4. 세계은행 외국인직접투자환경 평가기준 ····· 118
표 3-5. 세계은행 외국인직접투자환경 평가결과 한·중·일 비교 ····· 118
표 3-6. 세계은행 Doing Business의 주요 평가요소 ····· 120
표 3-7. 세계은행 Doing Business의 한·중·일 평가결과(2010년 기준) ····· 121
표 3-8. 중국이 비교열위에 있는 비즈니스 경쟁력 지표의 경쟁국 비교 ····· 124
표 3-9. OECD 및 일본의 비제조업부문에 대한 시장규제 평가 ····· 135
표 3-10. 한국이 제기한 일본의 주요 비관세장벽 ····· 136
표 3-11. 서울재팬클럽(SJC)의 한국 비즈니스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 138
표 3-12. 한·중·일 3국간 상호 투자의 장애요인 ····· 140
표 4-1. 사용변수 설명 ····· 151
표 4-2. 분석결과 ·····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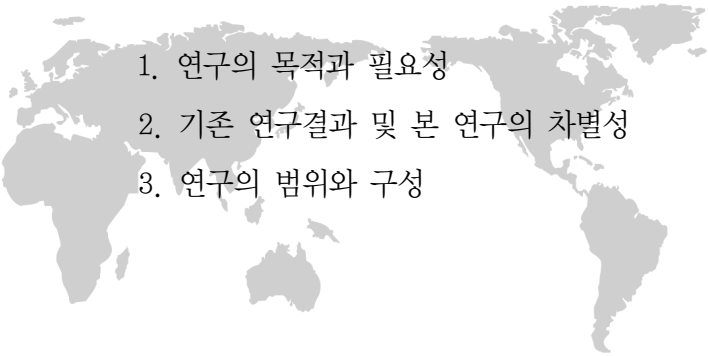
표 4-3. 투자협정과 투자환경 ····· 158
표 4-4. 한·중·일 투자 현황 ····· 159
표 4-5.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 시 한국으로의 FDI 총유입규모 ····· 160
표 5-1. 한·중·일 양자간 BIT와 미국 BIT 협정문의 비교 ····· 172

그림 차례

그림 2-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및 GDP 대비 비중 ····· 37
그림 2-2. 한국기업의 진출 목적별 현황(2008년 기준) ····· 37
그림 2-3. 한국이 인수한 국경간 M&A 현황 ····· 38
그림 2-4. 한국의 지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2005~09년 누적) ····· 41
그림 2-5. 한국의 산업별 해외투자비중 추이 ····· 45
그림 2-6. 중국의 Outward FDI 추이(UNCTAD 집계) ····· 48
그림 2-7.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및 GDP 대비 비중 ····· 49
그림 2-8. 중국이 인수한 국경간 M&A 현황 ····· 53
그림 2-9. 중국의 투자주체별 해외직접투자비중(2008년 말 스톡 기준) ····· 54
그림 2-10. 중국의 산업별 해외투자비중 추이 ····· 62
그림 2-11.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및 GDP 대비 비중 ····· 65
그림 2-12. 일본기업의 국경간 M&A 현황 ····· 67
그림 2-13. 일본기업의 M&A 동기 ····· 67
그림 2-14. 일본의 국경간 M&A 주요 대상지역 ····· 70
그림 2-15. 일본의 제조업 및 비제조업 해외투자비중 추이 ····· 72
그림 2-16. 일본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비중 ····· 73
그림 2-17. 일본의 국경간 M&A 주요 산업별 투자 ····· 74
그림 2-18.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 76
그림 2-19. 한국의 대일본 직접투자 추이 ····· 81
그림 2-20.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입에서의 중국 비중 ····· 87
그림 2-21.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 ····· 96
그림 2-22.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 101

그림 2-23.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 103
그림 2-24. 한·중·일 해외직접투자 시점 비교 ····· 106
그림 3-1. World Bank의 2010 비즈니스 수월성(Doing Business)의 분야별 평가(순위): 중국 ····· 123
그림 3-2.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시 주요 애로요인 ····· 125
그림 3-3. 국내 경영환경 관련 개선분야 ····· 131
그림 3-4. World Bank의 2010 비즈니스 수월성(Doing Business)의 분야별 평가(순위): 일본 ····· 134
그림 5-1. 한·중·일 3국의 역내 투자 및 역내 무역 비중 비교 ····· 165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기존 연구결과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초국적기업 증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 국경간 M&A 및 전략적 제휴 등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직접투자가 투자국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국 모두에 이익을 준다는 사실이 검증되어왔다. 일례로 World Bank(1993)는 FDI가 기술이전, 경영노하우, 수출시장 접근 등에서 이익을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생산방법의 사용 및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며, 투자유치국 입장에서는 선진기술과 경영노하우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물론 최근 들어서는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도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 UNCTAD[1)]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outward FDI 비중은 2000년 11.1%에서 2009년 20.1%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래 소위 트라이어드(Triad)로 불리는 미국, 서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활발히 진행해왔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기업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목적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개방초기 국내 경제성장의 동력인 자본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최

1) UNTAD FDI-STAT DB(2010).

근에는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와 더불어 중국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해외투자 진출 지원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1980년대 이후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저임금 노동력 확보, 무역장벽 철폐나 수출활로 개척, 선진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시작하여 특히 2005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2] 기업차원의 변화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을 실시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또한 병행되었다.

이렇게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 내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 혹은 협력 측면에서의 역내 변화요인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중·일 3국간의 상호 투자비중은 3국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약 6%에 불과하여 EU 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3] 20%가 넘는 한·중·일 3국의 교역비중을 고려해볼 때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4] 이렇게 역내 투자비중이 낮은 것은 단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등 역외 주요 경제권의 변화에 따른 영향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FTA 등 지역통합단계로 나아가기 이전 중간단계로서 한·중·일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역내 기능적 통합의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일 3국의 협력구조는 여전히 수직적 분업을 위한 교역 및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환경 등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상존해

2) 한국은 1968년부터 해외직접투자를 시작하였으나 규모나 건수 모두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3) EU의 경우 2008년 현재 역내 상호 투자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55.7%에 이르고 있으며, NAFTA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은 캐나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57.6%를, 미국 해외직접투자 스톡의 약 44%가 캐나다에 집중되어있다.

4) Zhang Qi and Lu Gang(2010).

있다. 한·중·일 FTA 등 제도적 통합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들 상호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정비하여 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 상호간 투자는 3국간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산단위에서의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고, 상호간에 외교·안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3국간 상호 투자는 더욱 증진되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호간의 투자는 시장 확대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중국이 2010년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전환할 것임을 밝혀 중국은 이제 생산지로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도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에 우리 기업들의 대중 진출은 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그 분야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보장과 투자자유화를 위해 중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의 대일 투자 역시 촉진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현재 M&A를 통해서 일본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을 소비시장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일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려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도 일본기업에 대한 M&A나 기술협력을 위한 투자가 촉진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일본기업들과의 기술협력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 역시 내부적 투자 장애요인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여타 경제권에 비해 동북아지역의 경우 시장의 기본적인 규모와 높은 성장잠재력, 충분한 외환보유액, 인력 및 기술의 상호 협력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상호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투자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전반적으로 한·중·일 3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상호간 입장차이가 크

다는 점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밖에 정책적·제도적인 장애요인으로 인한 이유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한국의 대세계 직접투자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역내 투자에 대한 특징 및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변화된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및 정책 비교를 통해 경쟁분야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상호 투자 등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파악(전반적인 동향, 역내 국가간 직접투자 특징 및 사례 분석)과 함께 관련 정부정책을 파악하고 역내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상호간 협력 혹은 경쟁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주로 어떤 국가 및 산업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고, 3국간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평가에 따른 3국의 투자 환경 및 장애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상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을 제도적 개선을 위한 주요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이 상호간 투자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종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중·일 상호간 투자 증진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 및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결과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는 자원추구형(Resource-seeking),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그리고 효율추구형(Efficiency-seeking) 등으로 구분되나 강인수

외(1999) 등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 특유의 우위를 축적하기 위한 학습과정(learning mechanism)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는 경향도 존재하는 등 다양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례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있어왔으며, 대표적으로 하이머(S.H. Hymer)의 독점적 우위이론(Monopolistic Advantage Theory),[5] 버논(R.Ver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6] 코우즈(R. Coase), 러그만(A.M. Rugman)의 시장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7] 더닝(J.H. Dunning)의 절충이론(Eclectic Theory),[8] 니커보커(F.Knicker Bocker)의 과점적 경쟁이론(Oligopolistic Competition Theory),[9] 고지마(K. Kojima)의 고지마이론(Kojima theory)[10] 등을 들 수 있다.[11]

그밖에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주제로 한 연구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는데 그 중 한국에 대한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평가와 과제에 대한 연구이다. 기본적

---

5) 시장의 불완전성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으며, 현지 기업에 비해 독점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 불완전한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6) 국제무역이론에 다국적 기업을 접목시킨 것으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기술격차와 제품수명주기에 따른 공산품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고 있다.

7) 시장내부화이론에서는 기업 자신이 보유한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을 내부화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을 때 해외직접투자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8) 독점적 경쟁우위이론과 내부화이론에 입지우위이론을 추가한 것으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은 이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과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 경쟁기업의 행동에 극도로 민감하여, 기업들의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과점적 경쟁이라는 과점산업 특유의 기업형태를 낳게 되며, 이러한 행동양식에 근거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고 있다.

10) 해외직접투자가 이윤극대화 내지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수행될 경우 투자국과 피투자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역무역(逆貿易)지향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작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제분업의 원리로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해야 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효율성이 제고되며 국민후생이 증진된다고 주장하였다.

11) 박길상(1999); 오병석(2008); 이일주·이두원(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표되고 있으며, 기타 해외투자의 평가와 과제를 살펴본 연구로는 하병기(2004)[12] 등을 들 수 있다. 하병기(2004)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외법인 및 모기업의 경영행태를 분석한 후 우리 기업의 투자행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13]

둘째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이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Kim *et al.*(2009), 전봉걸 외(2007), 신관호 외(2005)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모두 패널데이터를 구성한 후 실증분석하고 있는데,[14] 추정결과에 따르면 이 연구들 모두 투자대상국의 노동비용과 기술수준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변수인 GDP와 인구는 연구에 따라 추정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봉걸 외(2007)는 기존 연구와 달리 기업의 경영여건을 모형 내에 포함시켜 실증분석하였는데, 기업의 경영여건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이영광(2009), 황윤섭 외(2006) 등이 있고,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정행득 외(2006) 등이 있으며, 정희석(2006)은 해외직접투자와 거시경제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15] 이 연구들 모두 해외

---

12) 하병기(2004), 『제조업 해외투자의 평가와 과제: 해외법인의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13) 하병기(2004)는 해외법인의 영업활동이 한국의 무역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14) Kim J.M *et al.*(2009), “Trends and Determinants of South Korea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Copenhagen Journal of Asian Studies 27(1); 전봉걸·권철우(2007),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기업경영 관련 여건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제302호. 한국은행.; 신관호·오용협(2005),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 결정요인: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최근 해외자본유출의 원인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 이영광(2009),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의 한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

직접투자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가 한국의 국제수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향후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 모기업 간의 연계성 강화, 국내 비즈니스환경 개선, 해외투자기업들의 수익성 제고 등과 같은 다방면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화섭(2004)은 2000년대 들어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고,[16] 이에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배경과 주로 어떤 국가에 진출하고 있고, 국가에 따라 진출형태가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하여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배경 및 향후 전망과 한국 업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중국에서는 글로벌화된 기업이 다수 나타날 것이며, 해외직접투자가 대규모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투자대상지역은 선진국 및 개도국을 불문하고 확대될 것이며 투자형태도 대상지역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밖에 김태식(2008), 차경자(2008), 박승록 외(2008), 박장재(2007), Buckley *et al.*(2008) 등은 최근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진출 현황 및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중 차경자(2008)와 박승록 외(2008)는 중국기업의 M&A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17] 이 연구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4호, pp. 171~199; 황윤섭·양진호·금경호(2006), 「상대국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간 관계분석」, 『무역학회지』 제31권 제5호; 정행득·이상호(2006),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2호, pp. 479~795; 정희석(2006), 「해외직접투자와 거시경제와의 관계」, 『산업경제연구』, 제19권 제2호 pp. 725~744.

16) 김화섭(200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투자주체, 투자업종, 투자지역 등의 다원화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초기 단계에는 Greenfield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 M&A가 해외투자의 새로운 방식으로 부상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한편 Buckley *et al.* (2007)는 1984~2001년 동안의 자료를 대상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분석한 바 있다[18]. 분석결과 1984~91년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높고, 문화적 유사성이 있으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1992~2001년에는 천연자원 부존도가 높은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가 주요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은 매년 JETRO에서 발간하는 JETRO White Paper에 있다. 최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생산네트워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 연구로는 Urata(2006), Ando and Kimura (2003, 2006) 등이 있다.[19]

한편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을 비교한 연구는 현대경제연구원(2009)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상호 비교한 후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

17) 김태식(2008),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진출 현황 분석: 대한국 투자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6권 제1호; 차경자,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과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33권 제2호; 박승록 외(2008), 「중국의 세계기업 인수, 합병 현황과 시사점」, 『아시아연구』, 한국아시아학회; Buckley. P. J. *et al.*(2008), "Historic and Emergent Trends in Chinese Outward Direct Investment",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48, pp. 715~748.

18) Buckley. P. J. *et al.*(2008), "The Determinants of Chinese Outward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8, pp. 7499~518.

19) Shujiro Urata(2006), "The Creation of Regional" Production Network in Asia-Pacific: The Case of Japanese Multinational Corporations. Prepared for PAFTAD 31; Kimura, F. and M. Ando(2003), "Fragmentation and Agglomeration Matter: Japanese Multinationals i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Nort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14(3), pp. 287~317; Ando, M. and Fukunari Kimura(2006), "Fragmentation in Europe and East Asia: Evidences from International Trade and FDI Data", *Corporate Strategies in the Age of Regional Integration,* Chapter 4, Edward Elgar.

지역적 다변화, 제조업과 광업 부문의 투자 유도, 금융부문 강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한·중·일 3국을 함께 고려한 대표적인 연구는 장윤종 외(2004)가 있다. 장윤종 외(2004)는 한·중·일 3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과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행태 및 3국간의 협력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20] 이를 통해 한국의 효과적인 투자유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FDI 유치를 위한 국내요인의 개선방안(규제완화 및 정부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공여국의 해외투자정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해외투자정책에 대한 일부 연구도 국내기업들의 해외 진출 현황 및 향후 진출 확대를 위한 국내적 차원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해외시장 확보와 효율 극대화 등과 같은 동기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외시장에서 경합관계와 함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한·중·일 3국을 고려할 때 각국의 해외직접투자 행태 및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의 비교 및 상호간 투자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상호 투자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전무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해외투자 행태 및 전반적인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이러한 특징 하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한·중·일 3국 상호간 해외직접투자는 어떤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3국간의 투자유치 확대 등 상호 협력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그동안 한·

20) 장윤종·이문형·신용대·이병기(2004), 『한·중·일 3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중·일 3국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 증대(특히 무역)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최근 중국의 역내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발생하고 있어 역내 경제관계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변화 추이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각국의 해외투자정책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3국간 상호 비교하는 본 연구는 최근 한·중·일 3국 FTA 관련 산관학 공동연구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투자증진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함께 3국의 기체결 투자협정문 비교 등을 통해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의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현재 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존재하나 이를 한·중·일 3국의 사례에 비추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더구나 투자협정 체결 각국의 투자협정문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협정의 합의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여타 연구와 차별화된 성과가 기대된다.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특히 한·중·일 3국간 상호 투자의 장애요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3국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 현황 분석 및 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역내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의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분석을 위해서는 각국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한·중·일 각국의 지역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고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한·중·일 3국은 정책 시행 단계는 다르나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장에서는 이를 정량적으로 검증해보며 지역별, 산업별, 형태별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해봄으로써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동기와 목적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역내 국가간 직접투자의 추이 및 주요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한·중·일 3국 서로가 각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대상으로서 차지하는 비중 혹은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한·중·일 각국의 해외투자 전략과 정부정책 조사를 위해서 각국의 해외투자전략을 문헌과 각국의 정부자료를 이용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그 중 특히 각국의 해외직접투자 동기, 해외투자 전략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각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관련 규제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상호 비교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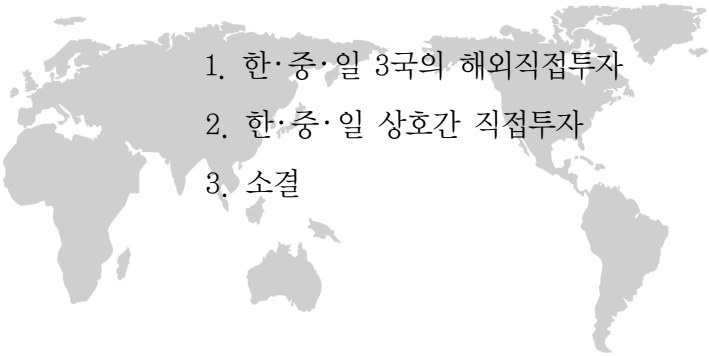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상호 투자 장애요인 도출을 위해 주요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된 투자유치환경에 대한 평가결과를 비교해보는 한편 각국에 진출한 한·중·일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바 있는 설문과 각국 정부차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 상호간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제4장에서는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중·일 3국 투자협정의 투자증진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해 이 협정의 실효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증진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먼저 중국의 성별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환경 개선(투명성 지수와 법, 규제 제도의 건전성 지수)이 투자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랜덤효과(random effects) 일반화 최소자승법(GLS)의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는 투자유치국의 투자환경과 투지증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협정 체결과 투자환경 개선을 서로 연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투자협정 체결로 인한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투자증진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0~2005년 사이 OECD 국의 세계 60여 개국에 대한 누적직접투자액이 포함되어 있는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의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에 따라 고정효과(fixed effect)와 임의효과(random effect)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는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에 대한 분석결과 및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의 투자증진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환경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국, 대일본 투자 유치 및 기업진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사항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즉 한·중·일 FTA 등 제도적 통합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3국간 상호 투자환경 개선의 중요성과 더불어 한·중·일 투자협정 등 단계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1.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2.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
3. 소결

한·중·일 3국은 경제발전단계 및 기타 경제여건의 차이만큼이나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해외직접투자 행태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해당 기간의 정책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반의 특징과 더불어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의 차별적인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한·중·일 3국의 협력 혹은 경쟁에서 중요한 정책적 요인을 찾아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현황 및 특징을 전체적인 개요, 투자대상지역별 특징, 산업별 특징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고, 이를 비교해보았다.

1.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가. 한국

1)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특징

한국은 경제발전 초기부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해외진출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보다는 수출을 통한 해외진출전략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글로벌시장으로의 진출, 생산비용 절감, 무역장벽 우회, 해외자원 확보 등 다양한 필요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여기서는 과거 경제발전 초기로부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양적·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와 그 대내외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한편 현재 한국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정책상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68년 12월 「외국환관리규정」에 해외투자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 시기 한국남방개발의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업 투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기업의 경영 및 자본의 규모가 작아 1980년대까지는 투자 금액이나 건수 모두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제 1980년대 한국의 해외투자는 연평균 2.2억 달러에 불과했다.[21] 이 시기는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초기 단계로 주로 자원개발이나 원양어업 관련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졌고, 1970년대에는 중동개발에 다른 건설투자 및 종합상사와 같이 서비스분야에서 자회사 진출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국제수지 흑자 누적과 선진국으로부터의 개방압력 등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자본유출을 촉진하면서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였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시책의 일환으로 해외부동산투자 제한 완화(1989. 2. 7), 해외투자 제한 완화(1989. 2. 10) 시책이 수립되었다. 이어 1989년 8월 29일 「해외직접투자 지침 및 해외부동산 취득지침」을 제정하여 해외직접투자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방안들이 발표되었다. 이 시기에는 임금상승과 원화절상 등으로 기업의 국내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대기업들이 중화학공업분야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켰고, 중소기업들도 우회수출의 방편으로 제조업분야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였다.[22]

1994년부터 외환자유화가 진전되는 한편 세계화 경영전략, 외자조달능력 향상, 국내 기업환경 악화 등으로 대기업 중심의 해외직접투자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23] 그 결과 1994년 당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63.1% 증가한 23.6

---

21) Kotra OIS 해외투자 통계(www.ois.go.kr).

22) 한국무역협회(2006), 『한국무역사』 참고.

23) 1994년 2월에 외환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해외직접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는 장려, 일반, 제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고 투자를 허가하던 해외투자규제시스템을 제한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만 최소화하여 열거하고 그 외에는 투자를 전면자유화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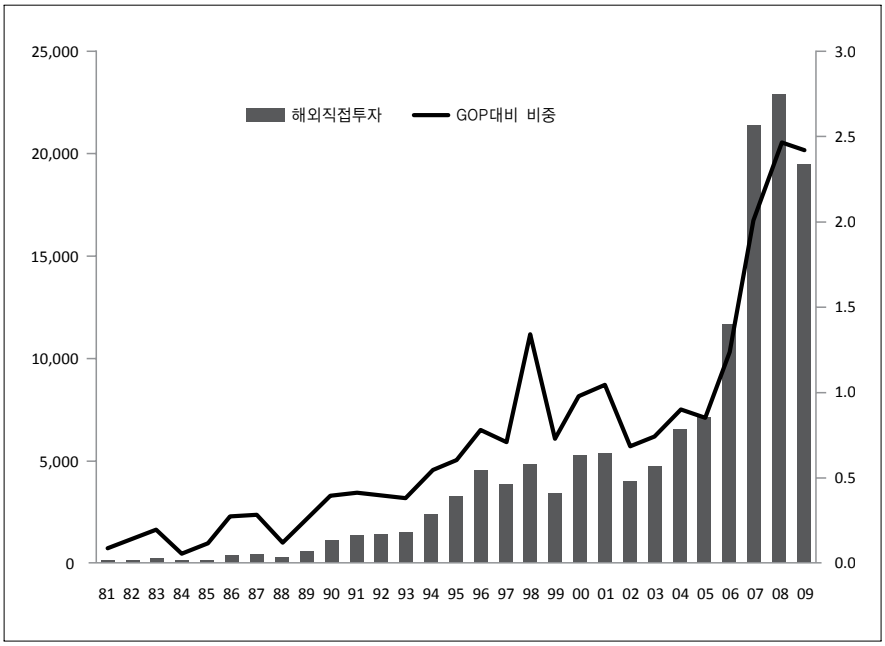
1990년대 후반 들어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잠시 주춤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 다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6~07년 해외직접투자는 해외 M&A 투자 증가, 자원개발 참여 확대, 부동산업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2006년 1월에 기업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3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확대하였고, 이어 3월에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를 완전히 자유화시킨 해외직접투자 정책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해외투자는 전년대비 84.2% 증가했으며 투자규모도 2배 이상(214.2억 달러) 증가했다. 2008년에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전년대비 7.0% 증가해 사상 최고치(229.1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8년 말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화된 2009년에는 전년대비 15.1% 감소한 194.5억 달러의 해외투자 규모를 보였다(그림 2-1 참고).

이처럼 그동안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른 증가추세를 시현함에 따라 GDP 대비 점유비중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1990년대에는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1% 미만의 상당히 낮은 점유비중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2% 이상으로 확대되었다(그림 2-1 참고).

한편 [그림 2-2]와 같이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목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수출촉진, 현지시장 진출이었으며, 다음으로 저임금 활용, 자원개발 등이 중요한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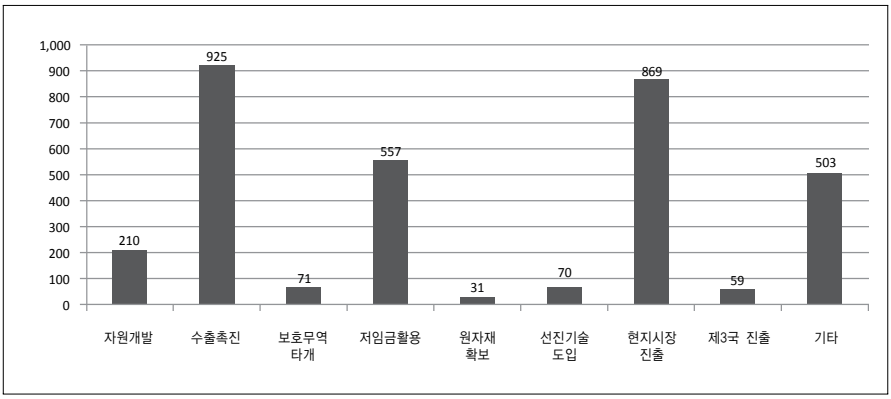
24) Kotra OIS 해외투자 통계(www.ois.go.kr).

그림 2-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및 GDP 대비 비중



주: 2009년 한국의 GDP는 추정치이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online);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online).

그림 2-2. 한국기업의 진출 목적별 현황(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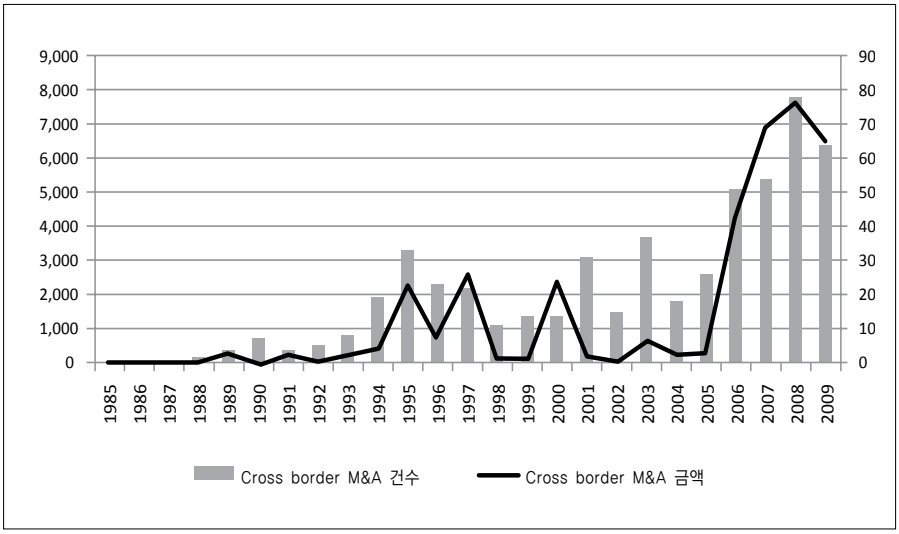
주: 총 3,295개의 해외진출기업의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자료: 수출입은행(2009), 「2008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편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외직접투자에서 M&A 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이 2007년부터 집계한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M&A형 직접투자비중은 2007년 26.4%, 2008년 29.6%, 2009년 2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M&A형 직접투자비중이 80%가 넘는 중국이나 50%가 넘는 일본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현재 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M&A 형태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2007년부터 집계하고 있어 그 추이를 살펴보는 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Thomson One DB를 통해 연도별 한국의 국경간 M&A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M&A를 통한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국경간 M&A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활성화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M&A를 통한 해외투자 확대시점은 다소 늦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두드러진

그림 2-3. 한국이 인수한 국경간 M&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자료: Thomson One DB(2010년 9월 기준).

특징 중 하나는 한국 M&A 투자의 경우 2000년 초반에는 건수에 비해 투자금액이 다소 미흡하였던 데 반해 2006년 이후부터는 전체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M&A 건별 투자금액도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현혜정 외(2008)는 한국기업의 해외 M&A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해외 M&A에 대한 경험부족 및 정부규제요인에 있다고 보았다. 먼저 해외 M&A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해외 M&A 관련 정보부족, 국경간 M&A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 외국기업보다는 국내기업을 인수하려는 성향 등이 나타났다고 보았으며, 1990년대 대기업들의 M&A 실패경험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인식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더불어 최근 정부에서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간접적인 규제가 해외 M&A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은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제도, 보험제도, 정보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외국환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다수의 유관기관이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해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와 더불어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외국납부세액의제제도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배당소득면제제도 등이 있으며, 정부간의 협정을 통해 해외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이중과세방지제도도 도입·운영되고 있다.[25)]

25) 한도숙(1996),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와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홈페이지(http://www.ois.go.kr/) 참고.

2) 투자대상지역별 현황과 특징

한국이 해외직접투자를 시작한 초기 단계(1968~89년)에 한국의 주요 해외직접투자는 북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총규모의 42.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동남아(16.6%)와 중동(12.8%) 지역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시기 한국의 중동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많은 이유는 중동개발에 따른 건설투자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한국의 주요 해외직접투자는 점차 동북아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다음으로 북미지역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분석대상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2-1. 한국의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

지역	1968~89년	1990~99년	2000~05년	2006~09년
동북아	7.5	24.7	35.3	30.0
북미	42.2	28.9	27.3	24.6
서유럽	4.8	10.8	12.5	13.2
동남아	16.6	15.1	9.9	13.2
중앙아/CIS	0.0	2.6	1.1	3.8
중남미	3.9	4.1	3.8	3.2
동유럽	0.1	2.7	2.4	2.8
오세아니아	8.3	1.7	1.1	1.5
서남아	0.5	3.5	0.9	1.2
중동	12.8	1.8	0.8	1.0

주: 동북아지역은 한·중·일 3국과 홍콩, 대만, 마카오, 몽골, 동남아지역은 ASEAN 10개국, 다른 지역은 World Bank의 지역분류와 동일하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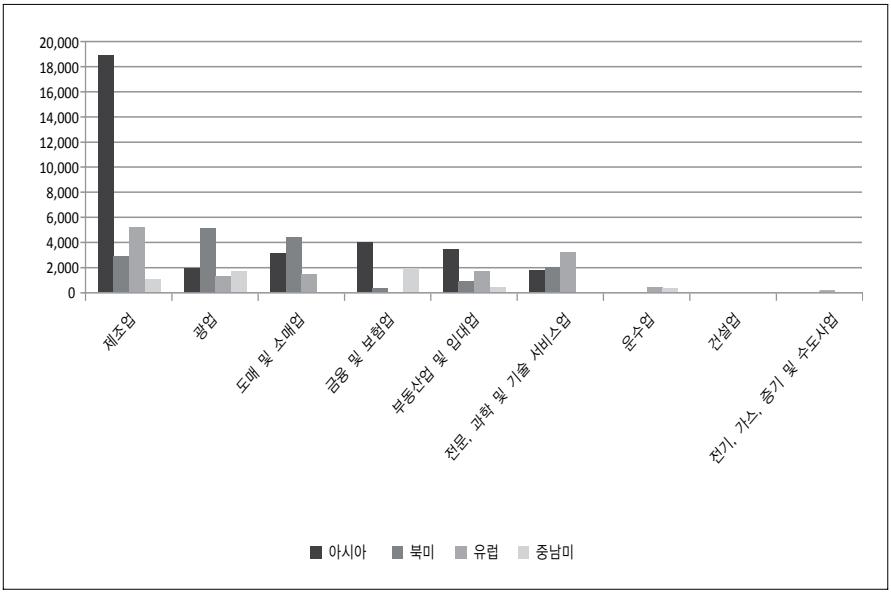
최근 들어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CIS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도 주목된다. 즉 2000~05년 동안 한국의 총해외직접투자에서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CIS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9.9% 및 1.1%를 보였으나 2006~09년에는 13.2% 및 3.8%로 각각 3.3%포인트 및 2.7%포인트 늘어났다.

최근 각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의 산업구성상 특징을 살펴보면 여타 지역이 광업, 도소매업, 제조업 및 기타 서비스업 등에 비교적 고르게 투자되는 반면, 아시아지역은 제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에서는 한국의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표 2-1]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1968~89년 및 1990~99년 기간 동안 한국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은 북미지역으로 이는 주로 미국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4. 한국의 지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2005~09년 누적)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수출입은행(2010), 「2009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분석」.

1990~99년에 제2위 투자대상국으로 중국이 급부상한 후 2000~05년 및 2006~09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한국 제1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렇게 투자대상국으로 중국이 부상하게 된 요인은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부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1990년대 저임금 노동인력의 활용 및 중국시장 진출 등을 목적으로 한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이 급속도로 확대된 당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후 2000년 WTO 가입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요 특징은 2000년 이후부터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대상국 상위 10위권 내에 일본이 위치한 것이다. 특히 2007년 엔화 약세로 인하여 대일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로 중국, 미국, ASEAN 국가들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편이다.

표 2-2. 한국의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순위	1968~89년	1990~99년	2000~05년	2006~09년
1	미국	미국	중국	중국
2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미국
3	캐나다	홍콩	네덜란드	홍콩
4	예멘	인도네시아	버뮤다	베트남
5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홍콩	캐나다
6	홍콩	베트남	베트남	네덜란드
7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케이맨군도	영국
8	네덜란드	독일	영국	싱가포르
9	파푸아뉴기니	폴란드	일본	일본
10	파나마	태국	싱가포르	버뮤다

주: CEIC에서 제공하는 중국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는 순해외직접투자(=실행된 해외직접투자 - 회수분)만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CEIC 데이터베이스.

표 2-3. 한국의 해외 M&A 인수금액의 시기별·국가별 비중

(단위: %)

순위	1985~89년	1990~94년	1995~99년	2000~04년	2005-09년
1	캐나다 81.9	미국 44.7	미국 47.9	홍콩 39.8	미국 36.2
2	이집트 9.3	루마니아 17.3	카자흐스탄 23.4	스리랑카 28.0	캐나다 15.9
3	미국 8.7	칠레 16.6	영국 10.9	중국 18.1	타이완 9.3
4		일본 11.3	루마니아 3.6	미국 7.1	노르웨이 6.0
5		그리스 3.5	폴란드 2.5	인도네시아 1.8	중국 4.6
6		독일 3.3	싱가포르 1.7	헝가리 0.8	홍콩 4.3
7		영국 1.5	독일 1.7	영국 0.8	카자흐스탄 4.1
8		수단 0.9	불가리아 1.6	호주 0.7	페루 3.5
9		싱가포르 0.6	일본 1.2	대만 0.6	호주 3.1
10		소련 0.3	멕시코 1.0	캄보디아 0.5	체코 2.6

자료: Thomson one DB: M&A Deal statistics(2010년 9월 기준).

전체 해외직접투자와 달리 M&A형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0~2009년간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해외 M&A 인수금액의 35.2%를 미국이, 11.9%를 캐나다가 차지하고 있어 북미지역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0~04년간을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최근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의 투자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M&A형 투자의 경우는 한국의 해외 M&A 인수 총액의 약 5%로 미국(35.2%)과의 격차가 크다.[26]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국 투자가 아직까지는 낮은 인건비 등을 활용한 생산기지 구축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라 판단된다.

한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의 주요한 특징은 중동,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장접근, 자원확보, 가격경쟁력 제고 등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역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특이사항으로는 아시아지역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외수출을 위한 가공기지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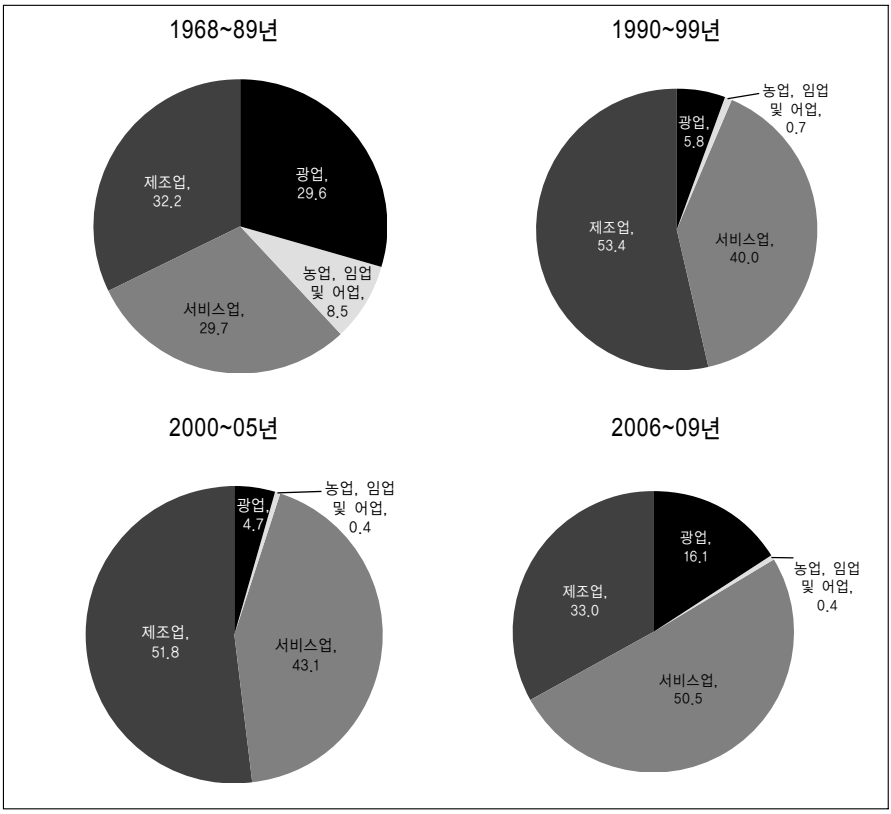
3) 산업별 현황과 특징

최근 한국의 주요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제조업의 비중이 확대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1968~89년 동안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제조업(32.2%), 서비스업(29.7%), 광업(29.6%)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거의 유사한 점유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1980년 이전까지는 정부차원에서 자원개발, 원자재확보, 수출촉진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만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하였으나, 이후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부분적인 규제 완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요인과 더불어 석유파동 등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여타 기간에 비해 광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6) 1980~2009년간 누적액 기준이며, 2005~09년간의 실적으로 비교해볼 때도 미국이 36.2%, 중국이 4.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5. 한국의 산업별 해외투자비중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1990년대에는 제조업에 대한 해외투자비중이 53.4%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 시기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OECD 가입과 함께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되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이 본격화되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2000~05년에도 해외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 투자되었으나 1990

년대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늘어났다. 2006~08년에 들어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50.5%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은 33.0%로 점유비중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이 시기 서비스업 중에서 해외직접투자가 큰 비중은 도소매부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2004년 이후부터는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업 부문에 대한 해외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7)]

각 산업별 주요 해외투자국을 살펴보면, 광업부문은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제조업은 중국, 미국, 베트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중 부동산 및 임대업은 영국, 도소매업의 경우는 미국이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표 2-4. M&A형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광업	105	358	137	801	148	1,295
도매 및 소매업	212	1,128	266	2,062	229	955
금융 및 보험업	54	239	56	230	44	911
제조업	776	1,484	815	1,570	545	72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1	1,629	103	554	113	652
기타	830	807	1,005	1,559	686	575
합계	2,058	5,645	2,382	6,776	1,765	5,112

주: M&A형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추이는 2007년부터 집계.
자료: 수출입은행(2010), 「2009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분석」.

27) 2004~09년 동안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37.9%,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 31.7%의 연평균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는 미국과 아일랜드가 주요 투자대상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2007년부터 집계해오고 있는 M&A형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연도별로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는 크게 볼 때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여전히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분야의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특히 금융, 보험, 부동산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북미, 유럽 등 선진국으로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지만 M&A를 통한 해외투자도 자원개발과 더불어 이 서비스산업들에 집중되고 있다.

나.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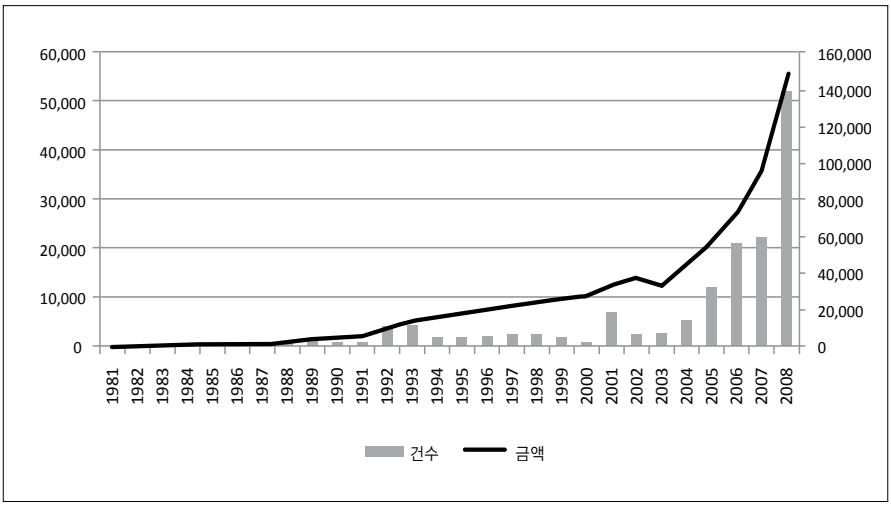
1)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특징

중국은 본격적인 개혁·개방이 실시된 이후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대표적인 수여국으로서 전 세계 자본이 끊임없이 유입되어 경제성장을 견인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중국의 직접투자 정책 및 흐름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왔다. 중국정부의 정책 및 중국 내부의 경제적 상황 변화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의 필요성에 따라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다.[28)]

---

28) 김태식(2008)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부터 WTO 가입 이전까지 20년의 기간을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단방향적 개방의 시기'라고 정의하였으며, WTO 가입 이후 중국기업들이 더 이상 국내의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형 다국적 기업과의 무한경쟁에 노출되고, 중

그림 2-6. 중국의 Outward FDI 추이(UNCTAD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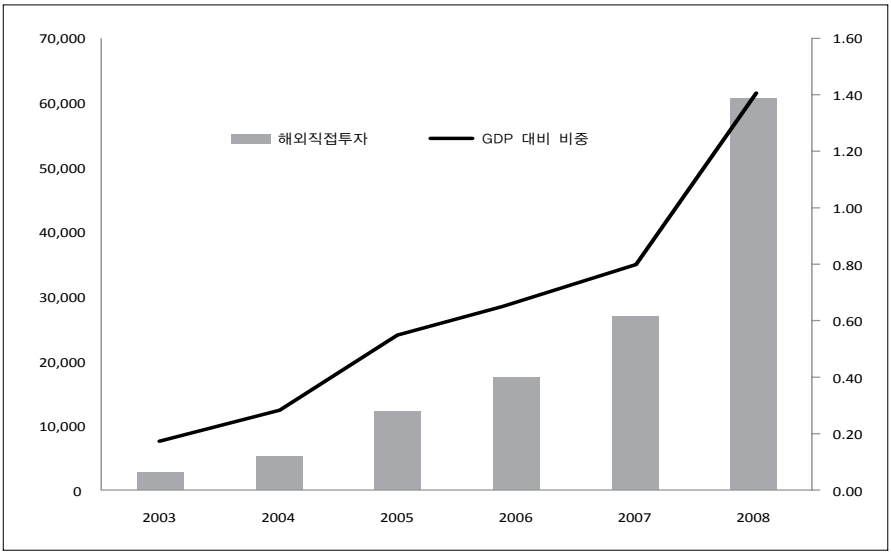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 DB(2010).

현재 중국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는 2003년부터 집계되고 있으나, UNCTAD에서 집계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1981년에 최초로 집계되었다. UNCTAD의 발표자료를 통해 보면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추세는 1990년대 이전, 1990년대 이후, 2003년 이후의 기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대체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해외직접투자촉진정책이 채택·시행되기 이전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의 해외투자는 농산물 및 광물 등이 중심이었고, 1990년대 이후는 수출입무역, 교통통신, 가공무역, 요식업 등의 상업서비스로 그 범위가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해외투자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으나, 중국의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정책이 초기적으로 표현된 시점이 1997년

국정부의 해외투자정책 변화와 맞물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쌍방향적 개방의 시기'로 정의하였다.

그림 2-7.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및 GDP 대비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주: 1) CEIC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중국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의 경우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규모가 제공되지 않아 각 지역별 투자규모를 합계하여 계산하였다.
2) CEIC에서 제공하는 중국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는 순해외직접투자(=실행된 해외직접투자 - 회수분)만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CEIC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

「제15차 중국인민대표회의」와 1998년 「제15차 중국인민대표회의 이중전회(二中全會)」였으며, 이후 2000년 3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이 그 중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즉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중국 정부차원에서도 해외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화해나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UNCTAD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중국정부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공식통계를 나타낸 [그림 2-7]를 통해서 보아도 최근 특히 2003년 이후부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2003~08년 동안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84.2%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구해보면,

2005년은 전년대비 121.7% 증가하였고, 2008년의 경우 전년대비 12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중국의 GDP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당시 0.17%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08년에 1.4%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규모는 GDP 등 경제역량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29)]

이러한 최근의 성장세는 2002년 중국정부가 해외직접투자를 외자 도입과 함께 대외개방의 양대 축으로 인정하고 중국기업의 적극적인 해외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시점과 일치한다.[30)] 중국정부는 2000년도에 최초로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走出去)를 외국인직접투자(引進來)와 마찬가지로 함께 장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01년에는 해외투자가 제10차 5개년 계획에 정식 반영되었으며 2002년 중국 공산당 제6기 전체대회의 발표문에 삽입되면서 해외투자가 주요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2004년 중국 상무부는 「대외국별 산업별 지도목록」을 작성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 67개 국가별로 투자 또는 인수 장려산업들을 기업들에 제시·장려하였고, 상무부와 국가외환관리국[31)]은 해외투자의 법제화와 절차 간소화 조치를 잇달아 공표하였다.[32)] 이 중 특히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4년 「해외투자프로젝트 허가 임시관리방법(境外投资项目核准暂行管理办法)」을 제정하여 해외투자 심사권한을 상당 부분 성급의 지방정부 발전개혁부문에 이전하

29)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전 세계 Outward FDI의 GDP 대비 평균 비중은 대략 1.93% 수준으로 나타났다.

30) 이 시기 국가대외경제합작부 石广生 부장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이야말로 적기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김화섭 2004에서 인용).

31) 국가외환관리국은 2005년 5월 5일에 「해외투자 외환관리 개혁시범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하여 외환관련 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기존의 江蘇省 등 24개 省級 정부산하기업들에 국한되었던 투자간소화 절차를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24개 省級 시범지구 소재 외환관리국의 자금출처에 대한 심사권한을 현재의 300만 달러 이하에서 1,000만 달러 이하로 확대하였다.

32) 이문형(2006),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글로벌화 전략』, Issue paper 2006-204, 산업연구원.

고 절차도 간소화하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일반투자는 건당 투자액이 1,000만 달러, 자원개발은 3,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였고(그중에서도 일반투자건 5,000만 달러 이상 및 자원개발건 2억 달러 이상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심사 후 국무원 허가 필요), 나머지는 성급 지방정부 발전개혁부문의 허가로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33] 또한 상무부는 2004년 『해외투자기업 허가심사 관련 규정(商务部关于境外投资开办企业核准事项的规定)』을 제정하여, 중앙기업(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 지칭) 이외의 중국기업이 위 규정의 첨부에 열거된 국가들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는 허가권한을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위임하였다.[34] 한편 상무부의 위 규정은 2009년에 상무부의 『해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에 의하여 대체되었는데,[35] 중국과 미수교국가에 대한 해외투자,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상무부와 외교부 등이 함께 명단 확정), 중국 측 투자액이 1억 달러 이상의 해외투자, 여러 국가(지구)의 이익과 관련된 해외투자, 해외에 SPC를 설립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상무부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중국 측 투자 1,000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미만의 투자, 에너지·광산류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성급 상무주관부문 허가사항으로 하였다.[36]

김태식(2008)은 최근의 이러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확대요인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인에서 찾았다. 첫 번째 목적은 해외자원 확보로, 중국석유공사,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유전, 가스광구, 에너지회사의 인수 및

33) 中國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04), 『国家发改委第21号令: 境外投资项目核准暂行管理办法』.

34) 中國 商务部, 『商务部令 2004年 第16号: 关于境外投资开办企业核准事项的规定』.

35) Kotra(2010),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FDI Theme Report 10-007.

36) 中国 商务部,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令 2009年 第5号: 境外投资管理办法』.

표 2-5. 중국기업의 Outbound M&A 추진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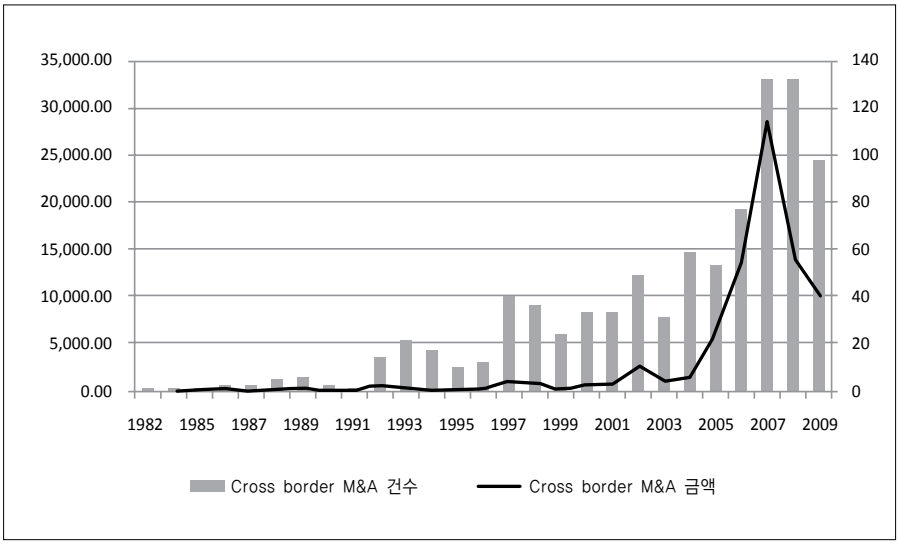
구분	건수(건)	금액(백만 달러)	건수 비중(%)	금액 비중(%)
자원, 에너지 확보	68	27,083	31.8	41.9
신시장 개척	48	15,753	22.4	24.4
자산투자	43	15,055	20.1	23.3
부족역량 보완	31	4,026	14.5	6.2
규모경제 추구	10	1,448	4.7	2.2
금융	5	184	2.3	0.3
정부 권유	5	448	2.3	0.7
CEO 의지	3	577	1.4	0.9
핵심역량 수출	1	14	0.5	0.5
합계	214	64,588	100.0	100.0

주: 1) 1995~2007년까지 214건의 M&A 사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 1,000만 달러 이상의 M&A 사례만 선정하여 조사.
자료: Luedi(2008), “China’s track record in M&A”, *The Makinsey Quaterly*, No. 3.

지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기술 및 브랜드 확보로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IBM PC 부문을 인수한 레노보(Lenovo), 쌍용자동차 지분을 인수하였던 상하이자동차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제기된 요인은 제조업에 방대한 외자유입과 더불어 공급과잉이 고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판로 개척)으로서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였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WTO 가입에 따른 무역통상 마찰 및 무역장벽 심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해외직접투자가 장려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외환보유액이 중국정부로 하여금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단순히 잉여 외환의 활용뿐만 아니라 보유외환의 감축을 통해 인민폐 평가절상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림 2-8. 중국이 인수한 국경간 M&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자료: Thomson One DB(2010년 9월 기준).

실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그 중에서도 Outbound M&A 투자를 추진한 목적에 대해서 Dealogic, McKinsey가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도 자원 및 에너지 확보를 목적으로 한 M&A 사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시장 개척, 자산투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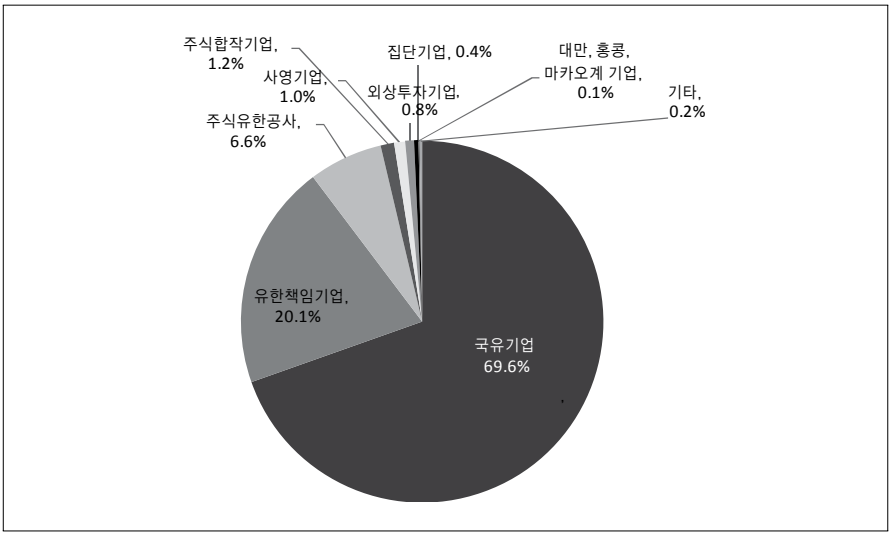
이에 따라 중국의 M&A를 통한 해외투자는 2008~09년 다소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2000년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단적으로 Thomson One DB를 통해 집계한 국경간 M&A를 통한 기업인 수 현황을 보면 2000년 약 6억 달러에 불과하던 인수실적이 2007년에는 289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M&A 건수는 33건에서 132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고려해보면 건당 평균 인수가액이 2000년 0.2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2.2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건당 평균적인 투자 규모 또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외환보유액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

원을 바탕으로 유명 다국적 기업 인수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의 최근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전까지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하였던 국유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점차 민간기업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국유기업의 투자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2006년 말 대외직접투자금액(스톡 기준) 중 81%를 차지하던 비중이 2008년 69.6%로 하락하였다.[37]

더불어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린필드(green-field)형보다 M&A형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외 자원 및 기업에 대한 M&A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그림 2-9. 중국의 투자주체별 해외직접투자비중(2008년 말 스톡 기준)



자료: 中國 商務部(2009), 「2008年度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37) 中國 商務部(2009), 「2003/2008年度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보이고 있다. 실제 중국 상무부(2009)[38]에 따르면 중국의 2008년 기준 M&A 투자는 302억 달러로 전년대비 379%나 증가했는데 이는 당해 연도 전체 해외투자의 54%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중 금융분야 M&A가 97억 달러로 32.1%, 비금융분야 M&A는 205억 달러로 67.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Kotra(2008)[39]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 중 약 89%가 M&A 방식에 따른 투자 진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07년간 M&A 방식의 해외투자 진출은 15억 달러에서 268억 달러로 연평균 106% 이상 증가하여, 자회사 투자방식의 24%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중국이 제조, 서비스 분야 기술과 비즈니스 노하우 부족을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신규법인, 공장 설립보다는 기존 우량기업의 M&A나 전략적 제휴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현재 자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개발은행, 그리고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의 공조체계를 통한 금융지원제도를 구축하였다. 먼저 '국가 장려 해외투자 중점항목' 선정을 통해 중국기업이 해외 진출 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대상분야를 규정하였으며,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전용 신용대출지원제도, 수출신용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지원제도, 중국개발은행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자금 융자지원제도, 중국개발은행 및 수출신용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금융보험지원제도 등을 통하여 이 분야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융지원대상분야로 선정된 분야는 ①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분야, ② 국내 기술, 상품, 설비 및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국제생산형 분야와 인프라 건설분야, ③ 국제 선진기술·관리경영·전문인력 등을 활용하는 연구개발분야, ④ 중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개척을

38) 中國 商務部(2009), 「2008年度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39) Kotra(2008), 「주요국별 해외투자 진출 유형」.

가속화할 수 있는 해외 M&A 등 4개 분야다.[40)]

2) 투자대상지역별 현황과 특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표 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대부분 아시아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지역은 2003년 52.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08년에는 77.9%로 크게 늘어났다. 다만 아시아지역의 높은 투자비중은 중국의 대홍콩 투자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대아시아의 투자비중은 10% 이하로 떨어지며, 아시아지역 내 투자비중 증가 또한 홍콩에 대한 투자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한편 2003~06년 동안 중국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은 2003년 36.4%에서 2006년 48.0% 등으로 아시아지역 다음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며, 대신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6]의 경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표 2-7]은 국가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2003~08년 동안 중국의 상위 10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주요 해외투자국가는 홍콩과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분석대상기간 동안 상위 10위권에 위치한 아시아국가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이며, 북미지역은 미국, 유럽지역은 독일, 영국으로 나타났다.

---

40) 박현정(2007), 「해외직접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재정경제부 수탁과제)의 연구내용 중 중국의 해외 M&A 관련 지원정책 참고(현혜정 외 2008 재인용).

표 2-6. 중국의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

지역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아시아	52.7	54.8	36.6	43.5	62.6	77.9
아프리카	2.6	5.8	3.2	3.0	5.9	9.8
남아프리카	0.3	0.3	0.4	0.2	1.7	8.6
중남미	36.4	32.1	52.7	48.0	18.5	6.6
오세아니아	1.2	2.2	1.7	0.7	2.9	3.5
유럽	5.1	2.9	3.2	3.4	5.8	1.6
북미	2.0	2.3	2.6	1.5	4.3	0.7

주: CEIC에서 제공하는 중국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는 순해외직접투자(=실행된 해외직접투자 - 회수분)만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CEIC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

그런데 중국의 국가별 해외투자규모를 비교해보면 상위 10위권 내에서도 1위와 2위 국가 간에 큰 격차가 나타난다. 즉 상위 10위권 2008년 현재 중국 제1위의 해외투자대상지역인 홍콩이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1%인 반면 제2위인 버진아일랜드는 3.8%로 큰 격차를 보인다. 분석대상기간 동안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의 연도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살펴볼 경우 홍콩 외에 중국의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이다. 그밖에 아시아지역의 카자흐스탄, 마카오, 몽고, 미얀마, 파키스탄, 아프리카지역의 나이지리아, 잠비아, 유럽의 독일, 러시아, 영국, 북미의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호주 등이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미지역의 경우 실제 케이맨 제도와 버진아일랜드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면 여타 국가에 대한 투자(2008년 현재 중국의 대세계 직접투자의 0.1%)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41]

41) 中國 商務部(2009), 「2008年度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표 2-7. 중국의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

순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	홍콩 40.3	홍콩 47.8	케이맨제도 42.1	케이맨제도 44.4	홍콩 51.8	홍콩 69.1
2	케이맨제도 28.3	케이맨제도 23.4	홍콩 27.9	홍콩 39.3	케이맨제도 9.8	버진아일랜드 3.8
3	버진아일랜드 7.4	버진아일랜드 7.0	버진아일랜드 10.0	버진아일랜드 3.1	버진아일랜드 7.1	호주 3.4
4	한국 5.4	수단 2.7	한국 4.8	러시아 2.6	캐나다 3.9	싱가포르 2.8
5	미국 2.3	호주 2.3	미국 1.9	미국 1.1	영국 2.1	케이맨제도 2.7
6	태국 2.0	미국 2.2	러시아 1.7	싱가포르 0.8	호주 2.0	마카오 1.2
7	마카오 1.1	러시아 1.4	호주 1.6	알제리 0.6	러시아 1.8	미국 0.8
8	러시아 1.1	인도네시아 1.1	독일 1.1	호주 0.5	싱가포르 1.5	러시아 0.7
9	호주 1.1	싱가포르 0.9	수단 0.7	독일 0.4	나이지리아 1.5	독일 0.3
10	인도네시아 0.9	나이지리아 0.8	알제리 0.7	나이지리아 0.4	독일 0.9	인도네시아 0.3

주: CEIC에서 제공하는 중국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는 순해외직접투자(=실행된 해외직접투자 - 회수분)만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CEIC 데이터베이스.

Thomson one DB의 집계자료에 의하면 M&A형 해외투자의 경우 또한 대홍콩 투자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 비해서 여타 국가와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누적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대홍콩 M&A 인수금액은 전체 국경간 M&A 인수금액의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호주가 12.6%, 미국이 12.1%, 영국이 8.5%, 캐나다가 8.0%, 남아프리카공화국이 7.0%로 뒤를 잇고 있다. [표 2-8]에서는 중국의 해외

M&A 인수금액의 대상국가별 비중을 시기별로 구분해보았다. 각 시기별로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홍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점차 다양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최근 중국의 M&A형 해외직접투자의 전체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인수대상기업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M&A가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주요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함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의 주요한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등 화교문화권이거나 사실상 중국의 영향 아래 있는 국가들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외투자 초기부터 화교기반을 활용한 투자가 용이하였으며, 이러한 특징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국이나 일본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를 반증한다. 둘째, 중국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중 상당수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주요 투자대상국들인 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몽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등은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이다. 특히 여타 지역에 비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2] 셋째, 유럽 및 북미 등 선진지역에 대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화교권 및 자원부국 외의 주요 투자대상국은 북미의 미국, 캐나다와 유럽의 독일, 영국 등으로 주요한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밀집해 있는 국가들이다. 이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기업들의 주요한 해외투자 동기가 기술 습득, 브랜드 강화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42) 아시아지역의 경우 홍콩을 제외하면 비중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남미지역도 케이맨 제도와 버진아일랜드를 제외하면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며, 북미나 유럽 등도 아프리카에 비해 큰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표 2-8. 중국의 해외 M&A 인수금액의 시기별·국가별 비중

(단위: %)

순위	1980~84년	1985~89년	1990~94년	1995~99년	2000~04년	2005~09년
1	미국 100	홍콩 82.7	홍콩 69.0	홍콩 37.5	홍콩 32.6	홍콩 18.4
2		미국 16.6	페루 13.8	호주 15.0	인도네시아 23.5	미국 13.0
3		호주 0.7	미국 5.5	카자흐스탄 14.6	호주 14.4	호주 12.6
4			싱가포르 2.8	베네수엘라 10.8	한국 8.6	영국 9.6
5			덴마크 2.7	싱가포르 8.5	카자흐스탄 3.6	캐나다 8.9
6			아일랜드 1.6	미국 6.8	페루 3.6	남아공 7.9
7			아르헨티나 1.6	대만 1.5	미국 2.2	러시아 5.3
8			호주 1.1	인도 1.1	싱가포르 2.1	카자흐스탄 4.8
9			뉴질랜드 0.9	캐나다 1.1	노르웨이 1.9	벨기에 4.3
10			스페인 0.4	프랑스 0.8	에콰도르 1.8	나이지리아 3.6

자료: Thomson one DB: M&A Deal statistics(2010년 9월 기준).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국가별 분포는 중국의 해외투자 장려정책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국가기관의 심의·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금액별로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상무부, 국무원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해외투자 관리체계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해외투자 승인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도 일괄하여 해결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가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부정책 방향과 실제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여진다.[43)]

3) 산업별 현황과 특징

2003년에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산업은 광업으로 총규모의 48.3%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업(27.0%)과 제조업(21.9%)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중국의 해외투자는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7년과 2008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6%와 86.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높은 투자비중을 보이는 산업은 광업으로 2008년에 10.4%를 기록하였다. 한편 제조업에 대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8년 기준으로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서비스업 투자는 대부분 도소매업, 임대업 및 금융보험업에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에 부동산임대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287.3%나 증가한 217.2억 달러를 보였으며, 2008년 금융부문의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 대비 742% 증가한 140.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치적으로 나타난 중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분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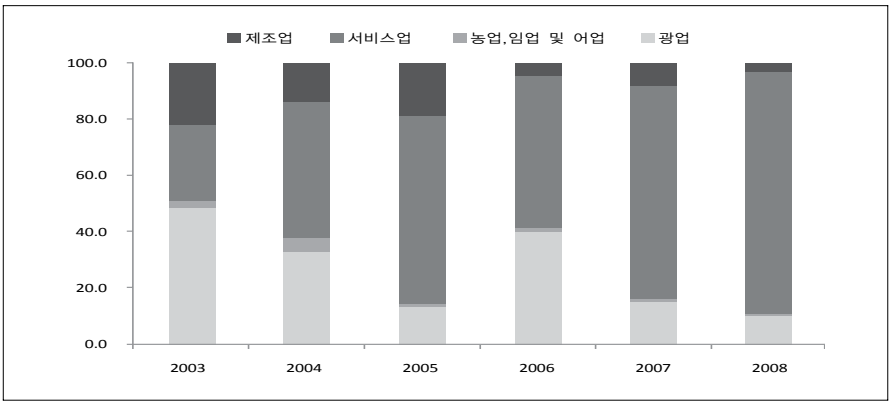
첫째, 산업의 분포 및 범위가 넓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농업, 자원개발, 공업품의 제조업, 교통운수, 금융업, 부동산업뿐 아니라 여행, 외식, 자문서비스, 과학기술개발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해외로부터 중국으로의 직접투자 유입의 경우는 제조업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중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서는 제조업분야로의 진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현재 중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진출이 해외시장 확장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중국이 생산원가 절감 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3) KOTRA(2010), 「제6회 외국인투자 포럼」.

그림 2-10. 중국의 산업별 해외투자비중 추이



주: CEIC에서 제공하는 중국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는 순해외직접투자(=실행된 해외직접투자 - 회수분)만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CEIC 데이터베이스.

셋째, 자원개발형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M&A 등을 통해 금융 등 서비스업의 해외투자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자원개발 관련 분야의 해외직접투자는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광업분야뿐만 아니라 농림어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또한 그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 일본

1)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특징

일본은 전형적인 해외직접투자 유출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2008년에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스톡 기준)은 GDP 대비 13.9%의 점유비중을 보였으나 유입액은 4.2%에 불과하다. 그 결과 유출입/유입액 비율이 3.3배로 한국 1.0배, 미국, 1.6배, 영국 1.2배, 독일 2.0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44)]

44) UNCTAD FDI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일본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법령 및 지원기구 설립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법규정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의 자본거래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이 법의 제23조와 제55조의3 제1항 6호에 의거하여 일본은행을 통해 재무대신에게 해외투자와 관련된 사전신고 혹은 사후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에서는 허가가 필요한 분야와 사전신고 및 사후신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크게 재무성, 경제산업성, 일본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 원활화와 지원에 대한 일본의 소관부처는 경제산업성이나 대부분의 업무는 JETRO 등 관련 지원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45]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2차 대전 이후 1951년부터 시작하였는데,[46] 1950년대에는 주로 북미시장 개척, 동남아지역의 자원개발 및 브라질에서의 방적업 투자 등이 중심이 되었으며, 자원개발형 투자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47]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개발도상국의 수입대체공업화에 대응한 투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연평균 직접투자액은 2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정 훈(2002)은 국제수지상의 제약으로 인해 대외적인 자본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은 바 있다.[48]

이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1972~73년이 제1차 해외직접투자 급증기이며, 이후 1986~90년을 제2차 급증기로 볼 수 있다.

---

45) 사공목(2006),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와 시사점」 참고.

46)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949년에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 Foreign Trade Control Law)과 1950년에 외자법(Foreign Capital Law)을 제정한 바 있다.

47) JETRO 해외직접투자 DB.

48) 정 훈(20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지역연구회시리즈 02-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70년대 일본은 국내 노동비용이 상승하고, 국제수지의 대폭적인 호전과 함께 해외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또한 기술력·자본력·경영관리기법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적극적인 해외활동에 나서면서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늘어났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신흥투자국의 하나로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일본의 투자는 동남아, 중남미 등 저개발국가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 주요 해외직접투자국인 미국이나 영국 등과는 차별적인 특징을 보였다. 즉 미국은 1972~76년 동안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 해외직접투자의 72.6%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으나,[49]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지역의 비중이 3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대부분 ASEAN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50]

한편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1986~90년까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국제순위에서 3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51] 실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983년 36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 480억 달러로 연평균 44.7%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이러한 급증의 원인으로 대다수 연구[52]는 해외직접투자와 환율의 상관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제1차 및 제2차 해외직접투자 급증기 모두 공통적으로 엔고상황이라는 점에 기인한다.[53]

또한 1980년대의 제2차 해외투자 급증기에는 1970년대와 달리 질적·양적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즉 건별 직접투자액의 규모도 확대되었고, 자원개발 및 제조업 직접투자의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금융, 보험업, 부동산

---

49)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50) JETRO 해외직접투자 DB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51) JETRO 해외직접투자 DB(www.jetro.go.jp/world/japan/stats/fdi/).

52) 정 훈(2002); 박상일(2003); 박영렬·이정렬·노정현(2008).

53) 그러나 김현성(2010)의 경우 엔고 때문에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가설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건수가 감소한 1990년대와 2000년대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생산'기능 보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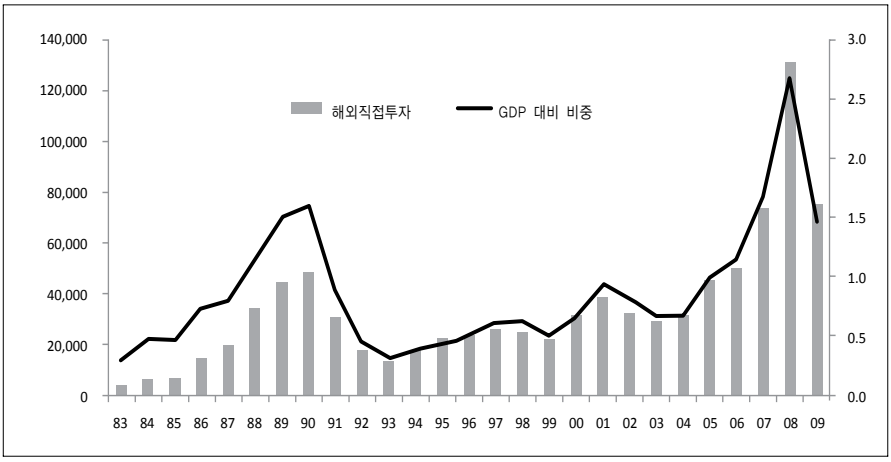
업 등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확대되는 특징도 보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미국 등의 선진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1980년대에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54]

1990년대 초반에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는 이 시기 발생한 일본의 버블붕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림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다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중국과 ASEAN 국가로의 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하여 2008년에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30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JETRO(2009)[55]는 2000년대 후반

그림 2-11.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및 GDP 대비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주: 1) JETRO에서 제공하는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는 순해외직접투자(=실행된 해외직접투자 - 회수분)만을 제공하고 있다.
2) 2009년 일본의 GDP는 추정치이다.
자료: JETRO;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online).

54) 정 훈(2002).

55) JETRO(2009), 『2009년판 무역투자백서』, p. 19(김현성 2009에서 재인용).

해외직접투자 급증의 원인을 국제 M&A 증가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대형화, 엔고와 세계적 주가하락, 금융기관의 IB 은행화, 자원확보형 투자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다시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2-11 참고).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를 M&A형과 그린필드형 등으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행의 발표자료를 통해서 이를 살펴보면, 최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M&A형 투자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08년 동안 일본의 해외투자는 M&A형 투자가 41.4%에서 58.3%로 증대된 반면, 그린필드형 투자와 재무체질개선 투자가 각각 22.4%에서 5.4% 및 12.2%에서 7.8%로 축소되었다.[56)]

[그림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국경간 M&A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들어서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일본기업의 국경간 M&A는 과거와 비교해볼 때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1990년대에는 M&A 건수 대비 금액은 상대적으로

표 2-9. 일본 해외투자의 목적별 분류

(단위: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M&A형 투자	41.4	64.1	56.9	63.0	58.3
그린필드형 투자	22.4	8.5	9.4	6.0	5.4
재무체질개선 투자	12.2	2.1	9.8	7.7	7.8
기타 투자	24.3	25.5	23.9	23.2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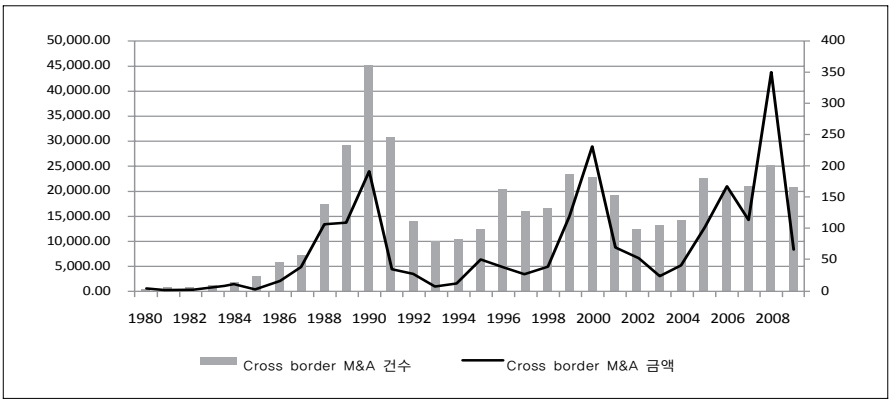
자료: 日本銀行, 「2005年の國際收支(速報) 動向」(2006. 3); 「2008年の國際收支(速報) 動向」(2009. 3).

56) 일본은행은 직접투자의 목적에 따라 해외투자유형을 M&A형 투자(발행주식을 취득하거나 유형고정자산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투자), 그린필드형 투자(최종 투자처에 대한 유형자산 증가를 초래하는 투자), 재무체질개선 투자(총자산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 부채변제를 위한 투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낮은 반면, 2000년대 이후 들어서는 과거에 비해 M&A 건수는 낮으나 금액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기업의 국경간 M&A가 건수 위주의 양적 측면보다 기업의 해외진출동기 등을 고려한 질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2-12. 일본기업의 국경간 M&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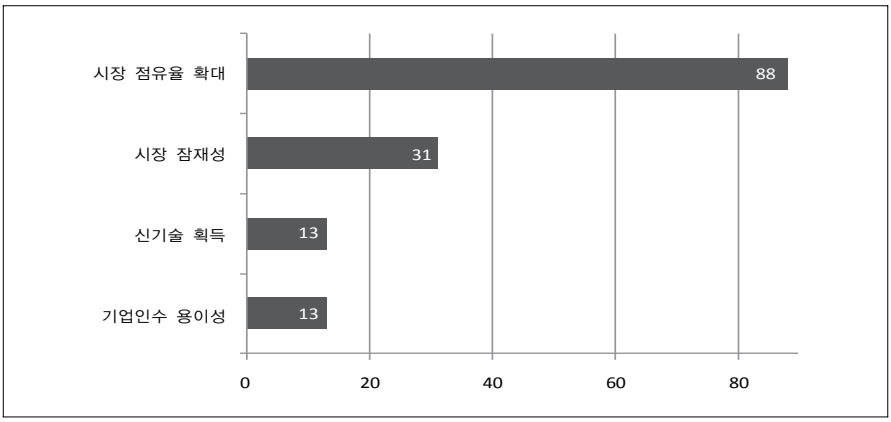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건)



자료: Thomson One DB(2010년 9월 기준).

그림 2-13. 일본기업의 M&A 동기

(단위: %)



주: 가로축은 응답자 비중을 나타내며, 중복응답에 따라 합계는 100%를 초과한다.
자료: Deloitte(2009), *Japanese Outbound M&A: Targeting Global Growth in Volatile Times.*

[그림 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국경간 M&A의 추진동기로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응답자의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동기로는 향후 시장잠재성(to expand into specific high growth economies), 신기술 획득(to acquire know- how/ technology)과 기업 인수 용이성(easier to acquire abroad than domestically)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투자대상지역별 현황과 특징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기간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미국이 속한 북미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북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06년에 27.7%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분석대상기간 동안 3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특히 1995~97년 및 1998~2000년에 일본의 북미지역 투자는 40%대의 높은 비중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일본기업이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로 인한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활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북미지역 다음으로 높은 해외투자비중을 보이는 지역은 서유럽이다. 1995~97년에는 서유럽이 11.2%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에는 25% 이상의 높은 해외직접투자비중을 보였다. 특히 EU 통화통합이 이루어진 1999년을 전후하여 서유럽권의 투자비중이 높아진 것은 일본기업들이 단일시장으로서의 EU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본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투자는 1995~97년에 18.2%의 비중을 보였으나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시기에 8.0%로 점유비중 면에서 크게 낮아졌다. 2001~03년 및 2004~06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1% 및 25.3%로 늘어났으나 최근에 다시 위축되었다.

한편 최근 일본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JOI(Japan Institute for Overseas Investment 2010)에 따르면, 일본의 중남미지역으로의 투자 확대는 케이맨제도로의 금융 및 보험 산업부문 진출과 브라질로의 광공업부문 진출 확대에 기인한다. 브라질 광공업 투자의 대부분은 브라질 철광석회사인 NAMISA의 40% 지분 소유에 따른 것으로, 이는 일본 주요 철강회사인 Nippion Steel Corporation 외 4개 기업과 한국의 POSCO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투자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국가는 미국, 네덜란드, 중국, 영국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표 2-10]와 연계해서 살펴보면, 일본의 최대 해외투자지역인 북미는 대부분 미국에 투자되고 있고, 미국 다음으로 높은 투자대상지역인 서유럽은

표 2-10. 일본의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

지역	1995~97년	1998~2000년	2001~03년	2004~06년	2007~09년
북미	39.9	42.9	30.0	27.7	32.5
서유럽	11.2	32.4	39.7	28.7	26.0
동북아	18.2	8.0	13.1	25.3	13.6
동남아	23.7	8.9	9.7	13.1	9.1
오세아니아	2.0	1.5	2.9	2.5	7.4
중남미	2.8	4.1	3.6	0.5	5.0
서남아	1.0	1.4	0.5	0.8	4.7
중동	0.6	0.4	0.1	0.6	0.9
남아프리카	0.4	0.4	0.3	0.5	0.4
중앙아/CIS	0.1	0.1	0.0	0.3	0.3

주: 동북아지역은 한·중·일 3국과 홍콩, 대만, 마카오, 몽골, 동남아지역은 ASEAN 10개국, 다른 지역은 World Bank의 지역분류와 동일하다.
자료: JETRO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네덜란드, 영국 등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08년에 중남미국가인 브라질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7위로 부상하였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과 한국 철강기업의 브라질 광공업기업 투자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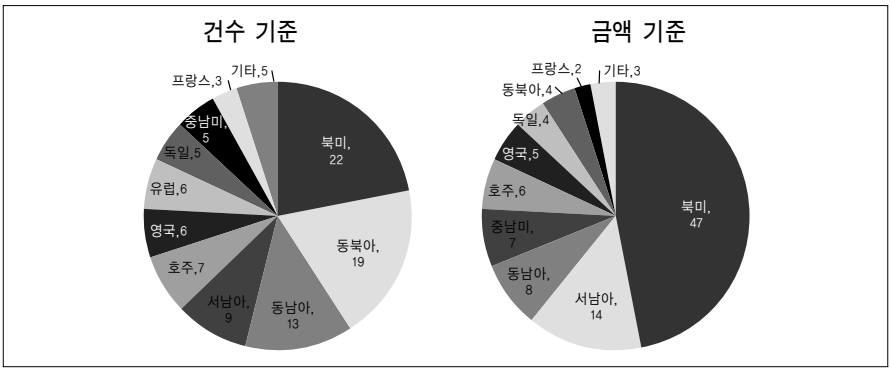
표 2-11. 일본의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1995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	미국	영국	네덜란드	미국	미국	미국	미국
2	중국	미국	미국	중국	네덜란드	네덜란드	케이맨제도
3	영국	네덜란드	중국	케이맨제도	영국	중국	네덜란드
4	호주	중국	케이맨제도	네덜란드	중국	케이맨제도	영국
5	프랑스	홍콩	호주	영국	말레이시아	호주	중국
6	인도네시아	태국	영국	태국	케이맨제도	영국	인도
7	네덜란드	스웨덴	파나마	한국	태국	태국	브라질
8	태국	한국	태국	홍콩	한국	룩셈부르크	호주
9	싱가포르	호주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독일
10	홍콩	대만	한국	캐나다	브라질	캐나다	한국

자료: OECD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그림 2-14. 일본의 국경간 M&A 주요 대상지역

(단위: %)



주: 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 1분기까지의 자료이다.
자료: Deloitte(2009), *Japanese Outbound M&A: Targeting Global Growth in Volatile Times*.

한편 최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M&A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최대 M&A 대상지역은 미국이 포함되는 북미지역으로 나타난다. 2008년에서 2009년 1분기 동안 일본기업의 국경간 M&A 건수에서 북미지역은 22%의 점유비중을 보이나 금액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4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M&A 건수에서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은 각각 19% 및 13%를 차지하여 미국이 포함되는 북미지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서남아와 동남아가 각각 14%와 8%를 차지하여 북미지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동북아는 4%로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일본의 해외 M&A 인수금액의 시기별·국가별 비중

(단위: %)

순위	1980~84년	1985~89년	1990~94년	1995~99년	2000~04년	2005~09년
1	미국 93.1	미국 81.3	미국 63.8	미국 37.4	미국 48.3	미국 40.2
2	스위스 6.9	영국 10.4	영국 10.2	네덜란드 29.6	영국 7.6	호주 10.7
3		호주 2.1	인도네시아 5.6	홍콩 4.5	네덜란드 7.4	영국 8.4
4		프랑스 1.0	홍콩 4.8	한국 4.1	중국 4.3	인도 8.4
5		앙골라 0.9	호주 3.7	호주 3.9	브라질 3.8	필리핀 6.5
6		홍콩 0.8	독일 1.8	영국 3.2	프랑스 3.8	브라질 4.0
7		독일 0.8	싱가포르 1.7	브라질 2.2	한국 3.3	말레이시아 2.7
8		벨기에 0.6	프랑스 1.5	태국 2.1	스웨덴 3.0	홍콩 2.4
9		인도네시아 0.5	네덜란드 1.0	필리핀 1.6	아제르바이잔 2.6	싱가포르 2.4
10		스페인 0.3	스페인 0.9	이탈리아 1.1	인도네시아 2.3	중국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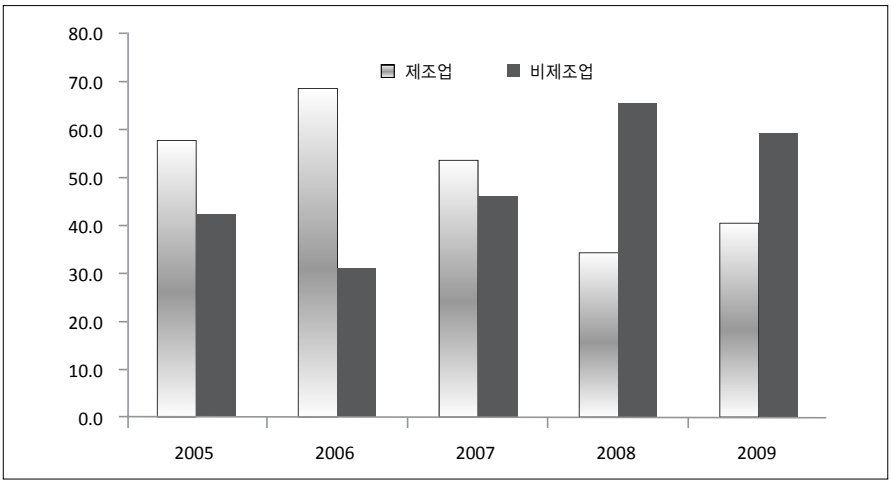
자료: Thomson one DB: M&A Deal statistics(2010년 9월 기준).

이와는 별도로 Thomson one DB를 통해서 일본의 M&A 인수실적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1980~2009년간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M&A 인수대상국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시기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까지는 미국의 비중이 약 90%에 이르렀으나 1990년대 이후 40~60%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미국 외에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3) 산업별 현황과 특징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2005~07년 동안 주로 제조업에서 이루어진 반면 2008년과 2009년에는 비제조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제조업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5 참고). 이는 최근 들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비제조업부문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15. 일본의 제조업 및 비제조업 해외투자비중 추이



주: CEIC에서 제공하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는 순해외직접투자(=실행된 해외직접투자 - 회수분)만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CEIC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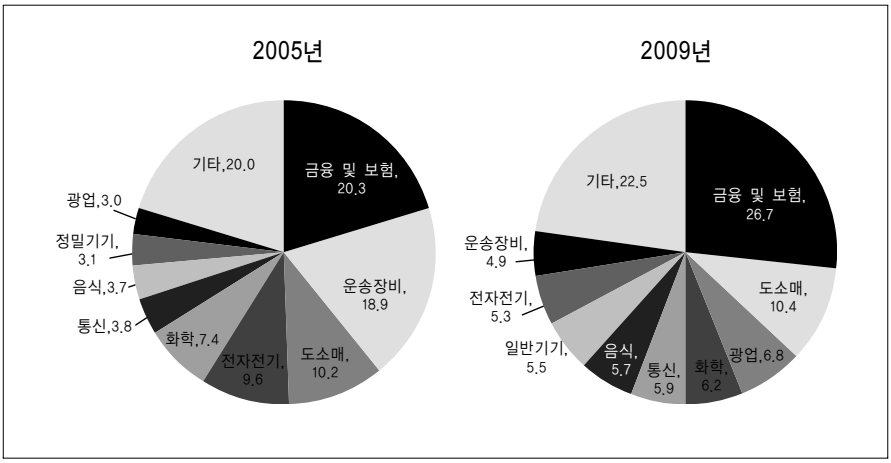
최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비제조업부문의 중요성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일본 금융기관의 자본기반(capital base)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의 해외투자 확대, 둘째, 천연자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광공업 관련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것이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2005년 및 2009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나타난다.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2005년과 2009년에 각각 20.3% 및 26.7%를 차지하였다.

금융 및 보험업 다음으로 높은 해외투자를 보인 산업은 2005년의 경우 운송장비(18.9%), 도소매(10.2%) 및 전자전기(9.6%) 등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에는 도소매(10.4%), 광업(6.8%), 화학(6.2%) 및 통신(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과거와 달리 비제조업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금융 및 보험업과 도소매업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 2-16. 일본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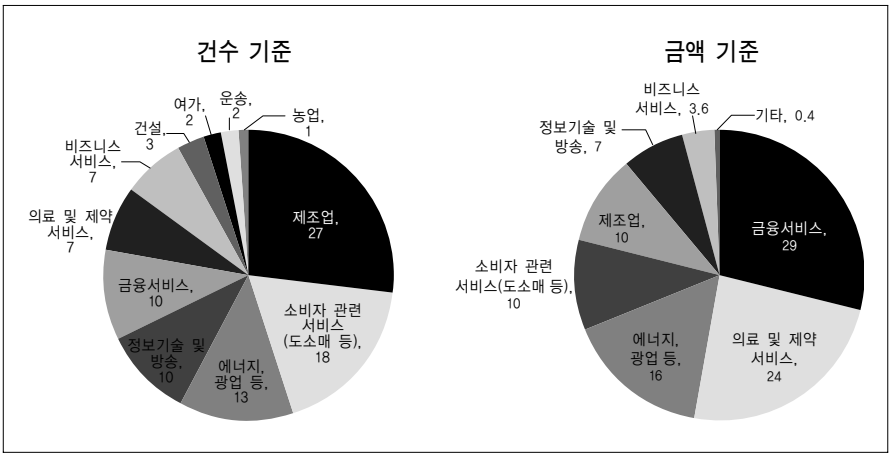
주: CEIC에서 제공하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는 순해외직접투자(=실행된 해외직접투자 - 회수분)만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CEIC 데이터베이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또한 '시장지향형' 성격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동아시아지역 내에서 그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동아시아지역의 경우 일찍부터 일본기업의 '생산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한 전체적인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시장'으로의 가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일본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M&A 투자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M&A 건수 기준으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가장 활발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금액 기준으로는 금융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중(27%)을 보이고 있어 최근 일본의 M&A가 금융서비스에 집중되고 있고 이는 M&A 형태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일본의 M&A에서 금액 기준으로 10%의 비중을 보여,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7. 일본의 국경간 M&A 주요 산업별 투자

(단위: %)



주: 2008년부터 2009년 1/4분기까지의 자료.
자료: Deloitte(2009), *Japanese Outbound M&A: Targeting Global Growth in Volatile Times.*

일본의 M&A에서 금융서비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산업은 건수 기준으로는 도소매 등의 소비자 관련 서비스(18%)이나 금액 기준에서 보면 의료 및 제약 서비스(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및 광업 부문은 일본의 국경간 M&A에서 건수 및 금액 부문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국경간 M&A에서 에너지 및 광업 부문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2.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일정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교역에 비해 아직 직접투자의 활성화 수준은 다소 미흡하며, 역내 직접투자 중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타 투자사례의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한·중·일 역내 직접투자의 특징을 산업별·유형별·목적별 요인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 한국의 역내 투자

1) 대중국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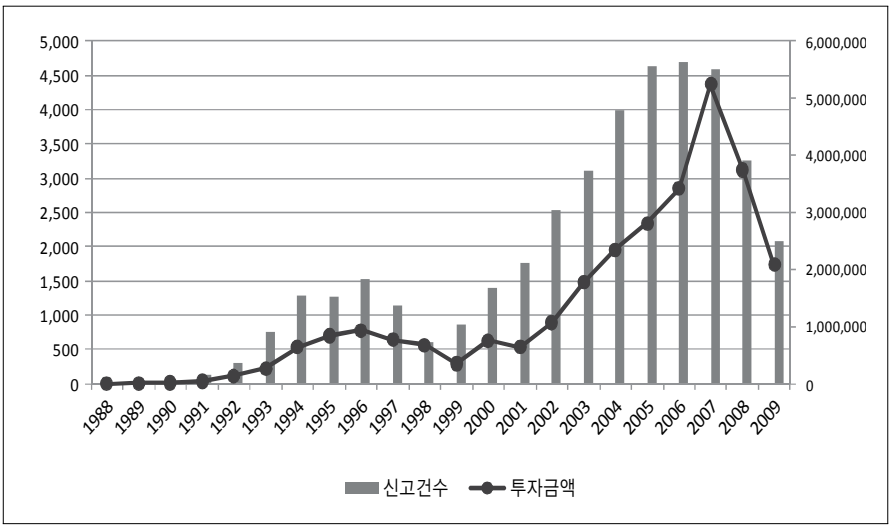
중국은 최근 미국을 제치고 한국 제1의 직접투자대상국으로 올라섰다. 연도별 대중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다소 감소하였던 것으로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투자 신고건수 및 금액 모두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다만 투자 신고건수와 금액의 변화 추이는 시기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이나 2007년 이후의 경우 투자 신고건수가 급감하는 데 비해 투자금액은 이보다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 경기악화 등 위험요인이 중국 내 진출한 중소규모의 기업들에 보다 큰 악재로 작용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급속하게 상승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요인은 중국의 저임 노동력 활용, 거대한 내수시장 공략 등이다. 실제 KOTRA(2009)의 「2009 중국 Grand Survey」[57]에 따르면 한국

그림 2-18.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천 달러)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DB(2010년 8월 기준).

57) KOTRA는 2004년부터 중국 내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 실태를 조사하여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에 반영한다는 목적 하에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경영성과 및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4,202개 표본기업을 선정하여 총 636개 기업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진출 기업별 경영성과, 경기 전망, 애로사항, 철수 및 이전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업의 중국투자의 주요 동기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34.0%), '저임 노동력 활용'(20.9%), '한국 내 경영환경 악화'(10.6%),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10.0%)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의 추세[58]를 통해 볼 때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으로 인한 요인은 감소하는 반면, 내수시장 공략에 따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비교적 최근에 진출한 기업일수록 기업의 활동형태가 '하청생산 후 수출', '독립적인 수출'보다는 '내수 판매' 중심이라는 조사결과 또한 이러한 근래의 변화를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표 2-13.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주요 분야별 직접투자

(단위: 천 달러)

분야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식료품 제조업	119,267	86,848	64,223	55,101
음료 제조업	6,244	22,547	14,622	47,488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73,987	127,981	44,445	42,35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99,681	198,763	142,745	149,3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6,098	129,321	75,090	46,1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42,733	52,113	74,216	145,183
1차 금속 제조업	98,811	175,243	169,717	68,60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46,509	210,974	123,749	92,13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88,730	1,479,839	408,839	429,73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3,748	244,912	255,059	103,5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3,738	411,442	328,424	160,34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3,205	297,503	355,960	114,043
기타 제품 제조업	54,477	30,732	53,891	51,832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DB.

58) KOTRA 중국 Grand Survey의 2004~09년간 조사결과에 근거.

이러한 기업들의 대중국 진출동기는 대중국 투자의 산업별·형태별 투자의 특성을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다.

일단 산업별 투자를 살펴보면 대중국 직접투자의 경우 2009년 현재 제조업이 79.3%로 여타 국가에 비해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59]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표 2-14. 한국의 설립형태별 대중국 투자 추이

연도	설립형태	신고건수		투자금액	
		건수	비중(%)	금액 (천 달러)	비중(%)
1990	신설법인 설립	50	98.0	16,173	100.0
	기존 법인 지분 인수	1	2.0	0	0.0
1995	신설법인 설립	1,252	98.6	815,913	96.9
	기존 법인 지분 인수	18	1.4	26,221	3.1
2000	신설법인 설립	1,370	97.9	694,279	91.8
	기존 법인 지분 인수	29	2.1	61,984	8.2
2005	신설법인 설립	4,496	97.2	2,493,052	88.7
	기존 법인 지분 인수	130	2.8	316,582	11.3
2009	신설법인 설립	1,948	93.3	1,892,212	90.9
	기존 법인 지분 인수	141	6.7	189,726	9.1
1990~2009 누적	신설법인 설립	38,465	96.2	24,309,812	85.0
	기존 법인 지분 인수	1,504	3.8	4,284,637	15.0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DB.

59) 2009년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9%이며, 대미국 직접투자의 경우 광업(17.5%), 제조업(19.3%), 도매 및 소매업(23.6%),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7.2%)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홍콩은 금융 및 보험업이 가장 높은 비중(51.7%)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와 통신설비 제조업에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여타 산업에 비해 '내수시장', '저임 노동력' 등의 요인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대표적인 산업분야이다. 주요 기업의 진출사례를 보아도 마찬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2008년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내 500대 외상기업에 속하는 한국기업은 총 33개인데, 이 중 23개 기업이 전기·전자분야 제조업에 해당한다.[60)]

한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신규법인 설립이 거의 대부분이며, 기존 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즉 M&A 형태는 건수뿐 아니라 금액 면에서도 매우 미흡하다. 2009년을 기준으로 신규법인의 설립비중이 투자건수 기준으로 93.3%,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누적투자를 기준으로 보아도 전체 투자건수의 96.2%, 투자금액의 85%가 신규법인 설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homson one DB를 통해 살펴보면 한국의 M&A형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의 중요도는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000년 이전까지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인수사례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01~09년의 기간 동안 전체 M&A 인수금액의 6.9%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 특히 2003년의 경우만 보면 해당 연도 전체 인수금액의 70.9%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M&A 인수대상국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해보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그린필드형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은 중국 내수시장 판매를 위한 목적보다는 해외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중국 내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점차 중국 내수 판매비중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

60) 中国 外商投资企业协会(2009), 「2007-2008年度全国最大500家外商投资企业」.

표 2-15. 한국의 최근 대중국 M&A 인수실적 추이

연도	대세계 M&A 인수 총액		대중국 M&A 인수금액		중국의 비중	
	금액 (백만 달러)	건수	금액 (백만 달러)	건수	금액 기준 (%)	건수 기준 (%)
2000	2445.35	14	-	1	-	7.1
2001	208.91	31	121.65	9	58.2	29.0
2002	69.45	15	41.55	4	59.8	26.7
2003	662.87	37	469.97	17	70.9	45.9
2004	260.35	18	12.90	2	5.0	11.1
2005	259.34	26	40.82	5	15.7	19.2
2006	4242.32	51	585.63	7	13.8	13.7
2007	6893.63	54	331.40	8	4.8	14.8
2008	7663.38	78	164.31	9	2.1	11.5
2009	6580.06	64	72.22	5	1.1	7.8

자료: Thomson one DB: M&A deal statistics(2010년 9월 기준).

한편 KOTRA(2009)에서 중국 내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느끼는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기업환경이 상당 부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속되는 중국 내 인건비 등 비용상승, 가공무역금지품목 확대, 노동관계법 강화 등의 요인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시장 위축 등으로 제조업의 여건은 어려워졌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우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에 따라 기업경영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보았다. 한국기업들은 중국 진출 당시에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정보부족, 행정불투명성, 고급인력 채용의 어려움, 언어소통 등을 지적하였으며, 현지 경영활동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및 물가 등 비용상승, 정보부족, 행정불투명성을 꼽았다.[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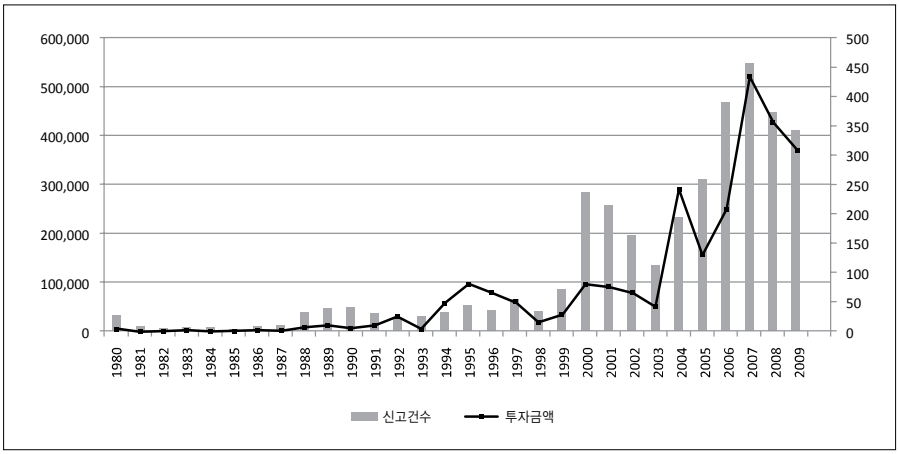
2) 대일본 투자

한국의 대일본 직접투자의 경우 한국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flow 기준으로 약 1.9%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일 직접투자는 일본 중견기업의 취득, 일본 내 판매거점 및 R&D 거점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규모 및 성장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의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우선순위에서 일본은 중국, 미국, EU 등에 비해 뒤처져 있다. 2000년대 초반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한 바 있으나, 이때도 실제 투자금액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다. 다만 2004~06년 경부터 신고건수 및 투자금액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일본 직접투자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이 5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비중은 투자건수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평균적으로

그림 2-19. 한국의 대일본 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건)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DB.

61) KOTRA(2009), 「2009 중국 Grand Survey」.

표 2-16. 한국의 산업별 대일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업 종	1996~2000년		2001~05년		2006~09년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0.2	0.0	0.2	0.0	3.7	2.0
광업	0.0	0.0	0.1	0.1	0.0	0.0
제조업	21.0	13.1	19.8	12.5	15.7	13.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	0.0	0.0	0.0	0.3	0.2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0.0	0.0	0.0	0.0	0.4	0.0
건설업	0.2	0.0	0.4	0.1	1.0	0.4
도매 및 소매업	25.1	39.7	24.9	38.5	22.8	10.2
운수업	3.5	1.3	0.9	0.3	1.8	0.8
숙박 및 음식점업	1.2	0.1	2.4	2.5	7.3	1.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6.0	12.5	6.9	8.8	19.4	17.5
금융 및 보험업	3.7	11.7	0.1	0.5	1.0	15.6
부동산업 및 임대업	31.8	14.3	30.2	18.7	10.4	24.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	4.7	1.6	1.7	2.6	0.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5	0.1	1.7	0.3	1.6	0.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	0.0	0.0	0.0	0.2	0.1
교육서비스업	0.2	0.0	0.3	0.0	0.3	0.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9	0.5	0.0	0.0	0.1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8	0.7	8.9	15.2	10.8	13.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	1.0	1.5	0.8	0.8	0.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생산활동	0.0	0.0	0.1	0.0	0.0	0.0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DB.

12~13% 수준을 유지하는 등 이전부터 낮은 비중을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 대일본 직접투자 산업별 분포 변화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규모는 적으나 '농업, 임업 및 어업' 또한 2006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대일본 투자 또한 신규법인 설립 비중이 매우 높으며, 기존 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즉 M&A 형태는 건수뿐 아니라 금액 면에서도 비중이 매우 작다. 다만 최근 M&A 형태의 투자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 신규법인 설립비중이 99%에 이르던 것이 꾸준히 감소하여 2009년을 기준으로 신규법인 설립비중은 투자건수 기준으로 76.5%,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87.1%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7. 한국의 설립형태별 대일본 투자 추이

연도	설립형태	신고건수		투자금액	
		건	비중 (%)	금액 (천 달러)	비중 (%)
1990	신설법인 설립	40	100	6,767	100
	기존 법인 지분 인수	-	-	-	-
1995	신설법인 설립	46	100	96,343	100
	기존 법인 지분 인수	-	-	-	-
2000	신설법인 설립	236	99.6	94,710	98.1
	기존 법인 지분 인수	1	0.4	1,846	1.9
2005	신설법인 설립	217	83.8	113,198	72.6
	기존 법인 지분 인수	42	16.2	42,808	27.4
2009	신설법인 설립	263	76.5	327,099	87.1
	기존 법인 지분 인수	81	23.5	48,239	12.9
1990~2009 누적	신설법인 설립	2,759	87.6	2,237,144	81.8
	기존 법인 지분 인수	389	12.4	496,523	18.2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DB.

표 2-18. 한국의 최근 대일본 M&A 인수실적 추이

연도	대세계 M&A 인수 총액		대일본 M&A 인수금액		일본의 비중	
	금액 (백만 달러)	건수	금액 (백만 달러)	건수	금액 기준 (%)	건수 기준 (%)
1990~99	6766.6	146	171.8	10	2.5	6.8
2000	2445.35	14		1		
2001	208.91	31				
2002	69.45	15				
2003	662.87	37		1		2.7
2004	260.35	18		3		16.7
2005	259.34	26		1		3.8
2006	4242.32	51	16.9	2	0.4	3.9
2007	6893.63	54	128.6	9	1.9	16.7
2008	7663.38	78	127.8	6	1.7	7.7
2009	6580.06	64	10.4	4	0.2	6.3

자료: Thomson one DB: M&A deal statistics(2010년 9월 기준).

또한 Thomson one DB를 통해 살펴보면 한국의 대일본 M&A 인수실적은 그 규모 면에서도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한 증가추세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즉 아직까지는 한국기업들에 있어 일본기업들이 M&A 인수대상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대일본 직접투자의 경우 그 비중이 크지 않아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여건에 대한 기존 설문조사 사례는 전무하다. 다만 [표 2-19]와 같이 JETRO(2008)가 일본 내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경영활동상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가장 많이 제기된 것이 인재 확보의 어려움(66.2%)이었다.[62]

62) 부족한 인력으로 '기술직 엔지니어'(33.7 %), '언어숙달자'(26.2 %), '관리직'(23.6 %)을 제시한 기업이 많았으며, 특히 숙련공 엔지니어의 확보가 어려운 기업의 비율은 이전 조사결과인 27.8%에서 약 6%포인트가 증가하였다.

표 2-19. 일본 내 외자기업의 운영상 어려움

내용	1995년		2006년		2007년	
	n	%	n	%	n	%
인재 확보의 어려움	249	40.4	623	66.6	572	66.2
제품요구수준 강화	319	51.8	622	66.5	515	59.6
사업비용	433	70.3	613	65.5	520	60.2
폐쇄성/특수성	349	56.7	449	48.0	437	50.6
규제/인허가			246	26.3	183	21.2
행정절차	167	27.1	225	24.0	181	20.9
정보·서비스 부족	111	18.0	129	13.8	123	14.2
불충분한 우대조치	137	22.2	134	14.3	125	14.5
자금조달	98	15.9	78	8.3	75	8.7
외국인주거환경	51	8.3	104	11.1	94	10.9
인프라	77	12.5	87	9.3	81	9.4
답변기업 수	616		936		864	

주: 각 항목에 대하여 기업별로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설문을 실시.
자료: JETRO(2008), 「第13回 対日直接投資に関する 外資系企業の意識調査」.

그 밖에 '사업비용 증가'(60.2%), '제품요구수준 강화'(59.6%), '일본시장의 폐쇄성 및 특수성'(50.6%) 등의 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규제 인허가' 문제를 제기하는 기업의 비중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각각 29.5%, 26.3%, 21.2%로 감소추세에 있다.

나. 중국의 역내 투자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투자대상국가로서 동북아 역내 국가인 한국, 일본의 중요도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1990년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를 넘지 않았으

며, 2008년 기준으로도 2.9%(약 3.4억 달러)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도 2008년 중국의 직접투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일본 총외국인직접투자의 0.2%(약 0.6억 달러)에 불과하였다.[63] 본 절에서는 중국의 대한국, 대일본 직접투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역내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다만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중국정부에서 발표되고 있는 통계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한국 및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유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같이 참고하였다.[64]

1) 대한국 투자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2008년 현재 중국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2%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며, 집계된 통계의 대상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그 추세를 보기는 어려우나 중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 대한국 투자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0.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투자	2854.65	5497.99	12261.17	17633.97	26506.09	55907.17
대한국 투자	153.92	40.23	588.82	27.32	56.67	96.91
비중(%)	5.4	0.7	4.8	0.2	0.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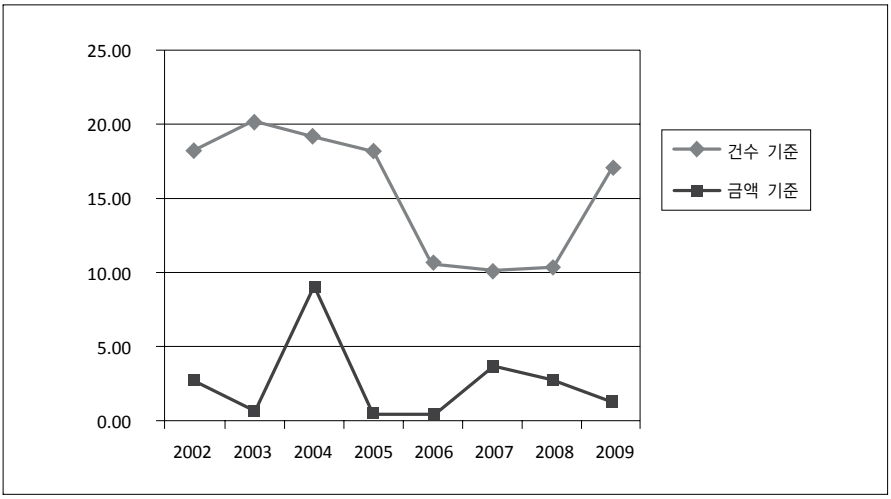
자료: 中國 商務部(2009), 「2008年度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63) Zhang Qi & Lu Gang(2010).

64) 개념적으로는 중국의 대한국 해외직접투자와 한국의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일치하나 중국기업들의 경우 중국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투자하게 되면서 실제 양국 발표 통계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2-20.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입에서의 중국 비중

(단위: %)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DB.

또한 중국의 대한국 투자의 경우 건별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2007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FDI 유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투자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몇몇 M&A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금액이 작은 업종인 요식업, 무역, 운송 등의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 데 따른 특성으로 보여진다.

중국의 최근 대한국 M&A 인수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까지 전무하던 것이 아직 그 규모는 미흡하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조금씩 인수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 대한국 직접투자를 산업별 혹은 투자형태별로 집계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신 한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통계[65]를 통해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의 경우 신고건수로는 서비스업의

표 2-21. 중국의 최근 대한국 M&A 인수실적 추이

연도	대세계 M&A 인수 총액		대한국 M&A 인수금액		한국의 비중	
	금액 (백만 달러)	건수	금액 (백만 달러)	건수	금액 기준	건수 기준
2000	640.1	33				
2001	588.2	33				
2002	2,540.6	49	440.0	2	17.3%	4.1%
2003	958.5	31		1		3.2%
2004	1,383.0	59	622.4	2	45.0%	3.4%
2005	6,286.6	53				
2006	13,741.7	77				
2007	28,914.7	132				
2008	14,294.9	132	43.0	4	0.3%	3.0%
2009	10,144.4	98	2.9	1	0.0%	1.0%

자료: Thomson one DB: M&A deal statistics(2010년 9월 기준).

비중이 약 90%에 이르고, 제조업이 7.8%에 불과하나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56.7%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업의 건당 투자액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이 가장 큰 것은 도소매유통부문으로, 신고건수는 총투자의 76.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실제 신고된 투자금액은 전체 투자의 11.2%에 불과하다. 한편 투자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운송용 기계(25.6%), 비즈니스서비스업(24.6%), 화공(21.9%), 도소매유통(11.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6)]

65) 지식경제부의 외국인투자 통계 DB(www.mke.go.kr/info/foreigner) 2010년 8월 통계 기준.

표 2-22. 중국의 산업별 대한국 직접투자(2009년 기준)

구분	신고건수		신고금액	
	건	비중(%)*	금액(달러)	비중(%)*
제조업 전체	456	7.8	1,474,744	56.7
식품	50	0.9	3,757	0.1
섬유·직물·의류	45	0.8	2,918	0.1
제지·목재	11	0.2	1,996	0.1
화공	70	1.2	568,631	21.9
의약	7	0.1	822	0.0
비금속광물	16	0.3	1,373	0.1
금속	33	0.6	10,061	0.4
기계·장비	19	0.3	2,751	0.1
전기·전자	101	1.7	208,271	8.0
운송용 기계	51	0.9	666,313	25.6
기타 제조	53	0.9	7,852	0.3
서비스업	5,286	90.6	1,112,067	42.8
도·소매(유통)	4,479	76.8	290,280	11.2
음식·숙박	444	7.6	27,693	1.1
운수·창고(물류)	104	1.8	21,243	0.8
금융·보험	7	0.1	824	0.0
부동산·임대	29	0.5	110,844	4.3
비즈니스서비스업	107	1.8	640,268	24.6
문화·오락	36	0.6	15,369	0.6
공공·기타 서비스	80	1.4	5,545	0.2

주: * 전체 산업 대비 비중.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DB(www.mke.go.kr) 2010년 8월 기준.

중국기업들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BOE의 하이닉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사례나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사례와 같이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66) 연차별 통계는 해당 연도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2000~09년 누적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M&A형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 각 연도별로 주요 투자업체를 살펴보면, 2002년에는 경동방하이텍(BOE)이 하이디스에 1.5억 달러, 상하이자동차(SAIC)가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에 6,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2004년의 경우 신고건수에 비해 신고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5.6억 달러), 중국석유화공공사의 인천정유 인수(5.5억 달러) 등에 따른 것이다. 또한 2007년 및 2008년에는 Dongtai Huaan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가 한·중미래도시개발주식회사에 각각 3억 달러씩 투자한 바 있다. 다만 위 금액은 신고 기준으로 2002~09년간의 실제 투자 도착률은 78.7%이며, 경동방하이테크 및 상하이 자동차의 투자건 외의 도착률은 15.3%에 불과한 등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투자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67]

또한 중국기업 투자대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도 높지 않아 앞으로의 투자 또한 단기적으로는 크게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2009)의 「2009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현황 및 의식 조사」[68]에 따르면 향후 3~5년간 해외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을 선호하는 비율은 10%인 반면, 중국기업들은 투자대상국으로 베트남(25%), 미국(20%), 태국(15%), 호주(15%), 캐나다(13%), 싱가포르(12%), 독일(12%) 등 동남아시아 및 북미 지역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 보고서에서 실시한 설문결과 중국기업의 향후 해외투자의 주요 목적은 해외시장 확대(37%), 생산비용 절감(31%), 외국의 기술과 경험 확보(30%), 천연자원 개발 및 확보(25%), 유명 국제브랜드 확보(24%), 해외무역장벽 우회(22%) 등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의 경우도 기술과 경험 확보, 브랜드 확보, 무역장벽 우회 등의 목적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상 그 매력도가

67) KOTRA(2010. 7. 12),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FDI Theme Report 10-007 참고.

68) 中国 国际贸易促进委员会(2009. 4), 「2009年中国企业对外投资现状及意向调查报告」.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해외시장 확대, 생산비용 절감, 천연자원 개발 및 확보 등이 목적일 경우는 더더욱 적합한 투자대상지역으로 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중국의 대한국 투자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 등이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표 2-23]과 같이 상무부에서 2004년 발표한 「대외 국별 산업별 지도목록」의 한국에 대한 투자 및 인수 장려산업들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주요 장려업종을 통해서 볼 때 중국정부는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를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화공, IT 산업 부문과 무역, 유통 부문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한국의 기술력 습득에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해보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그 규모 면에서나 성장률 면에서도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 단순무역업 등 소규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향후 투자대상국가로서 한국의 매력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기업과의 M&A를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중국의 한국 내 투자에 대한 서로의

표 2-23. 중국정부의 대한국 투자 및 인수 장려업종

제조업	- 자동차 등 교통운송설비 제조 - 화공원료 제조 -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
서비스업	- 무역 유통 - R&D, 건축 - 건축 교통운송

자료: 中国 商务部(2004), 「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

입장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즉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 한국의 기술, 경영, 인력 양성 노하우의 습득에 관심이 높으나 우리의 경우 지역개발, 부동산 등 실문분야 투자 유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 팽배해 있는 중국자본 유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주요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등 좋지 않은 선례들로 인하여 중국자본의 유입과 관련한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69] 이와 더불어 변웅재(2010)에 따르면 중국기업들이 한국 투자실무절차와 관련하여 '한국 방문 시 비자 발급 관련 불편', '회사 설립에 비해 공장 신설 등의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 '중국기업의 첨단업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족', '조선업, 금융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진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0]

2) 대일본 투자

중국의 대일본 직접투자는 대한국 투자보다도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표 2-24]와 같이 2003~08년 동안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4. 중국의 대일본 직접투자 추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투자	2854.65	5497.99	12261.17	17633.97	26506.09	55907.17
대일본 투자	7.37	15.3	17.17	39.49	39.03	58.62
비중(%)	0.3	0.3	0.1	0.2	0.1	0.1

자료: 中國 商務部(2009), 「2008年度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69) 김종철(2010. 8. 30),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접근」, 제6회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 발표자료..

70) 변웅재(2010. 8. 30), 「중국투자 유치 법률적 고려사항」, 제6회 외국인투자 전문가포럼 발표자료..

일본 재무성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통계를 살펴보면, 중국의 대일본 직접투자의 경우도 대한국 투자와 마찬가지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특히 무역업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투자의 비중은 건별로는 86.0%, 금액으로는 62.3%이었으며, 무역업은 이 중 45.9%, 3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1)]

중국의 최근 대일본 M&A 인수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까지 전무하던 것이 아직 그 규모는 아직 미흡하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조금씩 인수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일본 투자의 경우 한국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일본기업들이 가지는 기술이나 브랜드 파워를 고려할 때 M&A를 통한 투자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 진다. 최근 중국의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표 2-25. 중국의 최근 대일본 M&A 인수실적 추이

연도	대세계 M&A 인수 총액		대일본 M&A 인수금액		일본의 비중	
	금액 (백만 달러)	건수	금액 (백만 달러)	건수	금액 기준 (%)	건수 기준 (%)
2000	640.1	33				
2001	588.2	33		1		3.0
2002	2,540.6	49				
2003	958.5	31		2		6.5
2004	1,383.0	59	3.6	1	0.3	1.7
2005	6,286.6	53	11.2	1	0.2	1.9
2006	13,741.7	77	306.7	4	2.2	5.2
2007	28,914.7	132	309.5	1	1.1	0.8
2008	14,294.9	132	2.1	5	0.0	3.8
2009	10,144.4	98	21.0	3	0.2	3.1

자료: Thomson one DB: M&A deal statistics(2010년 9월 기준).

71) 일본 재무성(Ministry of Finance) 자료의 경우 국가별/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통계는 2004년까지만 제공하고 있어 여기서는 2000~04년간 누적액을 바탕으로 산정하였다(http://www.mof.go.jp/english/e1c008.htm).

썬텍파워가 일본 MSK를 사들인 것이나, 자동차 업체 BYD가 오기하라 자동차 금형 공장을 인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데이코쿠데이터뱅크의 조사[72]에 따르면 중국기업이 출자한 일본기업의 수는 2010년 6월 현재 611개사로 5년 전 233개사에서 약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규모가 '1억 엔 이상 10억 엔 미만'인 중소기업이 202개사(구성비 4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 또한 도매업(특히 전기기기, 식품, 섬유 관련 무역회사)이 323개사로 가장 높은 비중(구성비 52.9%)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인 현황을 볼 때 중국의 대일본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표 2-26. 중국기업의 일본기업 인수합병 주요 사례

인수시기	중국기업	일본기업	금액(엔)
2002년 2월	상하이자동차	아키야마(인쇄기 제조)	20억
2006년 6월	상더태양에너지전력	MSK(태양전지 소재)	123억
2009년 1월	차이나새트콤	다보리낙스(IT 서비스)	10억
4월	베이징타이더제약	LTT바이오파머(제약)	2억
6월	쑤닝전기	라옥스(가전양판점)	19억
12월	닝보원성	닛코전기공업(자동차부품)	12억
2010년 2월	랴오닝첨단에너지	에바테크(태양전지 소재)	45억
2월	머라이언홀딩스	혼마골프	미상
4월	비야디	오기하라(자동차금형)	미상
5월	중신그룹	히가시야필름(화학)	13억
5월	산둥루이커지	레나운(의류)	40억

자료: Kotra(2010),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FDI Theme Report 10-007.

72) TDB(2010. 7. 8), 「中国企業による日本企業への出資実態調査」(http://www.tdb.co.jp/report/watching/ press/pdf/p100702.pdf).

중국의 대일본 투자 실적이 미흡한 이유 또한 중국의 대한국 투자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2009)의 「2009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현황 및 의식 조사」[73]에서 3~5년 이내 투자대상국 선호도에서 일본의 비중은 한국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또한 중국의 주요 해외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면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외국의 기술과 경험 확보', '유명 국제브랜드 확보'면에서는 한국보다 좀더 양호한 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대일본 직접투자의 경우도 그 비중이 크지 않아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여건에 대한 기존 설문조사 사례는 전무하다. 다만 여기서도 JETRO(2008)가 일본 내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일본 내 경영활동상 주요 장애요인을 확인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내 외자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인 "인재 확보의 어려움", "사업비용 증가", "제품요구수준 강화", "일본시장의 폐쇄성 및 특수성" 등은 중국기업들에도 마찬가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74]

표 2-27. 중국정부의 대일본 투자 및 인수 장려업종

제조업	-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 - 인쇄기계 제조 - 계측기 및 문화사무용품 기계 제조
서비스업	- 무역, 유통 - R&D, 건축 - 소프트웨어 개발 - 교통운송

자료: 中国 商务部(2004), 「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

73) 中国 国际贸易促进委员会(2009. 4), 「2009年中国企业对外投资现状及意向调查报告」.

74) 자세한 내용은 83페이지 [표 2-19] 및 이에 대한 부가설명 참고.

중국의 대일본 투자정책에 대해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무부에서 2004년 발표한 「대외 국별 산업별 지도목록」의 일본에 대한 투자 및 인수 장려산업들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주요 장려업종을 통해서 볼 때 중국의 대일본 투자 또한 크게 일본의 기술력이 높은 분야와 기본적인 무역, 유통 관련 분야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나타나 있으며, 이는 설문 등을 통해 나타난 특성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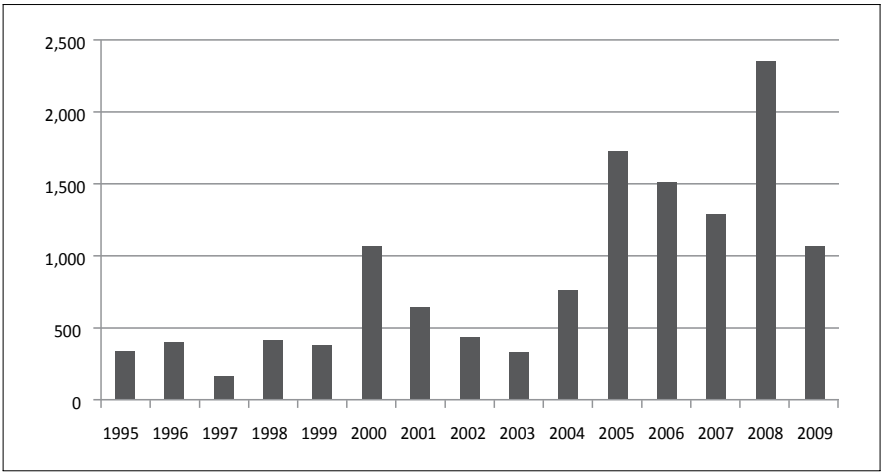
다. 일본의 역내 투자

1) 대한국 투자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2009년 현재 약 10.8억 달러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총액 중 약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1.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JETRO Investment Statistics(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 2010년 8월 기준 자료.

표 2-28. 일본의 산업별 대한국 직접투자(2009년 기준)

(단위: 달러)

구분		신고건수		신고금액	
		건	비중(%)*	금액	비중(%)*
제조업 전체		2,023	38.6	8,834,726	56.0
	식품	90	1.7	94,993	0.6
	섬유·직물·의류	57	1.1	45,243	0.3
	제지·목재	21	0.4	16,301	0.1
	화공	260	5.0	1,080,100	6.8
	의약	18	0.3	15,258	0.1
	비금속광물	77	1.5	1,413,382	9.0
	금속	141	2.7	305,820	1.9
	기계·장비	352	6.7	654,195	4.1
	전기·전자	676	12.9	4,473,724	28.4
	운송용 기계	211	4.0	578,738	3.7
	기타 제조	120	2.3	156,974	1.0
서비스업		3,109	59.3	6,884,379	43.6
	도·소매(유통)	1,491	28.5	1,578,753	10.0
	음식·숙박	184	3.5	905,129	5.7
	운수·창고(물류)	137	2.6	98,690	0.6
	통신	28	0.5	581,642	3.7
	금융·보험	252	4.8	1,179,849	7.5
	부동산·임대	112	2.1	205,468	1.3
	비즈니스서비스업	687	13.1	1,848,026	11.7
	문화·오락	101	1.9	396,188	2.5
	공공·기타 서비스	117	2.2	90,634	0.6

주: * 전체 산업 대비 비중.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DB(www.mke.go.kr) 2010년 8월 기준.

일본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자료는 재무성에서 2004년 자료까지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제조업부문이 해외직접투자의 건수 및 금액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부족으로 2004년 이후 일본의 대한국 해외직접투자는 한국(지식경제부)에서 집계한 대일본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통해 산업별 투자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보면 한국 내로 유입된 일본의 투자는 제조업이 투자건수로는 38.6%, 투자금액으로는 56.0%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전기·전자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여전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기전자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의 한국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건수는 제조업보다 높은 59.3%를 차지하고 있지만 금액 기준에서는 제조업보다 낮은 43.6%의 점유비중을 보였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업(28.5%), 비즈니스 서비스업(13.1%)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75]

한편 일본의 JETRO(2010)[76]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해당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77]

해당 설문결과를 보면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경우 수출을 하는 기업의

75)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통계 DB(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2010년 8월 검색.

76) JETRO는 2009년 9월 1일~10월 31일의 기간 동안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진출한 일본계기업 2,990개사를 대상으로 현지 경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77) 물론 2009년 설문에 응답한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81개사의 답변을 근거로 살펴보는 것이므로, 일본의 한국 투자 전체 상황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기타 통계가 제한적이므로 정성적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자료를 참고하였다.

비중이 45.7%에 불과하여 중국(64.0%), 대만(69.6%), 홍콩(57.8%) 등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16.4%에 불과하였다. 일본으로 역수출되는 비율 또한 34.3%로 중국(60.6%)에 비해 낮고 중국, ASEAN, 미국, 유럽 등 각 국가별로 고르게 수출되고 있다. 이는 많은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목적이 한국 국내기업에 부품 등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부품조달처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경영상 애로점으로 원화의 엔화 환율변동, 종업원 임금상승, 경쟁업체 증가(비용 측면의 경쟁), 조달비용 상승,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 한계점에 이른 비용절감, 원재료 및 부품의 현지 조달 어려움, 원화의 달러 환율변동, 판매시장의 침체(소비침체), 신규고객 확보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78] 대만, 중국, 홍콩 등과 비교할 때 환율변동 및 종업원 임금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세무 및 통관, 자금결제규정 등의 제도적 여건이나 인적자본 조달여건, 품질관리여건 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동북아지역 내 국가 중에서 한국 내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2년 내 투자확대의사가 있는 기업이 60.5%로 대만 등에 비해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다만 투자 확대방식은 추가투자를 통한 규모확대보다는 신규시장 개척, 사업다각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서울재팬클럽(SJC)은 1998년부터 한국정부에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2009년의 보고서를 보면, 노동·노사, 금융, 세무, 지식재산, 개별 안건, 생활 관련 등 총 45개 항목에 대해 건의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노동문제의 진전 없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78)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였다.

건의사항이 가장 많은 17개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특허출원절차 개선, 디자인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요건 개선, 일본 술의 상표등록 등이 해당된다.

표 2-29. 일본기업의 대한국 투자의 주요 목적

구분	2008년		2009년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인적자원	4	14.8	4	12.9
저렴한 노동력	1	3.7	-	-
저렴한 원재료	-	-	2	6.5
조립 공급기지	2	7.4	5	16.1
산업집중도	4	14.8	8	25.8
타국의 위험 분산목적	-	-	-	-
일본의 수출기지	1	3.7	-	-
제3국 수출기지	1	3.7	-	-
원료조달 이점	-	-	2	6.5
내수시장	15	55.6	18	58.1
내수시장 잠재성	13	48.1	17	54.8
내수시장 수익성	4	14.8	4	12.9
제품개발기지	1	3.7	2	6.5
투자지역 인프라	10	37.0	8	25.8
투자지역 물류서비스	4	14.8	2	6.5
투자에 따른 세제 특혜	2	7.4	1	3.2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2	7.4	-	-
안정적인 사회 및 정치적 환경	3	11.1	7	22.6
총응답자 수	27	100.0	31	100.0

자료: Japan Finance Corporation(2009), *Survey Report on Overseas Business Operations by Japanese Manufacturing Companies*,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FC(2009)는 한국이 해외투자 지역으로 검토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총설문기업(31개사)의 58.1%(18개사)가 한국 내수시장의 규모를, 54.8%(17개사)가 미래 내수시장의 잠재성을 지적한 바 있다.[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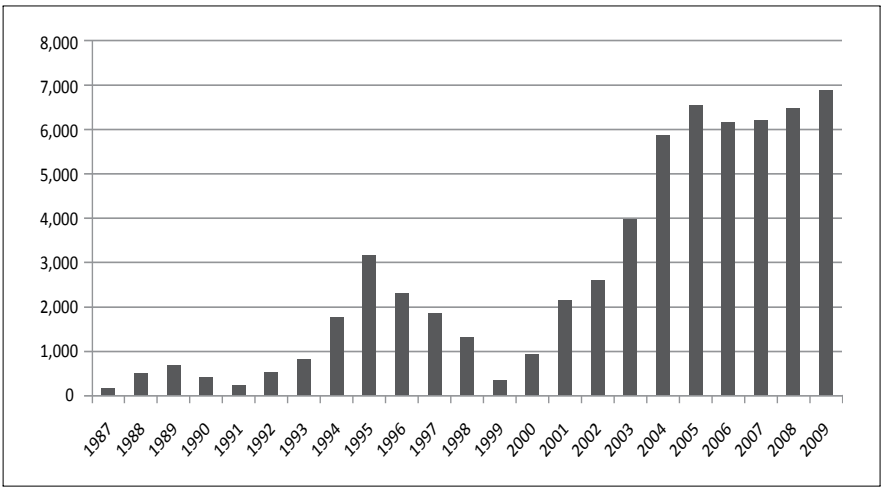
2) 대중국 투자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9년 현재 약 69억 달러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총액 중 약 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일본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데이터는 2004년 자료까지만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그림 2-22.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JETRO Investment Statistics(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 2010년 8월 기준 자료.

79) Japan Finance Corporation(2009), *Survey Report on Overseas Business Operations by Japanese Manufacturing Companies*, JBIC.

또한 대한국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80% 이상이 전기·전자, 금속, 기계, 운송기계 등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는 무역 및 금융·보험 등이 주요 투자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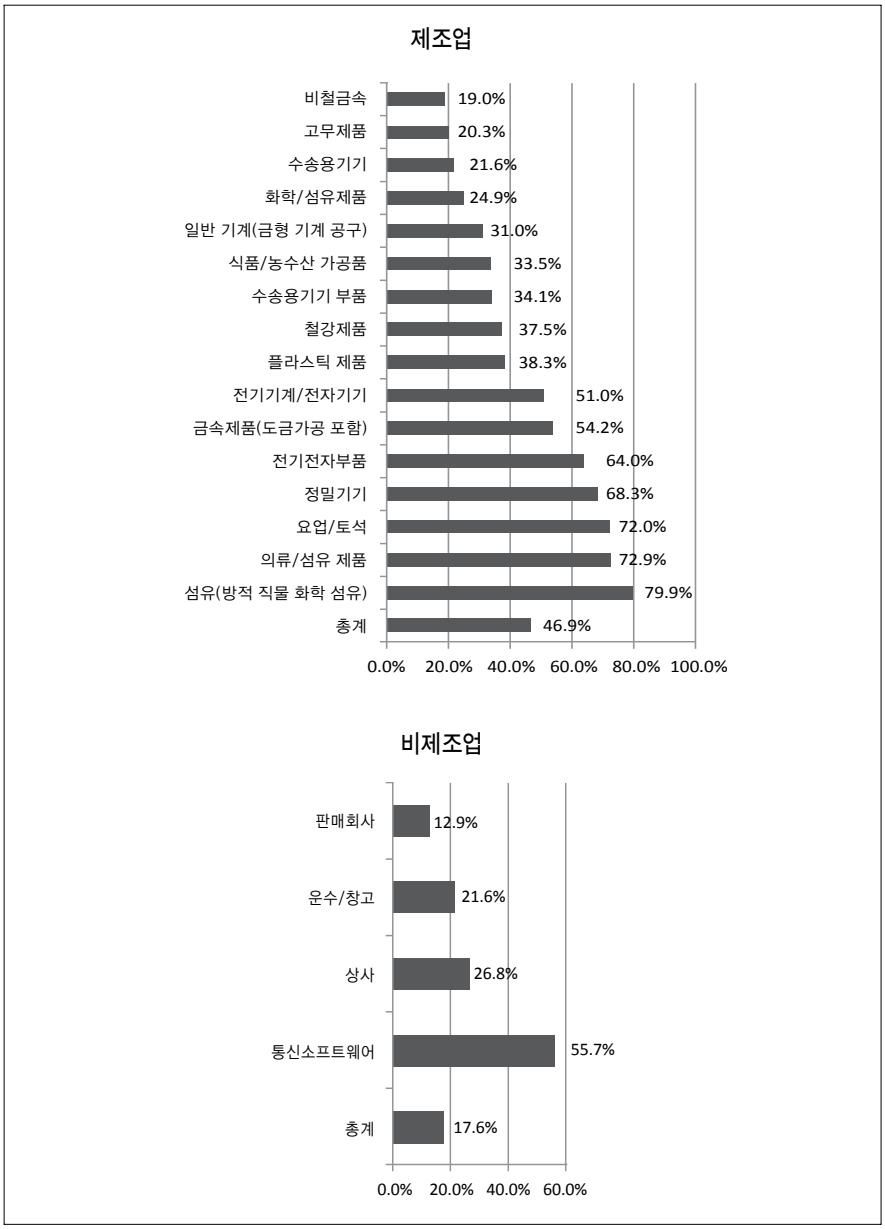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대한국 직접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JETRO(2010)의 경영실태 분석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실태를 살펴보았다. 중국 진출 기업의 경우 579개 기업의 답변결과를 근거로 중국 내 주요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수출을 하는 비율은 64%이며, 총매출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37.5%로 대만, 한국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특히 섬유, 의류, 요업 등의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ETRO(2010)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진출 일본기업의 수출액 중 60.6%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산둥성, 톈진, 베이징, 요령성, 상하이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일본으로의 수출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의류업 93.2%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소프트웨어(79.5%), 판매회사(78.5%)의 대일본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 일본기업의 중국 진출이 생산기지로서의 유인이 강하였으나 최근 일본기업은 중국을 생산기지에서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METI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 *Survey of Overseas Business Activities*와 JFC(2009)의 *Survey Report on Overseas Business Operations by Japanese Manufacturing Companies*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METI(2008)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판매비중은 식료품, 전자 전기 및 운송장비 산업이

80) 일본 재무성(Ministry of Finance) 자료에 근거(http://www.mof.go.jp/english/e1c008.htm).

그림 2-23.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자료: JETRO(2010), 『在アジア・オセアニア日系企業活動実態調査: 中国・香港・台湾・韓国編(2009年度 調査)』.

2004년에 각각 72%, 37% 및 74%를 보였으나, 2008년에 88%, 49% 및 87%로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30. 일본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주요 목적

구분	2008년		2009년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인적자원	41	13.9	33	9.5
저렴한 노동력	132	44.9	153	44.0
저렴한 원재료	48	16.3	68	19.5
조립 공급기지	73	24.8	71	20.4
산업집중도	46	15.6	54	15.5
타국의 위험분산 목적	5	1.7	2	0.6
일본의 수출기지	35	11.9	46	13.2
제3국 수출기지	44	15.0	60	17.2
원료조달 이점	20	6.8	28	8.0
내수시장	109	37.1	114	32.8
내수시장 잠재성	228	77.6	295	84.8
내수시장 수익성	26	8.8	30	8.6
제품개발기지	10	3.4	10	2.9
투자지역 인프라	24	8.2	33	9.5
투자지역 물류서비스	12	4.1	8	2.3
투자에 따른 세제 특혜	19	6.5	26	7.5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4	1.4	9	2.6
안정적인 사회 및 정치적 환경	6	2.0	13	3.7
응답 수	294	100.0	348	100.0

자료: Japan Finance Corporation(2009), *Survey Report on Overseas Business Operations by Japanese Manufacturing Companies,*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한편 중국 내 기업운영상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는 무엇보다 종업원 임금상승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통관절차의 번거로움이나 품질관리의 어려움, 경쟁업체 증가(비용 측면의 경쟁), 원재료 및 부품의 현지 조달 어려움, 통관소요시간,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 한계점에 이른 비용절감, 규칙 등에 대한 철저한 공지 미흡, 세금(법인세, 이전가격 과세 등) 부담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반면 JFC(2009)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이 해외투자 유망지역인 근거로 총설문기업(348개사)의 84.8%(295개사)가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성을 지적하고 있다.[81] 중국의 내수시장 잠재성 이외에 중국 투자의 이점으로 일본기업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44.4%)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소결

가.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비교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투자 역사뿐 아니라 추진목적 및 그 특성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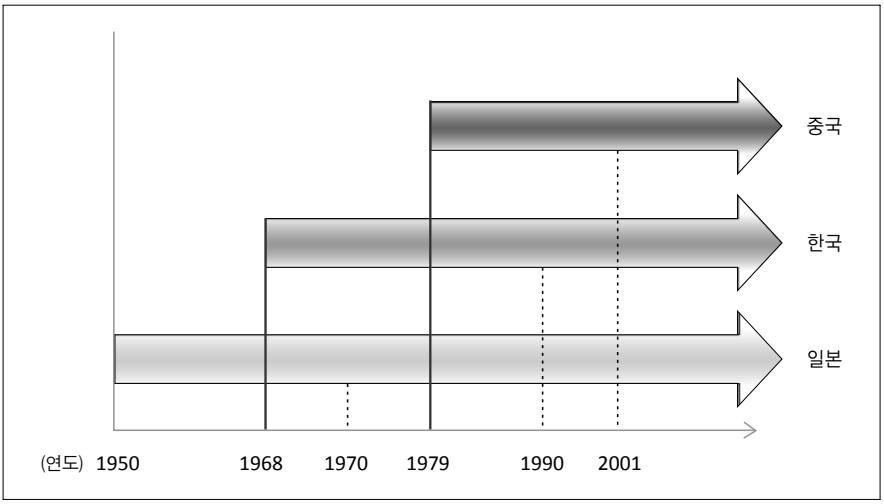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추진시점은 각국이 본격적인 경제성장기로 들어선 시기와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이 가장 빠르고, 한국은 1968년, 중국은 1979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시작되었다.

한·중·일 3국의 전반적인 해외직접투자의 특성은 3국 모두 조금씩은 다르나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비교적 유사한 반면 중국은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81) Japan Finance Corporation(2009), *Survey Report on Overseas Business Operations by Japanese Manufacturing Companies,* JBIC.

그림 2-24. 한·중·일 해외직접투자 시점 비교



주: 실선은 투자시점, 점선은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을 각각 나타낸다.

첫째,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 경제규모만큼이나 전 세계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반해, 한국과 일본은 경제규모 및 교역규모에 비해 해외투자는 상당히 미흡하다. 즉 최근 추세를 볼 때 중국이 해외직접투자를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중국과 일본이 M&A 형태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여전히 그린필드형 해외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수출촉진, 현지시장 진출, 저임금 활용이 해외직접투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린필드형 투자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중국은 자원 및 에너지 확보, 신시장 개척, 자산투자, 부족역량 보완 등이 주요 투자목적이라는 점에서 M&A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시장점유율 확대 및 잠재성 있는 시장의 선점, 신기술 획득 등을 목적으로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표 2-31. 한·중·일 해외직접투자 특성의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해외투자 시점	1968년	1979년	1950년
해외투자 점유비중 (2009) 및 증가율	• Flow 비중 0.5% • 증가율(10년) -5.1%	• Flow 비중 8.5% • 증가율(10년) 8.9%	• Flow 비중 1.1% • 증가율(10년) -0.6%
유형별 해외투자	그린필드 중심	M&A 중심	M&A 중심
주요 투자지역 변화	미국/중국 (미국→중국 중심)	북미/서유럽	북미/서유럽
투자동기(목적)의 변화 추이	• 대세계: 자원 조달, 신시장 개척 • 대중: 생산기지→수출 • 대일: 신시장 개척, 기술 및 브랜드 확보	• 대세계: 자원조달, 기술 및 브랜드의 확보 • 대한: 기술 및 브랜드 확보 • 대일: 기술 및 브랜드 확보	• 대세계: 자원조달, 신시장 개척 • 대한: 부품조달 • 대중: 생산기지 → 내수시장
성장속도	정체/완만한 상승	급속한 상승추세	정체/완만한 상승

셋째,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대상지역은 공통적으로 북미지역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한국은 특히 중국이, 중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서유럽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투자목적에 따른 차이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은 저임 활용 가능성 및 현지 시장 진출 등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중요한 대상국일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시장개척 및 기술획득 등을 목적으로 한 M&A 방식의 투자비중이 높은 중국·일본의 경우 북미·서유럽권에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넷째, 해외직접투자의 성장추세 측면에서는 중국이 한국, 일본에 비해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규모 및 교역수준에 비해 해외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면도 있으나, 중국 자체적으로 최근에 와서야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더구나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 풍부한 외환보유액, 위안화 절상압력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볼 때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앞으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하에 있다고 보여진다.

표 2-32. 한·중·일 3국간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한·중		한·일		일·중	
	한국의 대중국 투자	중국의 대한국 투자	한국의 대일본 투자	일본의 대한국 투자	일본의 대중국 투자	중국의 대일본 투자
1994	827	6	96	428	1,789	2
1995	1,278	11	106	425	3,183	-22
1996	1,886	6	58	255	2,317	1
1997	915	7	54	266	1,862	-22
1998	909	8	24	510	1,301	2
1999	498	27	91	1,762	360	3
2000	1,009	76	145	2,452	934	0
2001	1,026	70	94	776	2,158	2
2002	2,115	249	97	1,404	2,622	1
2003	2,867	50	52	543	3,980	-2
2004	3,713	1,165	320	2,263	5,863	-9
2005	3,653	68	216	1,881	6,575	11
2006	4,528	40	291	2,111	6,169	12
2007	7,123	385	797	990	6,218	15
2008	4,841	336	608	1,423	6,496	37
2009	2,624	161	416	1,934	6,900	-137*

주: *는 잠정치.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신고수리 기준); JETRO(국제수지 기준).

표 2-33.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 특성의 비교

투자국	투자 대상국	투자의 특성	
한국	중국	투자목적	• 중국의 저임 노동력 활용 • 중국 내수시장 공략
		주요 특징	• 제1의 투자대상국 • 제조업 중심(2009년 현재 79.3%) • M&A 인수사례 미미 • 최근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진출사례 증가
	일본	투자목적	• 일본 중견기업의 인수 • 일본 내 판매거점 및 R&D 거점 투자
		주요 특징	• 전체 해외투자 대비 비중 미미(2009년 현재 1.9%) • 서비스산업 중심(2009년 현재 80.6%) • M&A 인수사례 미미
중국	한국	투자목적	• 선진기술 확보
		주요 특징	• 전체 해외투자 대비 비중 미미(2008년 현재 0.2%) • 서비스산업 투자의 경우 금액이 작은 요식업, 무역, 운송 등에 집중 • 운송용 기계(25.6%), 비즈니스서비스(24.6%), 화공(21.9%)에 집중 • M&A 투자의 활성화 추세
	일본	투자목적	• 기술과 경험의 확보 • 유명 국제브랜드 확보
		주요 특징	• 전체 해외투자 대비 비중 미미(2008년 현재 0.1%) • 서비스업 62.3%(특히 무역업 33.2%)의 비중이 높음. • M&A 투자의 활성화 추세
일본	한국	투자목적	• 한국 내수시장 공략
		주요 특징	• 전체 해외투자 대비 비중 미미(2009년 현재 1.4%) • 제조업 비중(56.0%), 특히 전기·전자산업 비중(50%)이 높음
	중국	투자목적	• 중국 내수시장 공략 • 중국의 저임 노동력 활용
		주요 특징	• 2009년 현재 전체 해외직접투자총액 대비 비중: 9.2% • 제조업에 집중: 80% 이상 • 생산기지보다 세계최대 소비시장으로의 중요성 확대

다섯째, 한·중·일 3국 각각의 역내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중요도는 대체로 높지 않으나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한·중·일 3국의 투자목적을 상기해볼 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과 일본에 있어 중국의 저임금 활용 가능성 및 시장의 매력도는 투자대상지역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다. 반면 중국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일부 신기술 습득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도 서로에게 각각 주요한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시사점 및 문제 제기

앞서 우리는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가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형태의 역내 투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이슈는 과연 미흡한 역내 투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와 현재의 역내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개선전략의 도출이 가능한가 여부다.

여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역내 상호간 직접투자 시의 장애요인을 정리하면 [표 2-34]와 같다. 요약해보면 먼저 한국으로의 투자 시에 가장 큰 어려움은 중국과 일본이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의 경우 특히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폐쇄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인 반면, 일본의 경우 단순히 환율변동성 및 비용상승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시장에 특화된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전반적으로 중국의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이 중국의 한국 투자에 대한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2-34. 기업 설문에서 나타난 한·중·일 3국의 상호 투자 시 주요 장애요인

	투자 시 애로요인
한국→중국	• 정보 부족 및 행정불투명성 • 고급인력 채용의 어려움 및 의사소통 • 인건비 및 물가 등 비용상승
한국→일본	• 인재 확보의 어려움 • 사업비용 증가 • 제품요구수준의 강화 • 일본시장의 폐쇄성 및 특수성
중국→한국	• 한국 방문 시 비자 발급 불편 • 회사 설립에 비해 공장 신설 등의 경우 절차 복잡 • 중국기업의 첨단업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조선업 및 금융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진출 어려움
중국→일본	• 인재 확보의 어려움 • 사업비용 증가 • 제품요구수준의 강화 • 일본시장의 폐쇄성 및 특수성
일본→한국	• 원화의 엔화환율/원화의 달러환율 변동 • 종업원 임금상승 및 조달비용상승, 거래처 가격인하 요구 • 경쟁업체 증가, 원재료 및 부품의 현지조달 어려움 • 판매시장의 침체 및 신규고객 확보의 어려움
일본→중국	• 종업원 임금상승문제 • 통관절차의 번거로움 및 통관소요시간 • 품질관리의 어려움 • 경쟁업체의 증가(비용 측면 경쟁) • 원재료 및 부품의 현지조달 어려움 • 규칙에 대한 철저한 공지 미흡 • 세금(법인세, 이전 가격 과세) 부담

자료: KOTRA(2009), 「2009 중국 Grand Survey」; JETRO(2008), 「第13回 対日直接投資に関する 外資系企業の意識調査」; 변웅재(2010. 8. 30), 「중국투자유치 법률적 고려사항」, 제6회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 발표자료; JETRO(2010), 「在アジア・オセアニア日系企業活動実態調査; 中国・香港・台湾・韓国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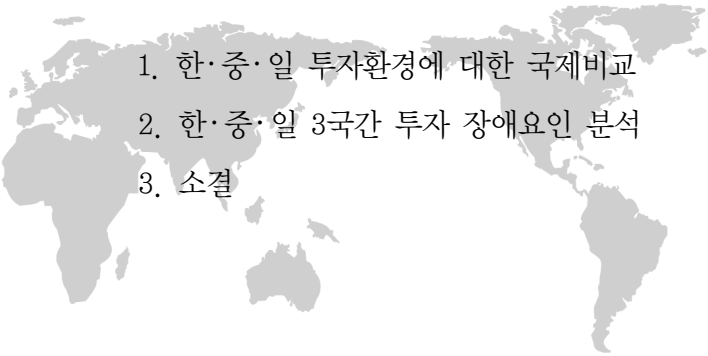
다음으로 중국시장으로의 한국과 일본 기업의 투자 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정보 부족 및 행정 불투명성, 통관 비효율 등 시스템의 질적 미흡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최근 임금상승 및 인력 채용의 어려움도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시장의 경우 시장으로서의 매력도 등으로 인하여 투자를 확대하고는 있으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여건 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나 높은 비용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시장의 폐쇄성 및 특수성에 대해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중국이 한국으로의 투자과정에서 제기하고 있는 장애요인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상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제약이 없음에도, 시장의 특성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폐쇄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한·중·일 3국이 정부차원에서 외자계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현지 투자의 장애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설문조사에 근거한 단편적인 문제의 도출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즉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기 때문에 통관상의 어려움, 비용상승, 시장의 폐쇄성 등의 문제가 있는 분야를 구분해낼 수는 있으나 실제 투자환경상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원인 도출 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나타난 한·중·일 3국의 상호 투자 특성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등에서 평가하는 한·중·일 3국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한·중·일 상호간 투자와 관련하여 실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등을 통해 역내 상호 투자의 장애요인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3장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환경 분석



1. 한·중·일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비교
2. 한·중·일 3국간 투자 장애요인 분석
3. 소결

1. 한·중·일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비교

앞서 우리는 한·중·일 3국의 해외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기업들이 제시하고 있는 현지 투자 및 기업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기업대상 설문의 경우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투자환경 및 장애요인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투자환경의 평가 및 상호 비교라는 측면에서의 효과성은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각종 국제기구 등에서 수행한 바 있는 한·중·일 3국의 투자 및 기업운영 환경 등에 대한 평가사례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투자환경 수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OECD FDI 규제지수

OECD는 2010년 주요 48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지수는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도를 ① 주식취득 제한, ② 외국인투자 사전승인제도, ③ 임원의 국적제한, ④ 운영 제한(지사설립, 업무용 부지 매입)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평가요소별 가중치는 [표 3-1]과 같다.

한·중·일 간 OECD FDI 규제지수를 비교해본 결과 한·중·일 모두 48개국 평균 및 OECD 평균보다 규제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공통적으로 여타 국가에 비해 외국인지분 제한에 대한 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중·일 3국 중 상대적으로 한국의 규제수준이 낮은 반면 중국의 규제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3-1. FDI 규제지수 평가요소별 가중치(2010년 기준)

	가중치	
외국인직접지분투자 제한	신규 설립	인수
외국인 지분 허용 불가	1	0.5
50% 미만의 외국인지분 허용	0.5	0.25
50% 초과~100% 미만의 외국인지분 허용	0.25	0.125
외국인투자 사전승인		
100만 달러 혹은 총지분의 50% 미만의 투자일 경우 허가	0.2	
100만 달러 혹은 총지분의 50% 이상의 투자일 경우 허가	0.1	
통보(notification)	0.025	
임원의 국적 제한		
외국인 임원이 허용되지 않음	0.1	
경제적 필요에 따라 2명의 외국인 임원을 허용	0.05	
기간 제한 하에 2명의 외국인 임원을 허용	0.025	
이사회의 국적 및 거주요건		
과반수가 내국민으로 구성	0.075	
최소 한 명 이상이 내국민으로 구성	0.02	
기타 제한		
지사 설립 불가/현지법인 설립 필요	0.05	
Reciprocity requirement	0.1	
이익 및 자본의 본국 회수	1 - 0.1	
지역금융에의 접근	0.05	
업무목적의 토지 취득	0.1	
토지 소유 불가/임대 허용	0.05~0.01	

자료: OECD(2010), “OECD’s FDI Restrictiveness Index: 2010 update”.

표 3-2. OECD FDI 규제지수의 한·중·일 비교(2010년 기준)

구분	외국인지분 제한	외국인투자 사전승인	임원의 국적 제한	운영 제한	종합지수
한국	0.139	0.000	0.001	0.002	0.142
중국	0.226	0.135	0.048	0.069	0.457
일본	0.230	0.000	0.007	0.005	0.241
OECD 평균	0.059	0.024	0.001	0.013	0.095
48개국 평균	0.072	0.020	0.006	0.021	0.117

주: 0에서 1까지의 값이 부여되며,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
자료: OECD(2010), “OECD’s FDI Restrictiveness Index: 2010 update”.

표 3-3. OECD FDI 규제지수의 한·중·일 비교(2010년 기준)

구분	한국	중국	일본	OECD 평균	48개국 평균
농림업	0.375	0.545	1.000	0.128	0.163
어업	0.500	1.000	1.000	0.320	0.324
광업	0.000	0.390	1.000	0.122	0.153
제조업[1)]	0.000	0.252	0.070	0.030	0.040
전기	0.417	0.608	0.000	0.123	0.123
건설업	0.000	0.265	0.000	0.055	0.057
유통업[2)]	0.000	0.238	0.000	0.029	0.062
숙박업	0.000	0.250	0.000	0.030	0.047
운송업	0.500	0.665	0.550	0.227	0.249
미디어	0.400	1.000	0.000	0.180	0.228
통신	0.500	0.800	0.300	0.092	0.121
금융서비스[3)]	0.020	0.610	0.000	0.053	0.081
비즈니스서비스	0.000	0.138	0.000	0.067	0.102
부동산	0.000	0.275	0.100	0.283	0.281
산업 평균	0.142	0.457	0.241	0.095	0.117

주: 1) 5개 제조업 분야의 평균.
2) 도소매업 평균.
3) 은행, 보험 및 기타 금융서비스 평균.
자료: OECD(2010), “OECD’s FDI Restrictiveness Index: 2010 update”.

또한 산업별 FDI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한·중·일 3국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농림어업부문에 대한 진입규제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 밖에 한국과 중국의 경우 전체 규제수준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분야, 서비스업 중에서는 운송업, 미디어산업, 통신산업 등에 대한 FDI 규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특히 농림어업, 광업 부문은 외국기업의 진입이 불가할 정도로 규제가 강하였으나, 운송업 및 통신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경우 FDI 유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세계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환경[82] 평가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서도 2010년부터 세계 주요국[83]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국가간 규제 정도를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을 4개 부문에 23개 지표로 구분하여 규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상국 법령 분석과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다만 아직 평가 시행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별 순위를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지표별 상대비교는 가능하다.

IAB 또한 OECD의 FDI 규제지수와 마찬가지로 산업별 분석과 요인별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4]와 같다.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소유 허용비율이 낮은 분야는 한국은 통신·미디어 산업, 중국은 통신·보험·교통·미디어 산업, 일본은 교통·건강 및 재활용 산업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중국이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이 심한 것

82) Investing Across the Border.

83) 2010년 평가대상국은 전 세계 87개국을 대상으로 수행.

으로 나타났다. 여타 평가요소의 경우도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외국인투자환경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이 상대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창업 용이성, 산업용지 접근성 등에서 일본보다 투자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세계은행 외국인직접투자환경 평가기준

총 4개 부문	평가내용 및 주요 세부 지표(23개)
외국인투자 가능 분야 (Investing Across Sectors)	•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지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정도 (세부 지표) 11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지분 소유 허용 정도(11개)
외국인 창업 (Starting a Foreign Business)	•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지사 설립 시 필요 절차 (세부 지표) 소요일수, 절차 수, 설립 용이성*(3개) * 이사회 구성 제한 여부, 최저자본금 존재 여부, 투자승인 여부 등
외국인 산업용지 접근성 (Accessing Industrial Land)	• 산업용지 임대·매입 시 법적인 제한 (세부지표) 임대권, 소유권, 용지정보 접근성, 용지정보 이용성, 사유지 임대가능기간, 공유지 임대 가능기간(6개)
상사 분쟁 중재 (Arbitrating Commercial Disputes)	• 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의 용이성 (세부지표) 법, 구제절차의 접근용이성, 중재에 대한 사법부의 조력 정도 (3개)

자료: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2010), “Investing Across Border 2010”.

표 3-5. 세계은행 외국인직접투자환경 평가결과 한·중·일 비교

구분	지표	한국	중국	일본	OECD 평균[2]
외국인 투자 가능 분야[1]	광업, 석유, 가스(Mining, Oil and Gas)	100	75	100	100
	농업, 목재(Agriculture and forestry)	100	100	100	100
	경공업(Light manufacturing)	100	75	100	93.8
	통신(Telecommunication)	49.0	49	83.3	89.9
	전기(Electricity)	85.4	85.4	100	88.0
	은행(Banking)	100	62.5	100	97.1

표 3-5. 계속

구분	지표	한국	중국	일본	OECD 평균[2)]
외국인 투자 가능 분야[1)]	보험(Insurance)	100	50	100	100
	교통(Transportation)	79.6	49	39.8	69.2
	미디어(Media)	39.5	0	60	73.3
	건설, 관광, 유통(constr, tourism, retail)	100	83.3	100	100
	건강, 재활용(Health care, waste mgt.)	100	85	50	91.7
외국인 창업 분야	시간(Time(days))	17	99	25	21
	절차(Procedures)	11	18	10	9
	창업 용이성(Ease of establishment Index)	71.1	63.7	81.6	77.8
외국인 산업 용지 접근성	임대차(Strength of lease right index)	85.7	96.4	85.7	92.2
	소유권(Strength of ownership right index)	100	n/a	100	100
	용지정보 접근성(Access to land information index)	68.4	50	30.8	52.5
	용지정보 이용도(Availability to land information index)	70	52.5	75	84.2
	사유지 임대 시 소요일 (Time to lease private land(days))	10	59	17	50
	공유지 임대 시 소요일(Time to lease public land(days))	53	129	96	88
상사 분쟁 중재	법(Strength of laws index)	94.9	94.9	95.4	94.2
	중재 절차 접근성(Ease of process index)	81.9	76.1	77.7	83.3
	중재에 대한 사법부의 조력 정도 (Extent of judicial assistance index)	70.2	60.2	65.9	77.6

주: 1) 100=100% 외국인 보유 허용.
2) OECD 12개국 평균(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미국).

자료: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2010), “Investing Across Border 2010”.

다. 세계은행의 비즈니스환경 평가

외국인투자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평가 외에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비즈니스환경에 대한 평가 또한 투자환경을 비교하는 데 중요하다. 국가별 비즈니스환경에 대한 분석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세계은행이 200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Doing Business*의 평가결과를 통해 한·중·일 3국의 투자환경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비즈니스환경을 10개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그 지표별 주요 내용은 [표 3-6]과 같다.

표 3-6. 세계은행 Doing Business의 주요 평가요소

총 10개 부문	평가내용 및 주요 세부 지표
창업 (Starting a Business)	• 기업이 창업하는 데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평가 (세부 지표) 창업절차 수, 소요시간, 비용, 최저자본금 규모
건축 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Licenses)	• 건축 시 요구되는 절차 수, 시간, 비용을 평가 (세부 지표) 2층 창고 건축에 필요한 절차 수, 소요시간, 비용
고용·해고 (Employing Workers)	• 고용 및 해고 관련 규제의 유연성을 측정 (세부 지표) 고용경직성(근로자 채용의 용이성·근로시간·해고), 해고비용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및 등록에 소요되는 절차, 시간, 비용을 평가 (세부 지표) 절차 수, 소요시간, 비용
자금조달 (Getting Credit)	• 채권자의 법적 권리와 신용정보시스템을 평가 (세부 지표) 채권자의 권리보호 수준, 신용정보 제공 수준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 이사진의 부당한 내부거래로부터 주주 보호 정도를 평가 (세부 지표) 거래투명성(공시), 이사의 책임,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소송능력
세금 납부 (Paying Taxes)	• 기업의 세금(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납부로 인한 부담을 평가 (세부 지표) 납부 회수, 소요시간, 실효세율

표 3-6. 계속

총 10개 부문	평가내용 및 주요 세부 지표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 수출입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시간·비용을 평가 (세부 지표) 상품의 수출입 관련 절차, 소요시간, 비용
채권 회수 (Enforcing Contracts)	• 채무자의 지불 체납에 대해 사법구제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평가 (세부 지표) '제소-재판-채권회수'에 소요되는 절차, 소요시간, 비용
퇴출 (Closing a Business)	• 법원 파산절차의 효율성 평가 (세부 지표) 파산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비용, 회수율

자료: World Bank(2010), *Doing Business Ranking*(http://www.doingbusiness.org/economyrankings).

표 3-7. 세계은행 Doing Business의 한·중·일 평가결과(2010년 기준)

Doing Business	한국	중국	일본
종합평가(Ease of Doing Business)	19	89	15
창업(Starting a Business)	53	151	91
건축 관련 인허가(Dealing with Licenses)	23	180	45
고용·해고(Employing Workers)	150	140	40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71	32	54
대출(Getting Credit)	15	61	15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73	93	16
세금 납부(Paying Taxes)	49	125	123
국제교역(Trading Across Borders)	8	44	17
채권 회수(Enforcing Contracts)	5	18	20
퇴출(Closing a Business)	12	65	1

주: 183개 조사대상국 중 순위(경영환경이 양호한 순서에 따른다).
자료: World Bank(2010), *Doing Business Ranking*(http://www.doingbusiness.org/economyrankings).

가장 최근인 2010년 평가결과[84]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183개 국가 중 종합평가결과 1위는 싱가포르였으며, 일본이 15위, 한국이 19위, 중국이 89위를 차지하였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고용 및 해고 여건이 미흡한 반면, 국제교역 및 채권 회수 등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경우 창업, 건축인허가, 고용·해고, 세금납부 등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채권 회수, 재산권 등록, 국제무역 등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본은 세금납부, 창업여건 등에서 미흡한 반면, 한국 및 중국에 비해 고용·해고, 퇴출 등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 한·중·일 3국간 투자 장애요인 분석

가. 한국·중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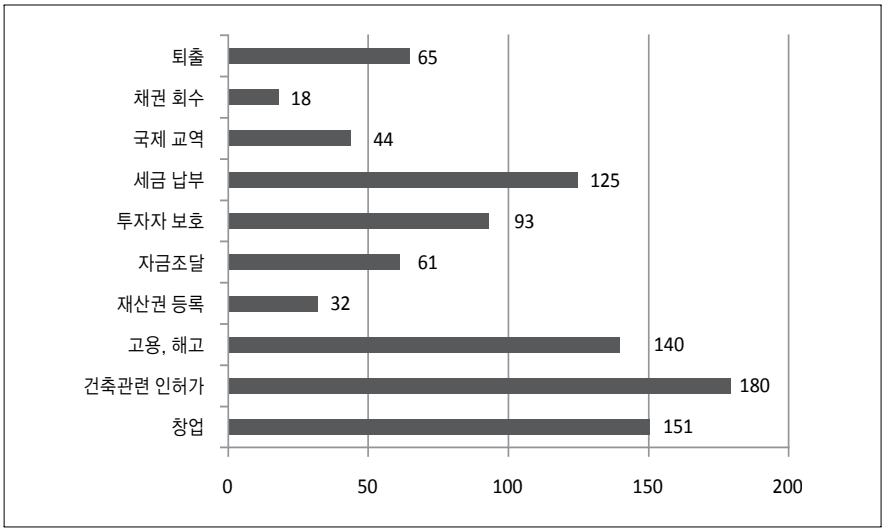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장애요인

중국은 한국의 제1투자대상국으로서 그 중요도가 높지만, 투자환경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 따른 평가나 실제 기업들의 평가 모두 좋지 못하다. 특히 World Bank(2010), KOTRA(2010)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주요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일반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교할 때 상당히 뒤처져 있다. 실제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0*에서는 중국의 사업편의성 순위가 89위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창업, 건축 관련 인허가,

84) 평가대상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이다.

그림 3-1. World Bank의 2010 비즈니스 수월성(Doing Business)의 분야별 평가(순위): 중국



자료: World Bank(2010), *Doing Business 2010: China.*

고용 및 해고, 세금납부, 투자자 보호 등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Doing Business 2010*에 따르면 중국에서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는 14회, 37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BRICs로 분류되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에 비해서도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축 관련 인허가절차의 경우 37회, 336일, 전체 국가 중 180위로 BRICs 국가 중 러시아[85]와 함께 현저하게 편이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 부문과 관련해서는 노동경직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퇴직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납부와 관련해서는 이윤당 총납부세율이 78.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BRICs 국가 중 브라질 다음으로 세금납부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85) 러시아의 경우 건축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는 54회, 소요시간은 약 704일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8. 중국이 비교열위에 있는 비즈니스 경쟁력 지표의 경쟁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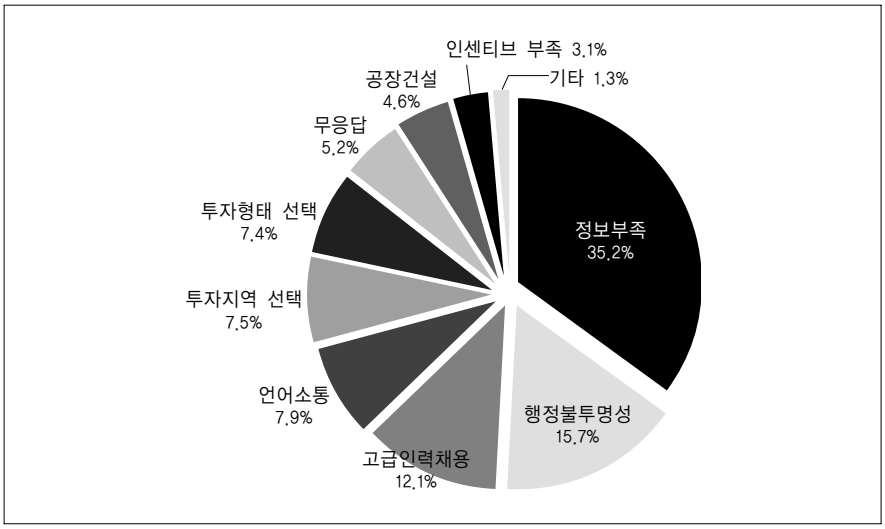
구분	경쟁력 분야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창업	절차(횟수)	14	16	13	9
	소요시간(일)	37	120	30	30
	소요비용(% of income per capita)	4.9	6.9	66.1	2.7
	최소자본(% of income per capita)	130.9	0.0	210.9	1.8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횟수)	37	18	37	54
	소요시간(일)	336	411	195	704
	소요비용(% of income per capita)	579.2	195	2394.9	2140.7
고용/해고	노동경직성(1~100)	31	46	30	38
	퇴직비용(weeks of salary)	91	46	56	17
세금납부	납부(연간 횟수)	7	10	59	11
	관련 소요시간(시간)	504	2600	271	320
	총세율(% profit)	78.5	69.2	64.7	48.3

자료: World Bank(2010), *Doing Business 2010: China.*

둘째, 한국기업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어려움 중 대표적인 것이 정보 부족과 행정 불투명성에 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촉발된 투자 관련 정책의 빠른 변화는 기업입장에서 이러한 정보 부족에 대한 우려를 보다 확산시킬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담당부처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가 어렵고 행정 불투명성으로 인한 불안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중국은 통관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의 규모 및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등급을 부여하여 각각 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분류 기준이나 등급별 특혜가 명확하지 않으며, 각 기업이 체감하는 편의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셋째, 투자의 형태 및 방식에 대한 제한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그림 3-2.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시 주요 애로요인



자료: KOTRA(2010), 『2009 중국 Grand Survey』.

OECD(2010)의 조사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외자인의 지분 보유에 대한 제한이 심하다. 이로 인하여 KOTRA(2010)의 설문결과에서도 투자형태 선택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설문결과 그 밖에 한국기업들이 꼽는 애로점으로 고급인력 수급문제, 언어소통문제, 투자지역 선택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었으나, 이는 중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넷째, 중국의 투자 관련 비관세장벽으로 제시되는 요인으로 자동차 등 주요 생산품에 중국산 부품·기기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의 시행을 들 수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 2005년 4월 1일부터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 관리방법」[86]을 실시, 완성차의 특징을 지닌 부품 수입의 경우에는 부품관세

86) 海关总署·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财政部·商务部(2005), 「构成整车特征的汽车零部件进口管理办法」.

(평균 9.5%)가 아닌 완성차 세율(25%)을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부품의 현지화를 독려하고 있다. 여기서 완성차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품은 차체(운전석 포함), 엔진 전체, 변속기 전체 등이며 수입부품 가격이 완성차 총액의 60% 이상일 경우도 완성차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2005년 7월 20일 발표된 「철강산업발전정책」[87]에 따르면 신설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설비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 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산 설비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즉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의 투자수준과 설비내용을 제한하기 위해 해외설비는 국내생산이 불가할 경우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설비에 한해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태된 중고 외국 생산설비의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국산장비를 이용한 철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세수감면, R&D 지원 등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은 제조업 중 일부 중요 산업에 대해서 외국인투자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례로 「철강산업발전정책」에 따르면 외국 철강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모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연간 생산량이 일반 철강재는 1,000만 톤 이상(중국 철강사는 500만 톤 이상), 특수강은 100만 톤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제강기술의 지식재산권 보유, 자체 유통 및 물류 시스템 보유, 기술이전의무화 등 일정한 진입조건에 부합해야만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내 철강산업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중국 내 기존 철강기업의 개조 및 이전과 결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신규 사이트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의 철강기업에 대한 지배적 주주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철강기업의 대중국

87) 中國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05), 「国家发改委第35号令: 钢铁产业发展政策」.

진출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안되며, 1개 외국기업이 설립할 수 있는 자동차 완성차 합자회사의 수가 업종별로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 외에도 신규기업진입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어 사실상 투자 관련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발전정책」[88]에서 자동차 생산기업의 신규투자총액을 최소 20억 위안(이 중 자기자금은 최소 8억 위안)으로 설정하였고 R&D 투자규모를 최소 5억 위안으로 규정하였다. 또 승용차와 화물차 생산기업의 투자항목에는 완성차에 장착할 엔진 생산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생산능력도 규정하였는데, 중형트럭은 1만 대, 4기통 승용차는 5만 대, 6기통 승용차는 3만 대 이상의 생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6년 12월 20일 「자동차공업구조 조정 의견에 관한 통지」[89]에서 공급과잉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업허가에 제동을 걸었으며 연도별 판매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전문용 자동차생산업체는 반드시 중국에는 없는 선진기술 자동차를 도입해 연구개발해야 하며 신재료와 신제작기법을 이용해 제품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특히 서비스분야의 경우 제조업보다도 높은 진입규제로 외국인투자자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 먼저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계 로펌의 시장진입을 기본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지만 '중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그 직무상 고용된 보조직원은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을 통해 외국계 로펌의 원활한 업무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기본적으로 외국 로펌이 사법행정부로부터 설립승인을 받는 것이 쉽지 않으며, 중국의 미비한 사법시스템 또한 원활한 진출을 제

88) 中國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09), 「国家发改委第8号令: 汽车产业发展政策」.

89) 中國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06), 「发改工业 2882号: 汽车工业结构调整意见的通知」.

약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다음으로 보험업의 경우 외자보험회사의 설립 신청조건으로 보험업 경력 30년 이상, 자산총액 50억 달러 이상 등의 기준을 규정하는 등 시장진입조건을 높게 설정하여 국제수준의 대형 보험사만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최대 보유가능지분이 50%로 제한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자격조건 강화,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일부 영업상 제한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유통업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2007년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90]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인프라 부족 및 법령체제 미비로 인하여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다. 그밖에 기타 물류·광고·교육 분야에서도 각 해당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관리규정에 높은 수준의 설립 자격요건을 두거나 특정 부문에 대한 외국회사 진입을 불허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규정이 존재한다.[91]

2) 중국의 대한국 투자 장애요인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동력과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최근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확대시켜나가고 있음에도 한국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국의 투자목적과 한국의 투자 유치 관심분야 간의 간극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 양국간 단순한 이해관계의 차이로 치부할 수도 있는 문제이나, 실상 한국에서 중국의 자본을 유치하는데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이 더 근본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산업의 고도화 및 선진화에 대한 관심

90) 中國 商务部(2007), 「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2007年修訂)」.

91) 대한상공회의소(2010), 「중국 서비스산업 현황과 우리 기업 진출방안」.

이 많아졌으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M&A를 통한 해외기업의 기술, 경영, 인력 양성 노하우 등의 습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경우 당장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M&A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중국기업을 대상기업으로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중국기업을 대상으로는 주로 지역개발 및 부동산 등 실물분야의 투자 유치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이다.

둘째, 기업소유제 측면의 문제로 인한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즉 중국의 해외투자를 수행하는 대표적 기업들은 주로 정부가 최대 주주인 대형 국유기업들이며, 또한 중국시장에서 이미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해외투자로 뚜렷한 경영실적 개선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92]

셋째, 여타 국가에 비해 중국에 대한 차별적 투자유치전략이 부재하다는 점 또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즉 그동안 투자국으로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여타 국가와 다른 중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유치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 유치의 성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측에서 한국정부에 투자환경개선차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중국 인력의 한국 유입과 관련한 편의성 제고, 서비스분야 등 투자 제한 완화, 조세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이다. 특히 중국 상무부(2010)[93]는 중국 노동자의 한국 방문과 관련하여 비자 발급의 원활화, 외국인 노동인력 수입쿼터제 완화 등을 우선해결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넷째, 중국기업들의 한국 내 경영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인 전략 및 역량 부재로 인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중국기업들은 저가에 공급되는 중국제품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품의 질이나 사후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기능 및 디자인이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시장의 특성에

92) KOTRA(2010), 「제6회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 발표자료.

93) Chen Wenlin(2010, 12), “China's Outward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관련 세미나 발표자료.

맞춘 적정한 제품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유통망 확보 및 관련 기반서비스 구축이 미흡하여 A/S 등 관련 지원서비스의 효과성 또한 상당히 뒤처진다는 평가이다.[94] 그 밖에도 해외 진출 확대에 수반되는 중국인력 수급 및 인력양성시스템 부족,[95] 한국 등 인수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노사문제의 경우 상하이자동차그룹의 한국 쌍용자동차 인수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신중히 대응하지 못하여 M&A 이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향후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96]

다섯째, 한국의 경영환경은 해외기업의 대한국 투자 결정 시 여전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기업의 국내진출 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사례는 없으나 국내 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KOTRA의 조사결과를 통해 보면, 총 300개 기업 중 35.3%가 노무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다음으로 시급한 분야는 금융환경 개선(26.7%), 세무환경 개선(16.7%) 등으로 나타났다. 노무환경에서 기업들이 제안한 주요 개선사항은 '해고 경직성', '높은 임금수준', '복잡한 임금체계' 등이었으며, 금융환경의 경우 '높은 대출금리수수료', '과다한 금융업무 관련 서류', '외환거래 자유화' 등이었다. 세무환경 관련 개선요청사항은 '높은 법인세율', '과다한 기업비밀공개서류 제출 요구', '기업에 대한 제도상의 배려' 등이 제기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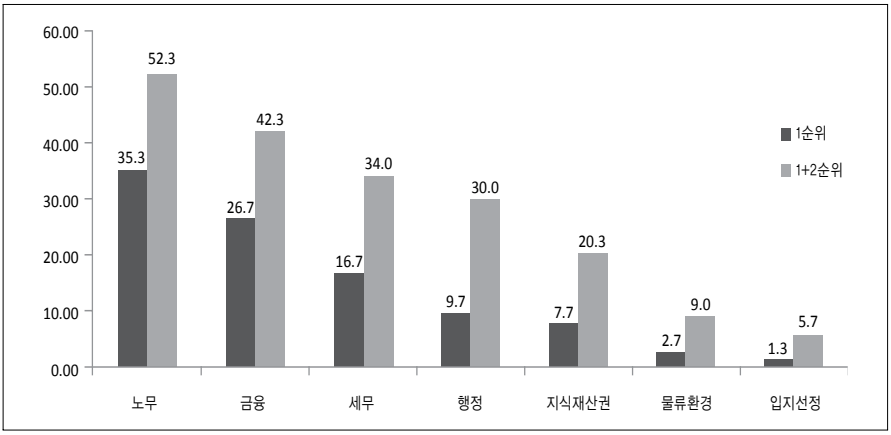
94) 李 娜(2009), 『중국가전업체의 한국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하이얼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5) 진아웅(2009),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6) 홍 림·정강원(2010), 『중국 M&A의 실패사례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 리뷰 제1권 제1호, pp. 43~66.

그림 3-3. 국내 경영환경 관련 개선분야

(단위: %)



자료: KOTRA(2009), 「2009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여섯째, 한국의 M&A형 FDI 유입환경이 미흡한 것 또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의 FDI 인센티브인 보조금과 금융지원이 주로 제조업부문의 대규모 신규투자형 FDI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M&A형 FDI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단기매각을 틈타 막대한 자본이익을 챙긴 M&A형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팽배해 있다. 소로스펀드(서울증권), 칼라일(한미은행), 골드만삭스(진로) 등의 단기 M&A 투자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론스타의 불법매각, 탈세 등이 문제가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국내 M&A 투자환경은 M&A형 해외직접투자를 선호하는 중국에 있어 투자대상국으로서 한국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원인 중 하나다.

일곱째,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제도에 따른 장애요인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기업이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투자액, 투자업종(자원류인지 또는 기타업종인지), 투자국가(수교국인지 여부), 투자형태, 투자주체(국유기업인지 여부) 등에 따

라서 상무부 또는 지방 상무부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또는 성급 발전개혁부문, 외환관리국,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심사 및 비준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 해당 기관 내에서도 여러 단계의 보고 및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절차의 효율성이 낮다. 더불어 해외투자에 대한 법안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해외투자업무의 처리 기준이 법안이 아닌 상관부서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 또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중국의 해외투자관리법에서는 투자자격, 투자심사절차, 외환심사절차, 투자철수조건조항에서도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원칙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외직접투자 지역별 산업구조에 대한 지침, 정부가 장려하거나 제한하는 산업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외에도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해외투자법과 해외투자보험법 등 법적인 투자권익보호법령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덟째, 중국의 독특한 재원조달시스템도 중국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와는 달리 내부지향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융자가 국유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자본시장 상장기회 또한 제한되어 있어 민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중국 내 해외투자의 다양화 및 양적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한국·일본 간

1) 한국의 대일본 투자장애요인

2010년 6월 8일 일본정부는 향후 2020년까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방향을 담은 「신성장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일본에 입지한 국내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일본은 외

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97] 또한 일본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유출되는 등 일본의 약화된 입지경쟁력을 회복하고 아시아 본사, 연구개발거점으로서 일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 「아시아 거점화·대일 직접투자 촉진프로그램」(가칭)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외자 유치에 대한 정책방향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외자 유치정책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까지 발표된 KOTRA(2009), USTR(2009), OECD(2008)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투자자들이 일본내 직접투자 시 지적하는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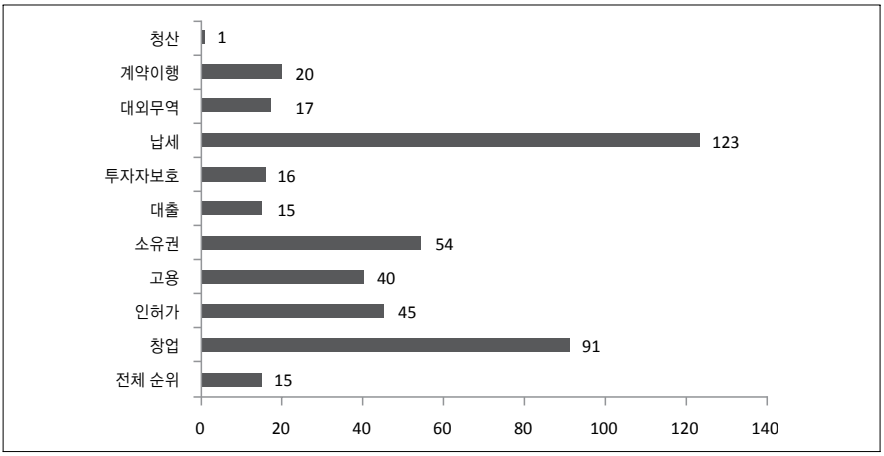
첫째, 일본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한국기업이 일본 진출을 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단편적인 예로 전 세계 181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World Bank에서 평가하고 있는 비즈니스 수월성(Doing Business)의 창업항목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사업하기 위한 창업여건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그림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소요되는 절차와 제반비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창업순위를 보면 91위로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년 평가에서는 창업항목의 순위가 67위를 차지하였는데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98] 이는 다른 국가의 경우 창업과 관련된 자국의 제도를 그동안 개선하여온 반면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큰 노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97) 일본의 실효법인세율은 40%가 넘는 수준으로 이를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대략 30%대로 전망)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98) 창업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은 절차(횟수), 소요기간(일), 소요비용(%, 1인당 GNI), 소요 최소자본(%, 1인당 GNI)으로 구성된다.

그림 3-4. World Bank의 2010 비즈니스 수월성(Doing Business)의 분야별 평가(순위): 일본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둘째, 일본의 까다롭고 복잡한 유통구조 및 상관습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일본 진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 사항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본에서는 종합상사 등 상사를 통한 거래로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인 마케팅이 곤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생산업체와 수요업체 간 담합으로 해외제품에 대한 배제경향이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구매행위 통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일본은 항만하역작업 시 관련 협회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즉 일본항만에서의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간단한 작업조건 변경이라도 관련 협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99] 이러한 일본 특유의 유통구조 및 상관습은 일본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일본 진출 시 고급 기술인력 확보에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고급인력 및 기술인력이 매우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

99) 무역연구소(2002).

표 3-9. OECD 및 일본의 비제조업부문[2)]에 대한 시장규제 평가[1)]

		진입장벽	국유화[3)]	시장구조[4)]	수직적 통합[5)]	가격 통제[6)]
OECD 전체	최고	3.6	5.6	5.5	6.0	6.0
	평균	1.8	3.2	3.5	3.2	0.5
	최저	0.5	0.7	0.2	1.1	0.0
일본		1.9	1.7	2.1	6.0	0.0

주: 1) 지수는 0~6의 값을 가지며, 값이 커질수록 규제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비제조업부문은 가스, 전력, 항공서비스, 철도서비스, 운송, 우편 및 통신서비스를 의미한다.
3) 운송서비스 제외.
4) 가스, 철도 및 통신 서비스만을 포함한다.
5) 가스, 전력 및 철도 서비스만을 포함한다.
6) 운송서비스만을 포함한다.
자료: OECD(2008)에서 재인용(Conway *et al.* 2006).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은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일본은 다른 국가들보다 국경간 M&A에 애로요인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STR(2009)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외국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금융 및 공시제도의 투명성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국경간 M&A 추진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일본은 다른 부문 중에서도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장벽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OECD(2008)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서비스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인 제도개혁이 요구됨을 주장하고 있다.[100)] 특히 OECD는 일본 서비스부문의 수직적 구조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00) OECD(2008), *OECD Economic Surveys: Japan*.

표 3-10. 한국이 제기한 일본의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	주요 비관세장벽
검역 및 상계관세	• 농산물 수입 검역 시 검역처분 완화 • 국산 패류에 대한 검사 완화 •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 및 검역의 완화
수입규제	• 수산물 수입쿼터제의 차별적 운영 • 혁화(革靴)류에 대한 관세 할당 • 김에 대한 수입쿼터 운영
환경 관련 규제	• 가전제품 리사이클제도
금융기관 주재국 진출 관련 사항	• 한국으로의 원화예금 관련 중재업무 제한 • 업무감독기관의 중복 • 금융결제망 가입 허용 • 은행 결산일 조정 • 외국은행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증명서제도 폐지
유통구조 및 상관행	• 종합상사 등 상사를 통한 독점적 운영 - 외국업체는 수요자에 대한 직접 마케팅 불가 • 생산업체와 수요업체간의 담합으로 수입제품 배제 • 대형 철강업체(고로업체)와 1차, 2차 가공업체가 자회사 등 계열관계로 가공업체의 외국산 제품 구매 기피 • 대형 거래처와의 철강 이중가격 관행 등

자료: 정재화(2008)에서 재인용.

여섯째, 그동안 한국이 지속적으로 일본에 제기하고 있는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도 한국의 대일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는 한국기업이 오래 전부터 일본정부에 요구해온 사안으로 그동안 일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과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이 개별적인 비즈니스 애로차원에서 안건을 제기한 후 일본정부에 해결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한·일 FTA 정부간 협상을 계기로 양국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표 3-2]는 한국이 일본에 지적한 주요 비관세장벽을 나열하고 있다. 유형으로 구분하면, ① 검역 및 상계관세, ② 수입규제, ③ 환경 관련 규제, ④ 금융기관 주재국 진출 관련 사항과 ⑤ 유통구조 및 상관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미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기업의 대일 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를 통해 ① 유통 및 폐쇄적인 상관행, ② 배타적 거래관행, ③ 계열관계, ④ 가격메커니즘 등을 일본의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거론한 바 있다.[101)]

2) 일본의 대한국 투자 장애요인

JETRO(2010)[102)]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투자 관련 장애요인으로 원화의 엔화환율 변동, 종업원 임금상승, 경쟁업체 증가(비용 측면의 경쟁), 조달비용 상승,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 한계점에 이른 비용절감, 원재료 및 부품의 현지 조달 어려움, 원화의 달러환율 변동, 판매시장의 침체(소비침체), 신규고객 확보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103)] 대만, 중국, 홍콩 등과 비교할 때 환율 변동 및 종업원 임금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세무 및 통관, 자금결제 규정 등의 제도적 여건이나 인적자본 조달여건, 품질관리여건 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서울재팬클럽(SJC)은 1998년부터 한국정부에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2009년의 보고서를 보면, 노동·노사, 금융, 세무, 지식재산, 개별 안건, 생활관련 등 총 45개 항목에 대해 건의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노동문제의 진전 없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건의사항이 가장 많은 17개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특허출원절차 개선, 디자인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요건의 개선, 일본 술의 상표등록 등이 해당된다.

---

101) 이는 미·일 구조협의(SII: 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102) JETRO는 2009년 9월 1일~10월 31일의 기간 동안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2,990개사를 대상으로 현지 경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03)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였다.

금융부문은 지식재산권 다음으로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요구가 많은 분야로 10개가 속한다. 금융부문은 금융실명확인절차 개선과 장외파생상품의 영업인가에 요구되는 시스템의 현지화 조건을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회사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시켜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동 및 노사관계(6개), 세무회계(3개), 생활환경(1개) 및 기타(8개) 등에서 한국의 투자환경을 개선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3-11. 서울재팬클럽(SJC)의 한국 비즈니스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연번	분야	개수	주요 요구사항
1	지식 재산권	17개	- 일본 TV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아이디어 도용 방지 - 특허출원절차 개선 -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 영어에 의한 외국어출원 도입 - 출원인의 발명 의견서에 대한 실질적 심사 집행 - 디자인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요건의 개선 - 특허권 침해소송의 분쟁 조기해결을 위한 제도상 명확한 규정 요구
2	금융	10개	- 금융실명 확인절차 개선 - 장외파생상품 영업 인가에 요구되는 시스템의 현지화 조건 완화 - 증권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 완화 -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제 완화
3	노동 및 노사관계	6개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무 철폐 - 유급휴가 보상 금지 - 법정퇴직금제도(중대 범죄행위로 해고된 직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의 개정
4	세무회계	3개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 연장 - 국외 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시 환율적용규정의 정비
5	생활환경	1개	- 생활환경 및 교통문제에 대한 개선: 쇼핑카트의 위생관리, 오토바이 보도 주행 단속 강화 및 카운트 신호기의 추가 증설
6	개별 요망	8개	- 안정인증절차 개선 - 국가산업단지 내 폐열을 이용한 농업사업의 추가 허가 -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샘플 수입절차 확인방법의 개선

자료: 서울재팬클럽(2009),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SJC 건의사항』을 이용하여 정리.

일본은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서 한국에 비해 투자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104] 한국은 일본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투자보호 강화나 투자자유화에 관심이 높았으나 일본은 노사문제 해결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한국에 기진출해 있는 일본기업의 기업환경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더불어 일본은 한국으로의 투자확대는 기업이 선택할 문제이지 정부차원에서 논의할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일본기업은 한국의 노사문제, 지식재산권 등의 기업환경 관련 부문에 대해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USTR(2009)의 연례보고서를 참고할 경우, 한국의 규제체계 불투명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법제도가 전반적으로 불투명하며 구체성 결여로 인해 정부 관계자들이 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3. 소결

상기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분야 및 투자방법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창업, 건축 관련 인허가, 고용 및 해고, 세금납부, 투자자보호 등 전반적인 사업환경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 상당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상당한 투자 관련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104) 김양희 외(2008).

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까다로운 유통구조 및 상관습 등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장애요인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물론 한·중·일 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상기 제시된 장애요인 때문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단적으로 중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수준도 높고 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대외평가가 상당히 미흡함에도 한국과 일본 등 해외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중국이 시장잠재력이나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2. 한·중·일 3국간 상호 투자의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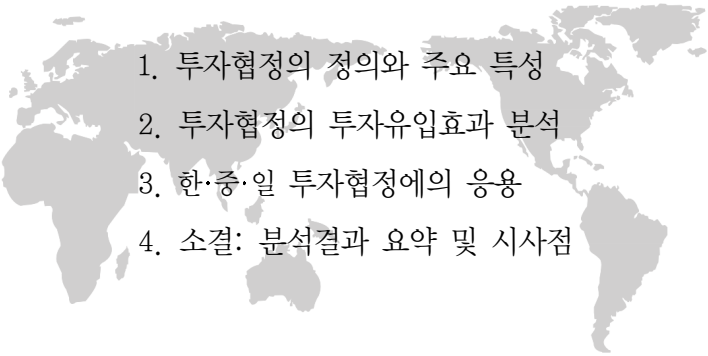
	투자 장애요인
한국	• 노무환경 취약 • M&A형 FDI 유입환경 미흡 • 환율 변동 및 종업원 임금상승 • 지식재산권 및 금융부문의 투자환경 개선요구 높음. • (중국 의견) 비자 발급 불편, 조선업 및 금융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진출의 어려움.
중국	• 전반적인 비즈니스환경 취약 • 정보 부족과 행정 불투명성 문제 • 투자 행태나 방식에 대한 제약 • 자동차 등 주요 생산품에 중국산 부품 및 기기 사용 장려 • 중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진입 제한
일본	• 높은 초기 투자비용 • 까다롭고 복잡한 유통구조 및 상관습 • 고급인력 확보의 어려움. • 국경간 M&A 투자환경 미흡(외국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금융 및 공시제도의 투명성 부족) • 서비스산업에 대한 높은 투자장벽(수직적 구조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문제 등) • 기타 비관세장벽문제(검역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 환경 관련 규제, 금융기관 주재국 진출 관련 사항 등)

그러나 앞서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역내 투자의 특성도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전히 중국이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점차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단순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경우 양적 확대보다는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기술 및 경영 노하우 확보를 위해 국경간 M&A를 활용한 해외직접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3국간 상호 투자는 보다 균형 있게 성장하는 한편 투자목적 또한 시장접근, 비용절감, 기술확보 등으로 점차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3국의 각종 투자 관련 규제 및 장애요인이 3국간 역내 투자 활성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보다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3국의 투자 관련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러한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현재부터 단계적인 준비와 꾸준한 보완이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접근방법은 각 투자 장애요인별 특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제시된 다양한 투자 관련 장애요인은 크게 ① 외국인투자의 형태 및 규모 등에 대한 직접적 규제, ② 국가별 상관습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간접적 규제, ③ 국내 경영환경의 안정성 미흡에 따른 투자 기피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중 두 번째 요소는 사실상 3국간 합의 등 어떤 제도적 수단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의 경우 3국간 합의에 의거하여 어느 정도는 통제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표적 방안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이다. 투자협정은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투자보호 혹은 투자자유화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체결 당사국 간에 상호 내국인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여 제3자에 대하여 배타적 혜택을 허용함으로써 상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다. 현재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모두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는 있으나 체결시기뿐만 아니라 협정 수준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은 3국의 역내 투자에 대한 일관된 제도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의 진입비용을 낮추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투자협정의 실제 경제적 효과, 즉 투자증진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3국간 투자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기존 투자협정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연 일반적인 투자협정이 상호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한·중·일 투자협정의 추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제4장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투자협정의 정의와 주요 특성
2. 투자협정의 투자유입효과 분석
3. 한·중·일 투자협정에의 응용
4. 소결: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앞 장에서 우리는 한·중·일 3국 상호간의 투자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비롯하여 중국의 대한국 투자, 일본의 대한국 투자 등 한·중·일 3국 상호간 투자에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한·중·일 3국간의 투자환경 분석을 통하여 건축 관련 인허가를 비롯한 까다로운 유통구조, 고용 관련 문제, 투자자 보호 등 전반적인 사업환경의 질적 수준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 상당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상당한 투자 관련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한·중·일 3국이 이와 같이 미흡한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을 경우, 한·중·일 3국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간단한 실증분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중·일 3국이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소위 투자협정(Investment Treaty)을 체결하게 될 경우 과연 얼마만큼의 투자증진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계량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아직 체결되지도 않은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직접 도출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 투자협정 체결사례에 대한 실증분석과 연계하여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에 따라 기대되는 투자증진효과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1. 투자협정의 정의와 주요 특성

투자협정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두 개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다수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다자간 투자협정이라고 하며,[105] 이러한 투자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외국인투자자

의 재산보호에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투자에 따르는 통상적인 사업상의 위험은 물론이고, 투자유치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이른바 국가별 위험(country risk) 요소까지도 수반된다. 이 외에도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수용 또는 국유화, 현지국 내의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손실, 해외송금 제한 등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요소 역시 투자자가 해외투자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라 할 수 있다.

투자자가 사업상의 위험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지만, 비상업적 위험은 현지국의 보호조치나 투자국의 보장조치, 또는 양국간의 공동보장 등에 의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 투자협정은 체약당사국들 간의 공동보장을 통해 이와 같은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투자협정은 보다 발전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체약국 간의 투자교류 자유화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자협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의 원칙이다. 투자자의 재산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각 체약국은 타 체약국의 투자자나 타 체약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투자의 설립, 운용, 매각 등 제반사항에서 자국 투자자나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유사한 상황에서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내국민대우의무).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제3국의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의 투자자나 투자에 대해 어떤 유사한 상황에서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최혜국대우의무). 다시 말해서 투자협정을

105) 양자간 투자협정은 가장 대표적인 투자협정의 형태로 전 세계에 현재 약 2,500여 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체결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지역경제통합체에 속하는 국가들 간에 투자협정이 체결되기도 하는데, 이는 지역투자협정 또는 복수국가간 투자협정이라 할 수 있다. 지역투자협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예로 들 수 있다.

체결하는 이유는 투자국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반면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즉 투자자는 해외투자를 함에 있어 현지국의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희망하게 되고 이러한 투자자의 바람에 대해 투자유치국은 국제협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믿음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투자협정의 존재 여부가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투자협정의 존재 여부는 투자자의 투자결정에서 분명히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특히 투자협정은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며, 투명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자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협정이 실제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자국의 시장규모와 생산요소의 활용 가능성이며, 그 국가와의 투자협정 체결에 따른 투명성 제고 등은 하나의 고려사항은 될 수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투자협정 체결 이후 투자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서도 투자협정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규모와 시장의 성장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투자협정이 투자 유치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는 부정적인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정이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의는 분명히 존재한다.[106] 또한 이 협정이 국내의 투자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제도 개선에서 기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국가나 과거 외국인의 재산을 몰수한 경험이 있는 국가 등 대외신뢰도가 낮은 국가의 경우, 이러한 협정 체결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UNCTAD(2004)가 시도한 외국인투자 유치와 투자협정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연구결과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2. 투자협정의 투자유입효과 분석

가. 투자환경과 직접투자

한·중·일 3국간의 투자협정 체결로 인해 과연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투자유입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은 서은숙(2008)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서은숙(2008)에 의하면 투자협정 체결 그 자체는 3국간의 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방도에 대한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이 3국간의 투자에 보다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한·중·일 3국간에 투자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FDI 증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나 3국간에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은 서로간의 투자증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의 투자협정 체결이 3국간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투명한 제도적 환경과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

106) Egger and Pfaffermayr(2004)의 경우 BIT가 FDI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를 정교하게 분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투자환경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정의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각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투자환경이란 정책적인 요인에서부터 행정적인 측면, 각종 법규, 인프라 등 수없이 많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변수화시켜 분석에 이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투자환경을 올바르게 정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자료화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최근 세계 최대 투자유입국인 중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전 세계의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흡수하고 있는 중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투자환경과 투자 간에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중·일 3국이 투자협정 체결로 인한 투자환경이 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투자유입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해서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의 투자환경은 행정절차의 투명성 지수와 법, 규제 제도의 건전성 지수를 대리변수(proxy)로서 사용하고 있다.

분석을 위하여 다음의 식 (4-1)과 같은 로그선형방정식을 이용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ln FDI_{it} = \alpha_i + \beta_1 \ln RGDP_{it} + \beta_2 \ln Wage + \beta_3 \ln HC_{it} + \beta_4 \ln Infra_{it} + \beta_5 lnEnv_{it} + \beta_6 \ln Open_{it} + \epsilon_{it} \quad \text{식 (4-1)}$$

앞 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 의하면 직접투자동기를 크게 수평적 결합이론(horizontal, 또는 시장추구형)과 수직적 결합이론(vertical, 또는 비용절감형)으로 구분하고 있다.[107] 따라서 본 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이론적인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기초하여 다음의 여섯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시장

추구형' 투자를 반영하는 중요한 변수는 투자지역의 시장규모(market size)임에 틀림없다. 투자자에게서 시장규모는 결국 그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potential demand)를 의미하므로 투자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중국의 각 성별 GDP(RGDP)를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 진출 동기가 제3국이나 본국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가 아니라 그 지역의 시장을 겨냥한 투자(즉 시장추구형 투자)라면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정(positive)의 부호를 가지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시장규모가 크면 클수록 투자자는 그 지역에 투자할 매력이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비용절감형' 투자를 반영하는 변수로 투자지역의 임금수준(WAGE)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요인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 높은 임금수준은 투자결정에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투자 결정요인 변수로서 본 분석에서는 인적자본(HC: human capital)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투자자가 투자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풍부한 인적자원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 각 성의 전체 인구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네 번째로 본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변수는 인프라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철도, 항만, 도로 등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투자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성별 도로밀도(density of the road network), 선박항로, 그리고 철도밀도(rail network)를 평균하여 사용하고 있다.

---

107) 연구자에 따라 '시장추구형 직접투자(market access FDI)'는 '시장지향형 투자'로 '비용절감형 투자(factor proportions FDI)'는 '생산효율추구형 직접투자'로 구분되기도 한다.

다섯 번째로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사항인 투자환경(Env)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투자협정 체결 그 자체로는 투자증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대외개방도의 확대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이 보다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한·중·일 3국이 투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투자환경 개선을 이루었을 경우 과연 얼마만큼의 투자증진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환경의 결정에는 수많은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나타낸다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분석에서도 중국의 각 성별 행정절차의 투명성 지수와 법, 규제 제도의 건전성 지수를 투자환경의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변수의 또 다른 대리변수로서 중국 각 성별 개혁 정도(Open)를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있다.[108] 본 연구에서는 각 성별 총생산액에서 국유기업(state owned firms)의 생산액 비율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에 대한 자세한 정의와 자료는 [표 4-1]에 나타나 있다.

한편 종속변수는 각 성별 전 세계로부터의 직접투자액을 그 지역의 총무역액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단순한 직접투자액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Brainard(1997) 그리고 Hanson *et al.*(2001)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접투자와 무역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관측할 수 없는 변수(unobserved variables)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식 (4-1)에 대한 단순한 OLS 횡단면 회귀분석(cross-regional regression)은 문화적 특성 등 관측되지 않은 지역특성(unobserved regional specific factors)을 조정

108) 이 변수를 모형 속에 도입한 이유는 중국 각 성별 내부개혁(internal reform) 정도가 투자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표 4-1. 사용변수 설명

변수명	변 수 설 명	예상부호	자료
RGDP	성별 GDP	+	중국통계연감
Wage	직공(관리직 및 노동자)의 평균임금	−	
HC	고등학교 졸업자 수 / 전체 인구	+	
Infra	고속도로, 철로, 선박항로 길이의 가중평균	+	
Env	행정의 투명성 지수와 법, 규제 제도의 건정성 지수의 단순평균	+	중국통계연감
Open	국유기업 산업생산액 / 모든 기업의 산업생산액	−	중국통계연감
FDI	세계 혹은 한국의 대중국 FDI		한국수출입은행

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모수의 추정치는 불일치(inconsistent)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은 각 지역에 고유한 요인의 영향을 조정하기 위하여 패널자료(panel data)를 사용한 랜덤효과(random effects) 일반화 최소자승법(GLS)의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특정한 연도에 관찰되지 않은 고유한 충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연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하였다. 아울러 임금의 경우 동시성의 문제를 상쇄하기 위하여 1차 시차변수(lagged one period; $t-1$)를 사용하였다.

[표 4-2]는 식 (4-1)에 의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2]에서 보듯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시장규모효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추정결과를 나타낼 뿐 아니라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앞에서 논의한 투자상대국의 시장규모와 직접투자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소위 '시장추구형' 직접투자 가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다음으로 비용절감형 직접투자는 투자상대국의 국내시장(local market)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상대국의 낮은 임금수준을 이용한 현지 생산으로 제3국이나

표 4-2. 분석결과

변수명	1988~2002년	1988~97년	1998~2002년
RGDP	0.91 (0.183)***	0.94 (0.113)***	0.91 (0.129)***
WAGE	-0.76 (0.301)***	-0.89 (0.253)***	0.22 (0.335)
HC	0.82 (0.191)***	0.51 (0.290)*	0.51 (0.077)***
Infra	0.00 (0.05)	-0.00 (0.079)	0.03 (0.120)
Env	0.06 (0.028)***	0.01 (0.005)***	0.07 (0.045)**
Open	-0.75 (0.116)***	-0.88 (0.197)***	-0.91 (0.227)***
R^2	0.69	0.70	0.78
관측 수	323	196	98

주: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0%, 5% 및 1%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본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한 투자를 말한다. 이러한 비용절감형 직접투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 각 성별 평균임금수준을 추정방정식에 도입하여 추정한 결과가 두 번째 행에 나타나 있다.[109] 추정결과는 기대한 바와는 달리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10] 분석 전 기간(1988~2002년)과 초기(1988~97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저임금은 직접투자의 동기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1999~2002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저임금은 대중국 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09)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잠재적인 동시성(potential simultaneity)을 조정하기 위하여 1차 시차(lagged)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전기(t-1)의 각 성별 평균임금수준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110) 우리는 많은 부분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이나 세계 모두의 결과가 음(negative)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우리의 관심사항인 투자환경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한 정책의 투명성과 법제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변수(Env)의 추정결과는 양(positive)의 값을 갖고 동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투자환경이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최근의 경우(1999~2002년) 그 계수값이 0.07로 나타나 투자환경이 10% 개선되어질 경우 투자는 0.7%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UNCTAD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행정효율성, 정부정책의 투명성, 그리고 법, 규제, 제도의 건전성 등과 같은 투자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양국간 투자는 늘어나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나. 투자협정과 직접투자

이제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한·중·일 투자협정과 지금까지 분석한 투자환경을 결합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위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투자유치국의 투자환경은 투자증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투자협정 체결로 인해 정책의 투명성, 행정의 간소화, 법규제 등의 간소화 또는 명료화 등과 같이 투자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투자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둘, 투자협정 체결과 투자환경 개선을 서로 연결하여 추정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 (4-2)를 이용하기로 한다.

$$\begin{aligned}\ln(FDI_{ijt}) &+ \beta_0 + \beta_1 \ln(GDP_i)_t + \beta_2 (GDP_i)_t \\ &+ \beta_3 \ln Dist_{ij} + \beta_4 \ln(Env)_j + \beta_5 GDPDiff_{ij} \\ &+ \beta_6 PerCapitaDiff_{ij} + \gamma_1 BIT_{ij} \\ &+ \gamma_2 BIT_{ij}^{insiders^*} Env_j + \gamma_3 BIT_{ij}^{outsiders^*} Env_j + \sigma YEAR_t + \epsilon_{ijt}\end{aligned}$$

식 (4-2)

식 (4-2)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FDI는 t년도에 i국에서 j국으로의 FDI stock을 나타내며 GDP는 명목 국내총생산을 나타낸다. Dist는 i국과 j국 수도 간의 거리이며 Env는 앞에서 사용한 투명성(transparency), 지식재산권(IPR) 보호 정도, 행정의 효율성(efficiency of administration) 등을 단순 평균하여 구한 투자환경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IMD와 EIU에서 발표하는 각국별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구하였다. 또한 GDPDiff와 PerCapitaDiff는 각각 i국과 j국 간의 GDP 및 per capita GDP 차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BIT는 i국과 j국 간의 투자협정 체결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111)]

식 (4-2)에서 주목할 변수는 투자협정이 체결 여부와 투자환경을 나타내는 지수를 서로 interaction term으로 연결한 $BIT_{ij}^{insiders^*}Env$와 $BIT_{ij}^{outsiders^*}Env$ 변수이다. 즉 식 (4-2)에서 BIT의 계수값은 투자협정 체결이 투자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Env의 계수값은 투자환경 개선이 투자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BIT_{ij}^{insiders^*}Env$의 계수값은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을 경우 BIT 체결국 간에 나타나는 추가적인 투자증진효과이다. 또한 $BIT_{ij}^{outsiders^*}Env$의 계수값은 이러한 투자협정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경우 BIT 체결하지 않은 역외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투자증진효과를 이른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항은 투자협정 체결로 투자환경이 개선되어졌을 경우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투자창출 효과인 $BIT_{ij}^{insiders^*}Env$와 $BIT_{ij}^{outsiders^*}Env$의 계수값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 의하면 투자협정 자체로는 투자증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투자협정을 통한 투자환경이 개선되었을 경우에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앞의 중국자료를 활용한 본 분석에서

111) GDP와 Per capita GDP에 대한 자료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서 구하였으며, 양국간 거리는 Glick and Rose(2002)에서 구하였다.

도 보듯이 투자환경 개선은 투자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둘을 서로 연결($BIT_{ij}^{insiders^*}Env$ 와 $BIT_{ij}^{outsiders^*}Env$)함으로써 투자협정 체결로 인한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투자증진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양자간(bilateral) FDI 흐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자료 획득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양자간 FDI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개도국간 FDI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나 OECD 회원국이 개도국으로 투자한 FDI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0~2005년 사이 OECD국의 세계 60여 개국에 대한 누적직접투자액이 포함되어 있는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를 이용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누적직접투자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 투자액은 특정 시점에서 투자유입액에 비해 투자회수액이 더 많아서 음(－)의 FDI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증분석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투자협정은 WTO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자간 투자협정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모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투자협정 체결에 따른 투자증진효과를 파악하는 것인 만큼, 한·중 및 일·중 간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투자보증협정(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은 포함하지 않았다.[112]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투자협정의 성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투자협정의 성격과 무관하게 가입 여부에 따라 더미변수 처리함으로써 투자협정의 성격에 따른 차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113]

---

112) 비단 한·중, 일·중 간의 투자보증협정만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목적이 투자협정 체결에 따른 투자효과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투자협정만을 다루고 있을 뿐 국가간에 체결되어 있는 투자보증협정은 모두 제외하였다. 투자보증협정이란 해외투자자의 비상업적 위험에 대해 본국 정부가 손실을 보증하는 협정을 이른다.

[표 4-3]는 식 (4-2)의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분석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도더미변수와 국가더미변수를 포함하여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에 따라 고정효과(fixed effect)와 임의효과(random effect)를 사용하였다. 수평적 FDI는 시장규모가 클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GDP의 부호는 양(+)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기대했던 바와 같이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의 GDP 계수값은 모두 양(+)의 부호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양국간의 거리는 거래비용과 투자비용을 함께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거리가 멀수록, 즉 양국간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높을수록 투자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Knowledge-Capital Model에서는 양국 시장크기의 차이가 작을수록, 즉 비슷한 규모의 국가간에 투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 양국 GDP 차이를 나타내는 GDPDiff의 계수값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Brainard(1997)에서 제시한 생산요소 부존의 차이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사용한 per capita GDP 차이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음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에서 우리의 관심사항변수인 투자협정 여부를 나타내는 BIT 변수의 계수값은 비록 양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양국간 투자협정 그

113)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논제거리로서 최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즉 최근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논의함에서 각국이 체결한 FTA의 정도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각각의 FTA 성격을 적절히 반영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여야 하나 아직 이렇다 할 연구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투자협정도 같은 맥락에서 각국이 맺은 투자협정의 범위와 성격은 서로 다르며, 따라서 이를 실증분석 모형에 반영함이 마땅하나 이를 모형 속에 반영하기 위한 변수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자체로는 투자증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투명성(transparency), IPR, 행정의 효율성(efficiency of administration) 등을 단순평균하여 구한 투자유치국의 투자환경을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값은 고정효과 및 임의효과 모두에서 양(+)의 부호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함을 보여줌으로써 투자유치국의 투자환경은 양국 간 투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계수값이 추정방법에 따라 0.04~0.076을 보여줌으로써 투자환경의 10% 개선은 최소 0.4% 최대 0.8%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에서 중국자료를 이용한 결과와도 매우 부합하는 결과다.

투자환경의 정도를 나타내는 투자유치국의 투자환경지수와 투자협정을 결합한 $BIT_{ij}^{insiders^*}Env$은 우리의 예상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계수는 0.063～0.079이다. 이는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투자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FDI의 흐름이 평균 6.5~8.2%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114] 투자환경변수(Env)만을 고려했을 때 투자환경을 100% 개선하는 경우 8% 투자증진효과가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는데, 투자협정 체결에 의한 투자환경 개선은 약 8%까지의 투자증진효과를 내며, 이는 곧 투자협정 체결 없이 투자환경을 100% 개선했을 때와 비등한 효과가 있다. 즉 투자협정 체결과 함께 투자협정 체결 회원국들이 서로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할 경우 훨씬 큰 투자증진효과가 있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아울러 $BIT_{ij}^{outsiders^*}Env$ 계수값도 양의 부호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계수값 0.041~0.049는 투자협정 체결로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을 경우, 투자협정 당사국 이외의 타국으로부터도 투자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FDI 유입이 평균 4.2~5.0%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14) exp(0.063) −1*100 = 6.5%와 exp(0.079) −1*100 = 8.2%.

표 4-3. 투자협정과 투자환경

구분	(1) 임의효과 (Random Effects)	(2) 고정효과 (Fixed Effects)
거리의 로그값	-0.7265** (0.016)	-0.624*** (0.001)
투자유치국의 *GDP*	0.953*** (0.02)	0.998*** (0.024)
투자국의 *GDP*	0.195*** (0.023)	0.158*** (0.019)
GDPDiff	0.05** (0.028)	0.04 (0.051)
Per Capita Diff	-0.008 (0.02)	-0.005 (0.08)
투자유치국의 투자환경지수(*Env*)	0.076*** (0.0002)	0.04** (0.004)
BIT	0.067 (0.32)	0.053 (0.31)
$BIT_{ij}^{insiders^*}Env$	0.079*** (0.016)	0.063*** (0.011)
$BIT_{ij}^{outsiders^*}Env$	0.049*** (0.008)	0.041*** (0.007)
R-squared	0.56	0.69
Obs.	112,268	112,268

주: 추정계수의 Robust standard error는 ( ) 안에 보고되었다. 상수항과 *Year* 더미변수는 포함되어 있으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 ***, **와 *은 각각 계수의 1%, 5% 그리고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3. 한·중·일 투자협정에의 응용

이제 이상의 분석결과를 한·중·일 투자협정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적용하여 한·

중·일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이 과연 FDI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앞의 분석에 의하면 투자협정(BIT) 체결 그 자체로는 FDI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투자환경 개선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협정 체결과 함께 체결국이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할 경우 투자협정 체결국으로부터의 FDI는 분석모형에 따라 최소 6.5%. 최대 8.2% 증가하고 역외국가로부터의 FDI는 4.2~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중·일 투자협정이 세계 여타 국가의 투자협정과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한·중·일 회원국과 여타 국가로부터의 FDI는 10.7~13.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한·중·일 3국의 직접투자 누계액을 이용하여 한·중·일 투자협정으로 인한 FDI 변동을 추산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2008년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약 37억 달러로 일본의 약 65억 달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대(對)한 및 대일 투자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일본의 대한 투자 역시 약 24억 달러에 불과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4. 한·중·일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유 입 국			
		한국	중국	일본	세계
투자국	한국	-	3,748	426	22,904
	중국	97	-	59	55,907
	일본	2,369	6,496	-	130,801
	세계	11,710	92,395	24,550	-

주: 2008년 기준이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JETRO; 2008년도 중국 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표 4-5.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 시 한국으로의 FDI 총유입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일본	중국	여타 국가	총누계
증가율	6.5～8.2	6.5～8.2	4.2～5.0	
금액	153.9～194.2	6.3～7.9	388.2～462.2	548.4～664.3

주: 2008년 기준이다.

앞에서 추정한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한·중·일 3국이 투자협정을 맺었을 경우 서로 간에 그리고 대(對)세계로부터 얼마만큼의 투자가 늘어날 것인지를 분석하면, 먼저 투자협정 체결 자체만으로는 투자증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을 경우, 한·중·일 3국간의 역내 투자는 6.5～8.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이 계수값을 현재의 투자에 그대로 적용할 때 일본의 대한 투자는 1억 5,390만～1억 9,420만 달러 증가하고,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630만～79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중·일 3국이 투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정책의 투명성 증가, 행정의 효율성 증가 등은 비단 한·중·일 3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국가에도 적용되는 것인 만큼 이로 인한 여타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는 앞의 분석으로부터 4.2～5.0% 증가하게 된다. 이를 역시 현재의 투자상태에 적용하게 될 경우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여타 국가로부터 3억 8,820만～4억 6,220만 달러의 추가적인 FDI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하면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로 인한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인 대한 투자는 역내 국가(중국, 일본)로부터 최소 1억 6,020만 달러, 최대 2억 210만 달러 증가하고, 여타 국가로부터 최소 3억 8,820만 달러, 최대 4억 6,22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해석상 주의해야 할 것은 위의 추정치는 연간개념이 아니라 분석기간인 1990～2005년까지 16년 동안 일어나는 총량개

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연간개념으로 환산한다면, 한·중·일 투자협정으로 인해 연간 최소 3,430만 달러, 최대 4,150만 달러 추가적인 FDI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 소결: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한·중·일 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투자협정 체결 자체만으로는 투자증진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기존의 UNCTAD 등에서 분석한 연구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와 투자협정 간에는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투자협정은 투자결정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규모와 시장의 성장가능성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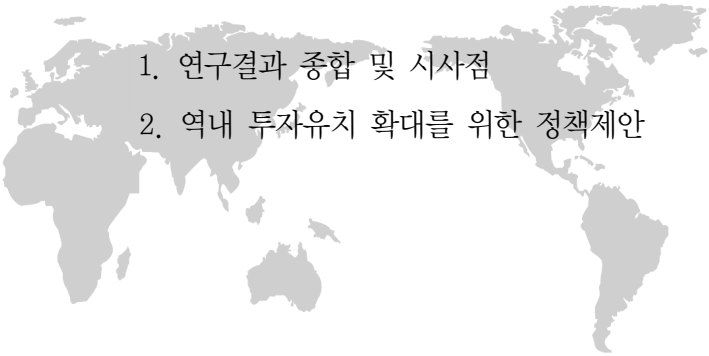
그러나 이 투자협정은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법제도의 미비성과 투자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투자 유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중국자료를 활용, 투자환경과 투자의 흐름을 분석해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다음, 이를 투자협정변수와 서로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같이 투자협정 체결로 인한 투자환경 개선은 추가적인 투자증진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분석결과를 한·중·일 투자협정에 적용한 결과,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로 인한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인 대한 투자는 역내 국가(중국, 일본)로부터 최소 1억 6,020만 달러, 최대 2억 210만 달러 증가하고, 여타 국가로부터 최소 3억 8,820만 달러, 최대 4억 6,22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연간개념으로 환산해보면, 한·중·일 투자협정으로 인해 최소 3,430만 달러, 최대 4,150만 달러의 추가적인 FDI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보다 정교한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의 방법론 또한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한·중·일 투자협정의 효과를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존 투자협정들의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과거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협정의 자료를 이용한 평균적인 추정치들에 기초하여 구한 것으로 기존 투자협정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도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2. 역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1.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및 관련 정부정책을 파악하고, 상호 투자의 장애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역내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국의 대세계·역내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과 3국 상호간 투자환경과 장애요인을 각각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이 미흡한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을 경우, 특히 한·중·일 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중·일 3국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계량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투자는 후생증대효과, 경제성장효과, 국제수지효과, 고용증대효과, 기술이전효과 및 기타 기업구조조정 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경로를 통해 투자유치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중·일 3국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15] 아울러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을 통해 3국은 자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적극적인 해외투자 확대정책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국간 상호 투자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 외에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116] 최근에는 이것마저도 중국의 외자우대세제 폐지, 노동 관련 규제 강화 및 노동비용의 증가, 반독점 및 M&A 규제 강화, 투자 선별화 정책 및 가공무역 억제책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 한·중·일 3국의 역내 투자비중은 역내 무역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4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5-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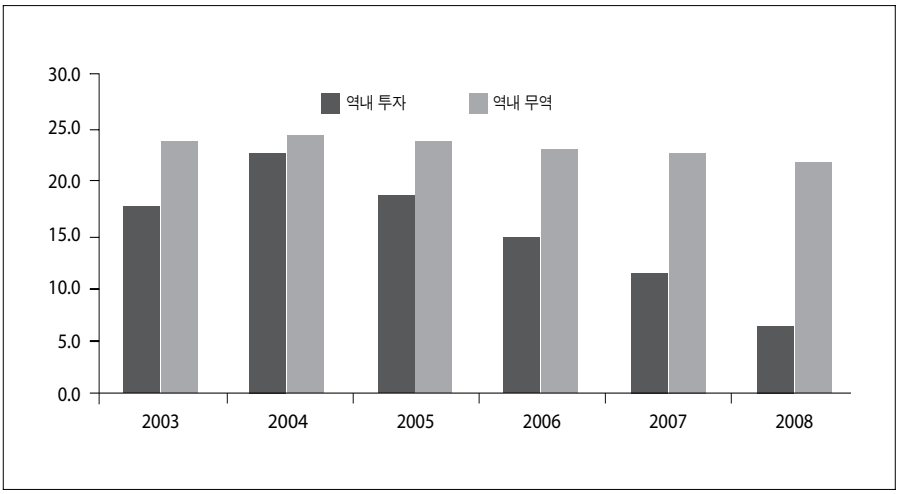
---

115) 김준동(1996, 2009).

116) 1990년 이후 한·중·일 3국간 무역이 빠르게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일본기업의 한국 및 중국 투자와 한국기업의 중국투자를 지적할 수 있다.

그림 5-1. 한·중·일 3국의 역내 투자 및 역내 무역 비중 비교

(단위: %)



자료: 한국(한국수출입은행); 중국(MOCOM); 일본(JETRO)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3국의 역내 투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즉 중국은 그동안 단순히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혹은 중간재 조달을 목적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최근 한국과 일본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상대적으로 확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해외투자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M&A 투자대상으로서 한국과 일본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2장 및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국간 이렇게 역내 상호 투자가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3국의 해외투자정책 및 각 기업단위의 필요성 측면에서 상호 투자를 유인하는 요소가 크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3국의 대세계 해외직접투자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3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역내국으로의 투자 잠재성은 역내 풍부한 소비시장과 높은 기술력 등의 요인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세계 소비시장으로의 역할을 해온

미국 및 서유럽의 위상 감소로 인해 역내 소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역내 투자의 증가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3국간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이러한 상호 투자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향후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은 투자에 따른 수익이 현지 진출 및 생산에 따른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생하게 된다. 이에 근거할 때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 및 생산 비용을 감소시켜주거나 혹은 현지 진출에 따른 판매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여건을 형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지 진출 및 생산 비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것이다.[117] 기업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 해외 진출에 따른 국내와 투자대상국 간의 제도적·문화적 차이 등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중·일 각국이 역내 투자기업에 장애요인을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투자 관련 규제의 완화뿐만 아니라 양국간 투자제도 차이 등과 같은 현지 진출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4장에서는 특히 3국간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주요한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증진효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분석결과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의 경우 협정 체결 자체만으로 투자증진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나, 투자협정 체결이 해당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법

117) 생산비용 절감과 관련해서는 각 기업의 생산성, 규모의 경제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조건을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Helpman, Melitz and Yeaple(2004)는 한 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도의 미비성과 투자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투자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자협정 체결과 함께 투자협정 체결 회원국들이 서로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할 경우 훨씬 큰 투자증진효과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다음 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중·일 3국간 상호 투자 활성화의 측면에서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역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가. 한·중·일 공동의 과제

1) 한·중·일 투자협정 추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협정 체결은 해당 국가의 대외신뢰도가 제고하고 법제도의 미비성과 투자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며, 특히 양국간 투자제도 차이 등과 같은 현지진출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중·일 투자협정은 2007년 한·중·일 정상회의 시 정부간 투자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2007년 3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1년 현재 제11차 협상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양자간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과 현재 3국 정부간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의 추진 현황을 간략히 검토해봄으로써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과 관련한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살

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투자협정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118)]

가) 한·중·일 투자협정 주요 내용

(1) 한·중 투자협정[119)]

한·중 투자협정은 양국 투자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2007년에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20)]

첫째, 기존의 투자협정에서는 투자, 투자자, 수익만 간단히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는 한편, ICSID 및 ICSID 협약,[121)]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둘째, 기존 투자협정에서는 투자의 최소대우(보호의 정도)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에 대한 항구적(Constant) 보호와 안전의 부여"라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투자협정에서는 투자의 관습법적 대우를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완전하고 항구적인 보호(full and constant protection)"로 비교적 명확화하였다.

셋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예외규정을 축소하는

118) 중국과 일본 간 투자협정의 경우 체결시점도 오래되었고 투자보장에 대한 규정이 여타 협정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므로 한·중 간, 한·일 간 투자협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119) 변웅재(2007), 「한중투자보호협정 개정 주요 내용 및 그 효과 검토」 참고.

120) 한·중 투자협정은 1992년 최초로 체결되었으나, 이 협정은 낮은 수준의 형식적인 협정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는 미흡하였다. 이에 2002년 한국이 중국에 정식으로 협정 개정을 제안한 이후 2007년 9월 7일에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2007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다.

121)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약자로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에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Convention,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196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ICSID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 국민 간의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등 외국투자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하였다. 기존 범위가 투자, 수익, 기업행위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투자의 확대, 운영, 관리, 유지, 사용, 판매, 처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내국민대우의 예외규정을 중국 측이 향후 점진적으로 줄일 의무가 있으며 사후 더욱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포함하였다.

넷째, 무력충돌로 인한 손실 보상 시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최혜국대우만 규정하였던 것에서 내국인대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다섯째, 송금과 관련하여 「자국 국내법과 규정」에 따른다는 예외를 삭제하여 원칙적인 자유송금을 인정하였으며, 예외사유를 명확화하고 예외의 경우에도 형평하고 비차별, 신의성실원칙 하에 대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수지 불균형, 심각한 금융위기, 금융정책으로 인해 거시경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절차(formalities)에 의한 송금 지연 시 최대 6개월까지 지연이 가능하던 것을 2개월로 단축하였다.

그밖에 모든 투자 관련 분쟁을 국제중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투명성 관련 규정, 이행의무부과금지규정 등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기존 내국민대우, 수용, 송금에 대한 폭넓은 중국 측의 유보규정을 포함하고 있던 의정서를 삭제함으로써 무엇보다 기본적인 투자보장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다만 한·중 투자협정의 경우 투자의 허가 자체에 대해서는 자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자자유화'보다는 '투자보호'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122)]

---

122) 투자보호(장)는 투자진입 이후 단계, 투자자유화는 투자진입 단계에 대한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양자간 투자협정은 투자보장에 대한 협정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투자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투자자유화협정 체결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2) 한·일 투자협정[123)]

한·일 투자협정은 투자자유화를 포함하는, 한국에서 최초로 체결(2002년 3월)된 수준 높은 투자협정이다. 양국의 투자협정은 투자자유화 협정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투자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투자자에 대한 자유 확대와 규제의 폭 축소에 있다. 먼저 부속서에 기록된 방위, 방송 산업 등 예외분야[124)]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고, 투자와 관련된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였다.[125)] 다음으로 양국 상호간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였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행정절차, 사법적 결정 등 모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 관련 정책에 대한 상호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투자자와 투자기업의 경영인·전문기술자 등 투자 관련 핵심인력의 일시적인 입국·체류를 원칙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투자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둘째, 투자자보호부문을 강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투자자와 국가 간 투자분쟁에 대해 국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수출의무, 내국산 자재 사용의무, 지식이전의무와 같은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였다. 또한 공공목적을 위해 투자자산을 수용하는 경우나 전쟁·소요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투

123)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02. 12. 2), 「한일 투자협정 2003년 1월 1일 발효」 참고.

124) 부속서 1에서는 한국의 경우 방위산업, 방송산업, 수산업, 전력산업, 가스산업 등 17개 분야, 일본의 경우 수산업, 항공기산업, 방송산업, 전력산업, 가스산업 등 13개 분야를 예외로 하였으며, 부속서 2에서는 한국의 경우 벼·보리 재배업, 육우사육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 10개 분야, 일본의 경우 석유산업, 광업, 철도산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 16개 분야를 예외로 하였다.

125) 내국민대우.

자 원금 및 이에 따른 과실의 국내외 송금을 보장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국가의 안전보장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특별규정으로 '일반적 예외 및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과 '금융분쟁의 국제분쟁해결절차 적용대상에서의 제외' 등을 포함하였다.

넷째, 기타 조항으로 외국인투자 촉진 목적으로 환경적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투자협정의 이행 점검 및 협의, 기타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된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3)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한·중·일 투자협정 Modality에 관한 비공식 공동연구」(2004년 종료) 시, 산관학 연구그룹은 3국에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열거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3국간 협의체 설치를 건의하여 채택하였다. 본 산관학 연구그룹 보고서에서 열거한 투자환경 개선요망 5개 영역은 ① 법·규정의 투명성, ② 지식재산권 보호, ③ 분쟁해결 mechanism(각종 claim 센터 설치 등), ④ 투자 관련 서비스 증진, ⑤ 국가·지자체 간 정책 및 집행의 일관성 등이며, 이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투자협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126)]

다만 현재 한·중·일 간 특히 중국의 투자자유화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어, 11차에 걸친 3국간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대중 투자규모 및 기진출 자국 기업 보호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체결에 적극적이며, 3국간 FTA 체결보다 투자협정 체결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왔으나 최근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발전수준이 한·일에 아직 미

126)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07. 7. 30) 「제2차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개최」(첨부자료 「한·중·일 비즈니스환경 개선 협의체 회의 개요」 참고).

치지 못하고 자국 현행 법령이 설립 전 내국민대우(Pre-NT)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Pre-NT 조항 포함 등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에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2007) 및 한·중 FTA 개시 가능성을 감안, 중국 진출 우리 기업 보호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나 한·중 투자보장협정에서의 플러스 수준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이다.

나) 미국 BIT 표준안과 한·중·일 양국간 투자협정의 비교

미국의 BIT 협정문은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기타 자유무역협정 내의 투자협정에도 반영되고 있는 높은 수준의 BIT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이에 미국의 BIT와 한·중·일 양국간 체결한 BIT 협정문을 비교해봄으로써 현재 한·중, 한·일 간 투자협정의 규제완화수준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궁극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으로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 이슈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1]은 기체결한 한·중·일 양자간 BIT와 미국의 BIT 협정문을 상호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역내국 간에 체결한 BIT와 미국의 BIT 협정문 간에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 한·중·일 양자간 BIT와 미국 BIT 협정문의 비교

미국 BIT 표준		한·일 BIT	한·중 BIT
제1조	정의	○	○
제2조	대상 및 범위	○	○
제3조	내국민대우	○	△
제4조	최혜국대우	○	○
제5조	대우의 최소 기준	○	
제6조	수용 및 보상	○	○

표 5-1. 계속

미국 BIT 표준		한·일 BIT	한·중 BIT
제7조	송금	○	○
제8조	이행요건	○	
제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조	투자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출판	○	
제11조	투명성	○	○
제12조	환경보호 조항	○	
제13조	인력 관련 조항	○	
제14조	비합치 조치	○	
제15조	특별 형식 및 정보요건		
제16조	비침해규정		
제17조	혜택의 부인		
제18조	최소 보안		
제19조	정보 공개		
제20조	금융서비스		
제21조	과세	○	
제22조	발표, 존속, 종료	○	○
제23조	협의 및 협상		○
제24조	청구의 중재 제기	△	△
제25조	중재에 대한 각 당사자국의 동의	△	△
제26조	각 당사자국의 동의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
제27조	중재인의 선정	△	△
제28조	중재의 수행	△	△
제29조	중재절차의 투명성	△	△
제30조	준거법	△	△
제31조	부속서의 해석	△	△
제32조	전문가의 보고서	△	△
제33조	병합	△	△
제34조	판정	△	△
제35조	첨부와 참고	△	△
제36조	문서의 송달	△	△
제37조	국가간 분쟁 조정	△	△

주: 1) ○: 규정 있음.
2) △: 규정은 있으나 미흡.
자료: USTR(2004), “2004 Model BIT”; 외교통상부 조약정보 DB.

첫째, 미국이 체결한 BIT 협정문에서는 투자개념을 M&A 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간접투자) 외에도 선물, 옵션, 기타 파생상품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모든 자산(every asset)”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일 역내 BIT 협정문과 차이가 있다. 즉 모든 자본시장, 금융상품, 자산 외에도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모든 유무형의 가치가 투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투자분쟁조정에 대한 규정이다. 한국·일본, 한국·중국 투자협정에는 단 하나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 표준안에서는 하나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양국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해외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국제법적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분쟁조치를 협정문에 상세히 명시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판단된다. 이처럼 한·중·일 간 체결된 양자간 BIT보다 미국의 BIT 협정문이 투자자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밖에도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 국적 제한 금지, 노동 및 환경 규제 완화, 금융서비스 완전개방 등의 조항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셋째, 미국의 BIT 표준안과 비교해볼 때 한·일 간 투자협정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자유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한·중 간 투자협정은 기본적으로 투자보장협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한·중 투자협정의 경우 내국민대우에 투자 설립 전 단계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투자의 증진 및 보호규정을 통해 상대방 국가 투자자의 투자를 자국 내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투자보장으로서의 목적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중 투자협정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하였던 전통적인 투자보장협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한·일 간 투자협정은 투자자유화협정으로 비교적 미국의 BIT 표준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 한·중·일 투자협정 추진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에 대한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한·중·일 3국이 체결한 양자 투자협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투자협정의 범위나 수준에 대한 3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투자자유화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원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설립 전 내국민대우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논의를 계속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중국 측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절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투자협정의 수준 또한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의 투자협정 표준안의 경우 모든 외국인투자자본에 대해서 완전자유화에 가까운 조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특히 중국의 여건이나 정책적 입장을 고려해볼 때 사실상 현 단계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의 한·중, 한·일 간 투자협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한·중·일 투자협정은 최소한 기존 양자 투자협정보다는 개선된 수준으로 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가능한 한 기본적으로는 한·일 간 투자협정에 준하는 수준으로의 협정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며, 최소 2007년 개정된 한·중 간 투자협정보다는 개선된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Berger(2010)[127] 등의 연구에 따르면 투자협정에서

127) Berger, Axel *et al.*(2010), “Do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Lead to More FDI?: Acccounting for Key Provision Inside the Black Box”, Staff Working Paper ERSD-2010-13, World Trade Organization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설립 전 내국민대우의 포함 여부나 그 범위가 양자간 투자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협정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한·중 간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으로서 설립 전 내국민대우를 포함하는 개선된 투자협정 체결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투자자보호의 경우 현재 3국간에는 미국과 비교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투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3국간 높은 보호수준의 투자협정 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 단계에서 이것이 어려울 경우 투자자유화 규범을 명확하게 만들고 상호 투자정책 감시체제를 포함하는 비구속적 투자원칙(NBIP: 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128]의 채택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중, 한·일 간 투자협정을 비교해보면 한·일 간 투자협정에만 포함된 조항으로 사법, 행정구제 절차상의 평등대우(제3조),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정의 존중(제6조), 투자 관련 핵심인력의 입국, 체류 및 근로허가(제8조), 이행의무 부과 금지(제9조), 일시적 세이프가드(제17조), 건전성 조치(제18조), 환경조치 완화 금지(제21조) 등이 있다. 이 중 논란이 될 수 있는 조항은 제6조, 제8조, 제9조 등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아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투자 관련 인력의 입국 등에 대한 문제는 반대로 한국과 일본 측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조항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행의무 부과 금지에 대한 규정에 대한 합의는 각종 투자자유화 협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논쟁사안이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대해서 한·중·일 3국간 합의가 중요한데, 가능한 본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준에 대해서 협의하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투자자유화협정으로서의 기본방향을 설정해놓은 후 그 수준을 단

128)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APEC '제6차 각료회의'(1994년 11월, 자카르타)에서 채택되었으며, 문자 그대로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회원국의 투자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한 일정의 선언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계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투자협정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 상황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3국간 투자확대과정에서 M&A형 투자 확대 등으로 투자행태 또한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미국 BIT 기준을 참고로 단계적으로 투자대상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등 투자자유화의 폭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비교한 바와 같이 미국 투자협정 표준안을 보면 투자개념이 사실상 모든 자산을 포괄하며,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 국적 제한 금지, 노동 및 환경 규제 완화, 금융서비스의 완전개방 등 상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FTA에서 논의되는 높은 단계의 투자자유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관계가 보다 밀접해지고 상호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경우 이러한 투자자유화협정의 질적 개선문제와 더불어 한·중·일 FTA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향후 자연스럽게 투자협정 또한 FTA 의제로서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중·일 3국이 FTA를 통해 어느 정도의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한·중·일 투자협정의 체결 수준과 그 효과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FTA 협상에서의 투자자유화와 보호 수준에 대한 3국간 공통인식이 형성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결국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우 한·일 투자협정의 구성안을 기본으로 자유화협정의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부속서를 통해 3국간 민감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자유화 범위를 확대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중·일 투자협정을 한·중·일 FTA의 일부로 반영하고 한·중·일 FTA의 틀 내에서 추가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경제발전수준이 한국이나 일본에 미치지 못하고 자국의 현행법령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국은 지금까지 투자보장협정에서 Pre-NT

등 투자자유화 요소를 채택한 선례가 없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정부의 경제정책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로 설립 전 투자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기체결한 FTA의 상품분야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자유화를 시행하는 조기수확(EHP)프로그램[129]을 3국간 투자협정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예를 들면 녹색산업 등과 같은 신성장산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요구됨에 따라 초기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 이러한 공통이해관계를 가진 특정 업종 혹은 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를 시행하고 향후 확대해가는 방안도 3국 정부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한·중·일 3국이 투자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자국 투자자보호와 함께 역내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중·일 투자협정을 낮은 수준에서 합의한 후 단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확대시켜나갈지라도 협정문의 기본방향은 투자자들에게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중·일 투자협정은 비록 협정 발효 초기에는 낮은 수준이 될지라도 3국간 투자 관련 제도를 조화하여 상대국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역내 투자에 따른 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투자협정이 직접투자 유치에서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서 기준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 더 중요한 효과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3국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 특히 중국이 보다 전향적인 입

129) 조기수확은 긴급한 사유로 인해 협정 전체가 발효되기 전에 협정대상이 되는 특정 상품을 먼저 자유화(관세인하 및 시장개방)하는 조치를 지칭한다.

장을 가지고 3국간 투자협정 체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국 상호 투자에 대해 차별적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명분이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중국은 주요 기간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에 대해 특별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 예외를 둘 필요나 명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 및 일본의 자국 내 투자가 분명한 이득이 되며, 충분한 명분을 갖춘 경우 해당 분야 투자자유화에 대한 합의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 대중국 투자가 낮은 인건비의 활용 등 일방적으로 투자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투자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중·일 3국의 기업들이 각각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제3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중국 등에 현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해당 투자에 대해 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사업의 경우 3국의 기업 및 국가적 차원에서 공통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례이며, 동북아지역협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3국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강화

전술한 바와 같이 한·중·일 투자협정은 3국 정부의 노력에 따라 역내 직접투자에서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의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장의 한·중·일 각 국가별 투자 장애요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유한 상관행 등 비제도적 요인은 역내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명시적인 투자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폐쇄적인 유통체계 등이 외국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줄곧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

우 전반적인 투자환경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업 정보의 원활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투자협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들로 3국간 투자 및 기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이후 기업들의 현지 경영활동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야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기관 혹은 투자지원기구를 중심으로 이러한 국가별 투자환경의 주요 특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 정보를 현지 진출기업에 지원함으로써 문제극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물론 현재 한·중·일 3국 모두 투자 유치 혹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활동은 아직까지는 현재 투자비중이 높은 한국 및 일본 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3국 차원에서 업종별 특유의 상관행 및 규제 현황 등을 제공해주는 정보교환체계와 네트워크의 공동조성이 필요하다. 즉 3국간 공동협의체를 통해 상호 진출기업에 대한 비즈니스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3국 투자 관련 법령 및 규제 관련 정보제공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3국간 문의소(inquiry point)와 투자 관련 법제, 투자 실패 및 성공 사례 등의 자료를 축적하고 질문·응답의 통로가 되는 상설창고(depository)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한·중·일 3국이 투자와 무역이 연계된 생산네트워크형 분업구조임을 고려할 때 3국간 투자촉진시스템 구축은 위에서 언급한 상관행뿐만 아니라 업종별 아웃소싱 관련 정보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이는 3국간 투자와 무역 간 선순환체계를 갖추는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결국 역내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3) 자국 내 비즈니스환경 개선

세계은행이 발간한 *Doing Business*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의 비즈니스환경은 그 경제규모 등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영환경은 한국·일본과 비교해볼 때도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별로 볼 때 한국은 고용 및 해고의 문제를, 중국의 경우 창업, 건축 인허가, 고용·해고, 세금납부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세금납부 및 창업여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각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제 각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성장잠재력 측면에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시장여건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본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폐쇄적인 시장환경으로 외국기업들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한국의 경우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외국인투자환경이 상당 부문 개선되었으나, 노사갈등 및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외자기업들이 국내 진출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한·중·일 3국간 상호 투자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투자협정 등을 통해 한·중·일 3국 상호간 투자자유화조치가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3국에는 근본적으로 자국의 경영환경을 보다 개선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사례로는 2008년 합의된 바 있는 「한·중·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Action Agenda」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3국 비즈니스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들을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3국의 비즈니스환경을 각각 조사·보고하여 답변서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 의제는 법령의 투명성,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해결 메커니즘, 투자 촉진, 중앙·지방행정의 일관성, 기타 분야의 개선 등 6개 부문에 총 5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각국의 법령 및 정

책 등 비즈니스환경에 대한 자료를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인들의 투자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3국의 비즈니스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협력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해당 Action Agenda의 수정, 보완 및 이행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적이고 원활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의제에 대한 합의가 그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의견수렴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투자 관련 지원체계의 양적·질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앞절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3국간 생산네트워크적 분업구조를 고려하면, 비즈니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국 내 규제 완화 이외에 3국간 다차원적인 비즈니스채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비즈니스환경의 개선도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3국간 파산법이나 기업법 등의 조화는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비용과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결국 3국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 산업협력프로그램 활성화

역내 투자 활성화가 단순한 투자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타 산업협력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간에 존재하는 산업기술수준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상태에서 한·중·일 FTA 등보다 진전된 통합체제가 형성될 경우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 고착, 무역불균형 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가 클 수 있다. 또한 한·중·일 3국간 기술표준 차이의 문제도 3국간 상호 투자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11월 17일 '제1회 동아시아 산업기술협력 포럼'에서 중국 과학기술부, 일본 경제산업성 등 3국 산업기술 주무부처가 모두 참석해 각국의 산업기술정책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는 등 3국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으로 협력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산업협력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차원의 상호 투자가 각국의 산업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기술격차 축소, 부품·소재의 공용화 및 표준화 등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3국간 산업·기술 협력과 관련한 역내 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투자규제를 완화해주는 한편, 민간 중심의 경제기술진흥협회(가칭) 창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략적으로 한·중·일 3국 기업간 역내 협력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역내 산업·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중심이 되어 투자 및 기술이전의 측면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일본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의 민간·공공의 협력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일본 내 협력프로그램으로는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기술협력사업,[130] 해외무역개발공사(JODC: Japan Overseas Development Corporation)의 전문가 파견사업[131] 등이 있다. 물론 해당 사업들의 경우 주로 개도국과의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130) 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국제협력기구법(2002년)에 따라 2003년 10월 개편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으로 주된 임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 유·무상자금협력, 민간협력활동의 촉진, 해외이주자·일본인계에 대한 지원, 기술협력을 위한 인재양성·확보, 조사연구, 긴급원조를 위한 기자재의 비축·공여 및 국제긴급원조대 파견 등 기술·자금·인력 면에서의 국제협력사업들이다.

131) 이 사업은 일본 민간기업과 단체의 협력을 얻어 우수한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함으로써, 해당국의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산업발전, 일본계 기업의 활성화 및 일본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ODA형, 중대형 및 EPA형 사업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한·중·일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이와 매치되는 중국과 한국 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면 별도의 협력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한국의 과제

한·중·일 3국간 투자장벽 완화는 한·중·일 FTA 등 역내 경제통합단계로 나아가기에 앞서 역내 교류 및 협력을 보다 다양화·안정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궁극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지닌 역내 시장에 대한 상호 의존도를 점차 늘려감으로써 세계경제의 중심블록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불안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한 면에서 역내 투자장벽 완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3국간 협력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에서뿐만 아니라 역내 규제개혁에서도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3국간 합의점을 도출 및 제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3국간 합의 도출이 어려운 이유는 시장환경 및 경제발전단계 등에서 서로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역내 교류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단순히 중국과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내 개방화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시행 및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투자협정의 효과성 제고방안

앞서 한·중·일 투자협정의 추진에서 투자자유화협정으로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도록 하되, 현재의 3국간 입장차이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한국 입장에서 향후 한·중·일 간 투자협정 체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타 국가와의 FTA 및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체계화된 투자협정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이 투자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6개국, FTA를 체결한 국가는 8개국이나 투자부문의 규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투자협정의 경우 대부분 기업 진출을 위한 투자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FTA 및 최근 체결된 투자협정의 경우 투자자유화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기 때문이며, 이는 각 체결대상국의 정책에 따른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역내 투자자유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투자협정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 및 공표하여 한국의 투자자유화에 대한 의지 및 그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체결된 투자협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중투자협정의 경우 한·일 투자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이나 분명 2007년 개정을 통해서 투자보장 측면에서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상호 투자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정협정의 제3조 제2항에서는 “중국정부가 모든 비합치조치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라고 규정하여 중국정부가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기업 및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한·중·일 간 투자협정 체결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뿐만 아니라 여타 선행연구 및 설문조사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한·일, 한·중 간 투자협정 체결로 인한 직접적인 투자증진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일기업 간의 경합관계로 인해 대규모의 대한국 투자가 어렵다는 점, 비용 면에서의 투자매력도가 상당히 저하되었다는 면에서도 향후 투자증대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의 투자협정이 이러한 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합의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투자협정 체결은 상호 투자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을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역내 투자에 관심이 있으나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3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유인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아직 역내 투자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재 체결된 역내 양자간 투자협정의 내용 및 중요성, 그리고 나아가 한·중·일 3국간 논의되고 있는 투자협정에 대한 필요성 및 그 한계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투자협정에 대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 협정문 원문 및 보도자료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소규모의 기업들의 경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들이 실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기존 투자협정 적용사례 위주의 조사 및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통관협력의 강화

한국기업들의 역내 진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협력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생산기지 이전이 목적인 경우의 비중이 높으며, 대중 수출의 경우도 이로 인해 유발되는 중간재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현지 투자 및 기업운영에서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특히 중국의 경우 상

대적으로 통관업무 처리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며, 예측 가능성이 낮아 한국·일본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 AEO 상호 인정협정 체결 등을 통해 일정 부문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EO 제도는 특정 요건 및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에 통관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최근에는 이를 국가간 상호 인정하는 데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즉 한국에서 AEO로 인정된 기업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통관절차에서도 별도의 심사 없이 동일한 특혜를 누릴 수 있다.[132] 한·중·일 상호간 AEO 상호 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 등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부품 등을 조달받을 수 있으며, 통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해당 국가로의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내 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역내 투자 유치 활성화 측면에서도 자유롭고, 기업친화적인 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국제기구 등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한·중·일 3국 중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한국의 비즈니스환경은 특히 노무환경부문을 중심으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과 중국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실제 중국의 경우 상무부 차원에서 한국정부에 투자환경 개선차원에서 요구하는 부문으로 중국인력의 한국 유입과 관련한 편의성 제고, 서비스분야

132) 정형곤 외(2010),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 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시리즈 1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26~27 참고.

등 투자제한 완화, 조세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한 바 있다.[133] 반면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협의체인 서울재팬클럽을 통해 제시된 바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은 노동문제의 진전 없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선요청사항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영환경 개선이 지적된 바 있는 몇 가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수인력의 확보 가능성, 노동시장 유연성, 각종 인프라 수준, 외국인 거주환경의 편의성, 정부규제수준 등 각종 국가·사회적 요인을 포괄하는 국가적 시스템의 질적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 및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각종 기업이 요구하는 경영환경 개선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이에 대한 빠른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투자 관련 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가 구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각종 애로요인에 대한 검토 및 신속한 개선조치 이행 등을 통해 한국의 진출 및 경영활동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한국정부의 기업친화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 KOTRA 내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및 고충처리기구 등 관련 조직의 확대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요인 해결을 위한 지원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특히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대응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채널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133) Chen Wenlin(2010. 12), “China’s Outward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관련 세미나 발표자료.

4) FTA의 추진 활성화

FTA 체결의 확대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역내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FTA 체결 확대는 제한적인 한국시장 수요의 간접적인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 한국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투자비중이 높지 않은 이유로서 근본적으로 한정된 한국의 시장규모에 따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각종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촉진정책을 시행할지라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다만 FTA 체결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세계 주요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주변국들에 비해 개선될 경우 중국 및 일본 주요 기업들이 우회진출을 위해 한국 투자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FTA 체결로 인한 한·중·일 역내 투자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나 기타의 연구사례를 통해 볼 때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Blomstrom & Kokko(1997)[134]에 따르면, ① 미·캐나다 간 FTA의 캐나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은 미국 투자 감소, 역외국 투자 증가, ② NAFTA의 멕시코에 대한 영향은 역내외국 모두 투자 증가, ③ MERCOSUR의 브라질에 대한 영향은 주로 역외국의 투자 증가로 나타난 바 있다.

다음으로 주요국과의 FTA 체결 확대는 투자환경의 개선 측면에서 역내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FTA의 체결은 관세철폐뿐 아니라 투자 보장 및 자유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진행되는 만큼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시장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 등 선진시장과의 FTA 체결은 국제

---

134) Blomstrom & Kokko(1997), “Regional integr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conceptual framework and three cases”, NBER Working Papers 601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적인 이미지 제고를 비롯하여 투자대상국으로서의 매력도 및 신인도를 향상시키는 요인 또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과 FTA 및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FTA 체결대상국가 선정 시에도 위와 같은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5) M&A형 투자 활성화

역내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M&A 방식의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및 중국·일본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M&A 방식의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일 3국 모두 문화의 차이나 제도적 장벽으로 인하여 외국기업의 직접적인 현지 진출이 쉽지 않으며, 실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하여 구미기업 등은 이 지역들로의 진출방식으로 M&A를 선호한다. 단독진출은 사업을 정상궤도로 올려놓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M&A는 필요한 경영자원을 단기에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M&A 방식을 통한 해외자본 유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여 자국 내 기업을 M&A하는 데 애로가 많다. 그럼에도 한·중·일 3국 역내 기업에 대한 세계 각국 기업들의 M&A 공세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또한 M&A를 해외시장 진출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기업의 해외 M&A 활성화의 미흡은 관련 규제 등 제도적인 부문의 문제보다는 해외 M&A에 대한 경험부족과 이에 따른 지원기능 취약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A의 긍정적인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반여건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기업차원에서 국경간 M&A를 기업 대형화와 규모의 경제로 인

한 비용절감, 시장지배력 증대, 신사업부문 진입 등 M&A로서의 측면뿐 아니라 이머징마켓의 수요 확보, 자원개발, 선진국 시장으로부터의 기술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의 효율적인 방식으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순기능적인 면이 잘 활용되고 M&A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경영권 방어수단 등의 제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경간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조달의 원활화, 충분한 인수대상기업 관련 정보의 확보, 법률 및 금융 전문가 등 M&A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컨설팅기능 강화, M&A를 주도할 수 있는 대형 투자은행 육성, 그리고 M&A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국경간 M&A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큰 연구주제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한국의 국경간 M&A와 관련한 제도적 특성 및 지역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135] 특히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지역권에서 M&A 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는 등 추가적인 관련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

현재 제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 투자는 사실상 추가확대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힘들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출공장으로서의 역할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며,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투자도 3국간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여 볼 때 지금보다 크게 확대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

135) 이와 관련한 최근 연구사례로는 현혜정 외(2008),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연구』 등을 참고.

반면 서비스산업의 경우 한·중·일 3국 공히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인위적으로 해외자본 유입에 대한 높은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핵심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특히 중국의 경우 법률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유통 및 물류, 광고, 교육 부문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설립 자격요건을 두거나 특정 부문에 대한 외국회사의 진입을 불허하는 등 높은 수준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일본 또한 각종 국제기구 및 외국기업들에 의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도적인 장벽 완화가 전제될 경우 투자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지금까지의 정책기조가 그래왔듯이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취약한 한·중·일 3국이 이 분야를 쉽게 개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한·중·일 FTA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전개되고 있으며, 동북아 역내 기능적 통합이 가속화될 경우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특히 비즈니스서비스 분야에 대한 상호 진출수요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은 한·중·일 역내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역내 경쟁우위 확립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서비스의 차별화 능력은 정형화되어 있거나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외자 유치를 통해 노하우를 전수받고 벤치마킹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형곤(2009)[136]은 특히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부패수준 및 투명성, 지식재산권, 비즈니스환경, 국제화에 대한 태도, 노동 관련 규제 등 제도적 요인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136) 정형곤(2009),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중·일 비즈니스서비스산업 경쟁력 비교』, 연구보고서 09-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콩·싱가포르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의 개선과 더불어 글로벌 기업과의 M&A 및 합작투자 활성화를 위한 매칭서비스 제공 및 인센티브 확대, 국제적인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한 관련 교육시스템 개선 및 해외 고급인력 유치 등 FDI 유치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 또한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한·중·일 간 투자 활성화 및 역내 협력방안에 대한 검토 또한 국경간 M&A 활성화 전략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변화되고 있는 한·중·일 간 서비스부문의 교역 ·투자 현황 및 관련 제도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관호. 1998.『최근 국제투자 분쟁사례의 연구』 연구보고서 98-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1996.『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 정책자료 96-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09.『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09-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태식. 2008.「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진출 현황분석: 대한국 투자를 중심으로」.『한중사회과학연구』, 제6권 제1호.

김화섭. 2004.『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한·중·일 경제협력 공동연구: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대한상공회의소. 2010.「중국 서비스산업 현황과 우리 기업 진출방안」.

무역연구소. 2002.『대일 수출 부진요인과 대응방안』. 무역연구소 연구보고서.

박길상. 1999.「한국섬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산학경영연구』, 제12권.

박순찬·강문성. 2004.『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 04-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승록 외. 2008.「중국의 세계기업 인수, 합병 현황과 시사점」.『아시아연구』. 한국아시아학회.

박현정. 2007.「해외직접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재정경제부 수탁과제).

사공목. 2006.「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와 시사점」.

서울재팬클럽. 2009.『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SJC 건의사항』.

서은숙. 2008.「투자협정의 투자증진 효과분석: 한·중·일 투자협정에의 응용」.『대외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수출입은행. 2009.『2008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_____. 2010.『2009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신관호·오용협. 2005.「국내 자본의 해외투자 결정요인: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최근 해외자본유출의 원인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병석. 2008.「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FDI) 전략에 관한 연구」.『관세학회지』, 제9권 제2호, pp. 1～414.

외교통상부. 2002. 12. 2.「한일 투자협정 2003년 1월 1일 발효」. 보도자료.

이문형. 2006.「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글로벌화 전략」. Issue Paper 2006-204. 산업연구원.

이일주·이두원. 2009.「동남아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성과분석」.『동남아시아연구』, 제19권 제1호.

이홍식·신관호·이종화·김형주. 2006.『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생산성효과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9-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영광. 2009.「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의 한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연구」.『무역학회지』, 제34권 제4호, pp. 171～199.

李 娜. 2009.「중국가전업체의 한국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하이얼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봉걸·권철우. 2007.「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기업경영 관련 여건을 중심으로」.『금융경제연구』, 제302호. 한국은행.

정재화. 2008.「한·일 FTA/한·중 FTA의 산업별 영향」. 무역협회 세미나 발표자료.

정행득·이상호. 2006.「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분석」.『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2호, pp. 479～795.

정형곤 외. 2009.『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중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연구보고서 09-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10.『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시리즈 1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 훈. 2002.「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지역연구회시리즈 02-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희석. 2006.「해외직접투자와 거시경제와의 관계」.『산업경제연구』, 제19권 제2호., pp. 725~744.

진아웅. 2009.「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차경자.「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과 시사점」.『무역학회지』, 제33권 제2호.

하병기. 2004.『제조업 해외투자의 평가와 과제: 해외법인의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2006.『한국무역사』.

한도숙. 1996.『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제도의 개선방향』.

홍 림·정강원. 2010.「중국 M&A의 실패사례에 관한 연구」.『경영컨설팅 리뷰』, 제1권 제1호, pp. 43～66.

황윤섭·양진호·금경호. 2006.「상대국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간 관계분석」. 『무역학회지』, 제31권 제5호.

KOTRA. 2008.「주요국별 해외투자진출 유형」.

_____. 2009.「2009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_____. 2010.「제6회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 발표자료.

_____. 2010. 7. 12.「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FDI Theme Report 10-007.

_____.『중국 Grand Survey 2004～2009』.

[중문자료]

中國 商務部. 2004a.『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_____. 2004b.『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

_____. 2009.「2008年度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中国 外商投资企业协会. 2009.『2007-2008年度全国最大500家外商投资企业』.

中国 国际贸易促进委员会. 2009. 4.『2009年中国企业对外投资现状及意向调查报告』.

中国 海关总署·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财政部·商务部. 2005.『第125号令: 构成整车特征的汽车零部件进口管理办法』.

中国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05.『"国家发改委第35号令: 钢铁产业发展政策』.

_____. 2006.『发改工业 2882号: 汽车工业结构调整意见的通知』.

_____. 2009.『国家发改委第8号令: 汽车产业发展政策』.

[일문자료]

日本銀行. 2006. 3.『2005年の國際收支(速報) 動向』.

日本銀行. 2009. 3.『2008年の國際收支(速報) 動向』.

JETRO. 2008.『第13回 対日直接投資に関する 外資系企業の意識調査』.

_____. 2009.『2009年版 貿易投資白書』.

_____. 2010.『在アジア·オセアニア日系企業活動実態調査: 中国·香港·台湾·韓国編』(2009年度 調査).

TDB. 2010. 7. 8. 中国企業による日本企業への出資実態調査. (http://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df/p100702.pdf)

[영문자료]

Anderson, James. 1979.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Gravity Equ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9, pp. 106-16.

Ando, M. and Fukunari Kimura. 2006. “Fragmentation in Europe and East Asia: Evidences from International Trade and FDI Data.” Corporate Strategies in the Age of Regional Integration(Chapter 4). Edward Elgar.

Berger, Axel *et al.* 2010. “Do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Lead to More FDI?: Acccounting for Key Provision Inside the Black Box.” Staff Working Paper ERSD-2010-13. World Trade Organization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Blomstrom & Kokko. 1997. “Regional Integr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Conceptual Framework and Three Cases.” NBER Working Papers 601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Blonigen, B. A. and R. B. Davies. 2000. “The effects of Bilateral Tax Treaties on US FDI Activity.” NBER Working Paper No. 7929.

Brainard, L. 1997.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Proximity-Concentration Trade off between Multinational Sale and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87.

Buckley. P. J. *et al.* 2008a. “Historic and Emergent Trends in Chinese Outward Direct Investment.”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48, pp. 715-748.

_____. 2008b. “The Determinants of Chinese Outward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8, pp. 7499-518.

Carr, D. L., J. R. Markusen, and K. E. Maskus. 2001. “Extimating the Knowledge-Capital Model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merican Economic Review*, 91(3), pp. 693-708.

Chen, Wenlin. 2010. 12. “China's Outward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관련 세미나 발표자료.

Conway, P., D. de Rosa, G. Nicoletti and F. Steiner. 2006. “Product Market Regulation and Productivity Convergence.” *OECD Economic Studies*, No. 43.

Deloitte. 2009. *Japanese Outbound M&A: Targeting Global Growth in Volatile Times*.

Grubert, H. and J. Mutti. 1991. “Taxes, Tariffs and Transfer Pricing Multinational Corporate Decision Mak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3, pp. 285-293.

Head, K., J. Ries, and D. Swenson. 1995. “Agglomeration Benefits and Location Choice: Evidence from Japanese Manufacturing Investment in the Unites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8, pp. 223-247.

Helpman, E. 1984. “A Simpl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with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2, pp. 451-471.

_____. 1985.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Evidence from 14 Industrial countries.”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1, pp. 62-81.

Helpman, E. and P. Krugman. 1985. *Market structure and Foreign Trade*. Cambridge: MIT Press.

Helpman, E., M. J. Melitz and S. R. Yeaple. 2004. “Export versus FDI.” *American Economic Review*, 94(1), pp. 300-316.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10. *Investing Across Border 2010*.

Japan Finance Corporation. 2009. *Survey Report on Overseas Business Operations by Japanese Manufacturing Companies*.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Kim, J. M *et al.* 2009. “Trends and Determinants of South Korea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Copenhagen Journal of Asian Studies*, 27(1).

Kimura, F. and M. Ando. 2003. “Fragmentation and Agglomeration Matter: Japanese Multinationals i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Nort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14(3), pp. 287-317.

Lee, Jong-Wha, Innwon Park, and Kwanho Shin. 2005. “Proliferating Regional Trade Arrangements: Why and Whither?” Working Paper. Korea University.

Lipsey, R. E. 1999. “The Role of FDI in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 Martin Feldstein e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pp. 307-36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 2001.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Operation of Multinational Firms.” Mimeo. Queens University.

Luedi. 2008. “China's track record in M&A.” *The Makinsey Quaterly 2008*, No. 3.

Markusen, J. R. 1995. “The Boundari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9, pp. 169-189.

_____. 1997. “Trade versus Investment Liberalization.” NBER Working Paper No. 6231.

Markusen, J. R. and K. Maskus. 2001. “General-Equilibrium Approaches to the

Multinational Firm: A review of Theory and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 8334.

Markusen, J. R., A. Venables, D. Eby-Konan, and K. Zhang. 1996. "A Unified Treatment of Horizontal Direct Investment, Vertical Direct Investment, and the Pattern of Trade in Goods and Services." NBER Working Paper No. 5696.

METI. 2008. *Survey of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OECD. 2008. *OECD Economic Surveys: Japan*.

_____. 2010. "OECD's FDI Restrictiveness Index: 2010 Update."

Rose, Andrew K. 2004. "Do We Really Know That the WTO Increases Trade?" *America Economic Review*, 94, pp. 98-114.

Shujiro, Urata. 2006. The Creation of Regional Production Network in Asia-Pacific: The Case of Japanese Multinational Corporations. Prepared for PAFTAD 31.

UNCTAD. 1999, 2004, 2007. *World Investment Report*.

USTR. 200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_____. 2004. *2004 Model BIT*.

World Bank. 1993. *Foreign Direct Investment-Benefits Beyond Insurance*. Washington DC.

_____. 2010. *Doing Business 2010: China*.

Zhang, Qi and Lu Gang. 2010. "The Prospects of Expanding Intra-regional Investment among China, Japan, and Korea." 2010년 한·중·일 공동연구수탁연구결과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웹사이트]

외교통상부 조약정보 DB
(http://www.mofat.go.kr/state/treatylaw/treatyinformation/index.jsp)

중국 상무부(MOFCOM) Foreign Investment statistics
(http://english.mofcom.gov.cn/static/column/statistic/foreigninvestment.html)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DB
(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한국수출입은행(online); 해외직접투자통계 DB
(http://keri.koreaexim.go.kr/05_invest/01_statistics)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홈페이지(http://www.ois.go.kr)

CEIC 데이터베이스(http://www.ceicdata.com)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onlin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

JETRO 해외직접투자 DB(http://www.jetro.go.jp/world/japan/stats/fdi)

JETRO Investment Statistics(http://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 2010년 8월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Foreign Investment of Japan(http://www.oecd.org/statistics)

Thomson one DB: M&A Deal statistics
(https://www.thomsonone.com/Workspace)

UNCTAD FDI DB (http://stats.unctad.org/FDI)

World Bank. 2010: *Doing Business Ranking*
(http://www.doingbusiness.org/economyrankings)

Executive Summary

Reviews on FDI among Korea-China-Japan and Strategies for Mutual Investment Promotion

Hyung-Gon Jeong *et al.*

Regional trad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has been increasing and their economic relationship has become more intimate as a result, which implies a deepening economic integration in progress among the three countries. However, the weight of their mutual intra-regional investment is very low as a proportion of their total foreign investment, meaning a strengthening of mutual, intra-regional investment among the three countries is indispensable, as it will help them to overcome differences in their political systems and integrate from the base production level up. In this study, FDI policies and current FDI status of Korea, China and Japan; especially mutual intra-regional investment among the three countries; are examined and obstacles to such investment are identified. Then, various policy suggestions for promoting mutual intra-regional investment are proposed.

The following are the summary of the FDI status of the three countries. First, China has been more actively engaged in FDI than Korea and Japan. Second, while China and Japan are actively utilizing an M&A type of FDI, Korea still focuses on the greenfield type. Third, North America is the main FDI target area for all three countries. While a relatively higher proportion of Korea FDI is geared toward China, China and Japan's FDI weight is tilted heavily toward Western Europe. Fourth, being

the latecomer, China has the fastest FDI growth rate among the three countries. Furthermore, most of the mutual intra-regional investment among three countries is targeted for China while FDI to the other two has stayed at a very low level.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underlying the low level of mutual intra-regional investment among three countries, this study analyzes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the three countries and obstacles to investment. According to the OECD FDI regulation index and the World Bank FDI & Business Environment analysis, all three countries maintain relatively high levels of regulation on foreign equity, with China having especially strong regulations on investment. Various surveys, evaluations and analysis point out that China also has severe restrictions on the scope and type of foreign investment. In addition, difficulties in starting a business and obtaining building permits, rigidity in terms of hiring and firing, high tax rate, and low investor protection all highlight China's un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Korea and Japan have relatively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s; however, there still exist hidden obstacles to business such as negative public views concerning foreign investors, inconvenient distribution structure and commercial customs.

This study also analyzes economic impact of three countries' investment agreement, considering it as one of the important policy issues. As a result, even though three countries have reached a high-level investment agreement, the agreement itself will not directly promote mutual intra-regional investment. Instead, the investment agreement is expected to improve investment environment and encourage investment inflows by raising three countries' reliability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cene and stimulating reconsideration of issues on insufficient legal structure and investment systems.

However, the numerous obstacles to mutual intra-regional investment among the three countries cannot be tackled with institutional remedies such as an investment

agreement alone. While an investment agreement can be utilized to lower China's high institutional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greater effort is necessary to lower unofficial obstacles such as commercial customs and negative public views on foreign investors in Korea and Japan.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policy issues for stimulating mutual intra-regional investment among the three countries. First, three countries' investment agreement should begin with the Korea-Japan investment agreement and progress in stages to transform the agreement into the more liberalized agreement. Second, a common commercial customs, practices and regulation status classified by industry must be shared among three countries by constructing an active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Third, in order for stimulated investment to produce greater economic ripple effects, the technology gap must be reduced, parts and materials should be standardized, and an industry-level cooperation program must be initiated.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목록

■ 2010년

10-01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이홍식

10-02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 현혜정 · 장용준 · 강준구 · 김혁황 · 박철형

10-03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 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 서정민 · 김영귀 · 박지현 · 김정곤 · 금혜윤

10-04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 조미진 · 김한성 · 김민성 · 양주영

10-05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10-06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 윤덕룡 · 오승환 · 김소영

10-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허인 · 이동은 · 이윤수 · 양다영

10-08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 박영준 · 이동은 · 오용협 · 안지연

10-09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 조종화 · 박복영 · 박영준 · 양다영

10-10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 지만수 · 박월라 · 이승신

10-11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 · 중 경제관계 / 이장규 · 나수엽 · 여지나 · 박민숙

10-12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 /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단

10-13 한 · 중 · 일 역내 투자동향과 활성화 방안 / 정형곤 · 이홍식 · 방호경 · 나승권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0-14 일본과 EU의 환경협력 추진전략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판 · 이형근 · 김균태 · 오태현

10-15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김홍종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10-16 한 · 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
이재영 · 이철원 · 황지영 · 파벨 미나키르

10-17 중남미 건설 · 플랜트시장 특성과 한국의 진출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고희채 · 박미숙 · 허경신

10-18 한 · 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김진오 · 권기수 · 고희채 · 박미숙

10-19 한 · 인도 CEPA 이후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
조충제 · 성한경 · 최윤정 · 송영철

10-20 ASEAN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
김태윤 · 손기태 · 정재완 · 이재호 · 백유진

10-21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
박영호 · 한바란 · 정지선 · 주진홍 · 김민희 · 전혜린

10-22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
김태윤 · 손기태 · 정재완 · 이재호 · 백유진

10-23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순철

10-24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조명철 · 김지연 · 홍익표

10-25 주요국의 저출산 · 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 김양희 · 강유덕 · 손기태 · 김은지 · 이현진

10-26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정지원 · 권 율 · 한바란 · 정지선 · 박수경 · 이계우

10-27 전략적 동반자시대의 한 · 러 경제협력 구상 /
정여천 · 황지영

■ 2009년

09-01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정성춘 · 이형근 · 권기수 · 이철원 · 오태현 · 김진오 · 이순철

09-02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 박영호 · 이철원 · 권기수 · 정재완 · 황지영

09-03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 정책 방향 / 최낙균 · 이경희 · 김정곤

09-04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 방안 / 김준동 · 강준구 · 김혁황 · 김민성 · 이성봉

09-05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중·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 정형곤 · 이성봉 · 나승권

09-06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09-07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영향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09-08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 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 송영관 · 강준구 · 금혜윤

09-09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 성한경 · 박혜리 · 남호선 · 양주영

09-10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 서진교 · 최낙균 · 박지현 · 이창수 · 박순찬

09-11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 권 율 외

09-12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 이창재 · 김한성 · 방호경 · 노유연

09-13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 윤덕룡 · 문우식 · 송치영 · 유재원 · 이영섭 · 채희율

09-14 해외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연구 / 이동은 · 송원호 · 오승환

09-15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윤덕룡 · 허 인 · 오승환 · 이호진

09-16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 오용협 · 최창규 · 박영준 · 김연실

09-17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의 모색 / 윤덕룡 · 오승환 · 이호진

09-18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 이승신 · 윤창인 · 박월라 · 여지나 · 배승빈 · 박민숙 · 조현준

09-19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관한 연구 / 정성춘 · 김양희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09-2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 권기수 · 김진오 · 고희채

09-21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조명철 · 김지연 · 홍익표 · 이종운

09-22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 박영호 · 정지선 · 허윤선

09-23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1, 2, 3권) / 이장규 외

■ 2008년

08-01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 김준동 외

08-02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 김상겸 · 유재원 · 한홍렬 · 김수이 · 이상현

08-03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 이장규 · 이준규 · 이승신 · 여지나 · 배승빈

08-04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 최낙균 · 정형곤 · 김한성

08-05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 서진교 · Sherzod Shadikhodjaev · 이경희 · 박지현 · 윤창인

08-06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송영관 · 송백훈 · 강준구

08-07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 정 철 · 김정렬 · 김혁황 · 성한경

08-08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 임혜준 · 김정곤 · 박혜리 · 이홍식

08-09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08-10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 현혜정 · 김혁황 · 박철형 · 성한경

08-11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 조종화 · 강삼모 · 이인구

08-12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
오용협 · 백승관 · 김연실

08-13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
지만수 · 박월라 · 이승신 · 박현정 · 최의현

08-14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
김양희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08-15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
이재영 · 이순철 · 황지영 · 이종문

08-16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이준규 · 김종혁 · 고희채

08-17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원호 · 권 율 · 김진오 · 박수완

08-18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
박복영 · 이계우 · 이순철 · 정지선 · 박수경

08-19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
박영호 · 박복영 · 권 율 · 허윤선

08-20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조명철 · 홍익표 · 김지연

■ 2007년

07-0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흥종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07-0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 · 이홍식 외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07-04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혜정 · 김혁황 · 김민성 · 박철형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07-06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07-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 · 박제훈

07-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 · 이장규 · 박현정 · 여지나 · 배승빈 · 조현준

07-09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구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형곤 · 오용협 · 원동욱 · 나승권

07-10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 · 이형근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 · 최윤정 · 정재완 · Prabir De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 · 채 욱 · 한홍렬 · 신현준

07-13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
박복영 · 채 욱 · 이제민 · 이 근 · 이상철

정형곤(鄭衡坤)
독일 본(Bonn)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독일 쾰른(Köln)대학교 경제학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선임행정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선임연구위원(現, E-mail: hgje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공저, 2008)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중·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공저, 2009) 외

이홍식(李洪植)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 연구팀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現, E-mail: honglee@korea.ac.kr)

저서 및 논문

"Trade Structure, FTAs, and Economic Growth: Implications for East Asia"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4, No. 3, 2010)
"It matters where you go: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mployment growth at Home"(*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91, No. 2, 2010) 외

방호경(方浩慶)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bassgu@kiep.go.kr)

저서 및 논문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및 시사점』(2009)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공저, 2009) 외

나승권(羅承權)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現, E-mail: skna@kiep.go.kr)

저서 및 논문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과제』(공저, 2008)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중·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공저, 2009) 외

연구보고서 10-13

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2010년 12월 27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蔡 旭
발 행 처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 쇄	(주)예원기획 전화: 745-8090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337-8 94320 정가 10,000원
978-89-322-1072-8(세트)

절취선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양재대로 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발간자료 등 제공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Reviews on FDI among Korea-China-Japan and Strategies for Mutual Investment Promotion

Hyung-Gon Jeong *et al.*

한 · 중 · 일 3국 상호간 투자는 3국간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산단위에서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고, 상호간에 외교 · 안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3국간 상호투자는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 · 중 · 일 3국의 경제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호간 투자는 시장확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 중 · 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정책 및 투자현황, 특히 3국 상호간 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보고, 상호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내 상호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02-3460-1001, 1114 F.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ISBN 978-89-322-1337-8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